第303回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 8 號
(定期會) (임시회의록)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11年11月17日(木)

場 所 第2會議場

議事日程

1. 2012년도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o 부별심사(비경제부처)

審査된案件

1. 2012년도 예산안(계속) ····· 1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1
3.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1
   o 부별심사(비경제부처)

(09시00분 개의)

○委員長 鄭甲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기국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을 비롯한 기관장과 관계자 여러분!

평소와 달리 한 시간 일찍 시작된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가 끝나면 전체위원회 차원의 심사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국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2012년도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o 부별심사(비경제부처)

(09시02분)

○委員長 鄭甲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정부 측에서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주당 전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전혜숙 위원 자료요구부터……

○委員長 鄭甲潤 예, 잠깐만……

박병석 위원!

○박병석 위원 민주당 대전 서갑 박병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님과 각부 기관장들에게 요청합니다.

공무원들이 민원과 관련돼서 받은 100만 원 이하의 금품에 관해서 부처에 신고를 하면 상품권

을 나눠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근거와 각 부처에서 어떻게 집행했는가 하는 문제와, 이따가 따져 묻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주는 뇌물을 거절한 것을 가지고 정부부처의 돈으로 보상금을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국민권익위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국민권익위에서 일괄적으로 받으면 되고요.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甲潤 전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숙 위원 민주당 전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대통령실장, 국방부장관, 감사원장, 기재부장관, 문화부장관,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장 나오셨습니까?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예, 고용복지수석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 존함을 말씀하셔야지요.

진영곤……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예, 진영곤입니다.

○전혜숙 위원 대통령실 여비가 전년 대비 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4%가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의 모든 항목이 대폭으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저희가……

○전혜숙 위원 전국 선거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예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겁니까?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민심을 좀더 파악하고 소통을 좀더 강화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늘렸습니다.

○전혜숙 위원 국외여비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국내여비만 는 게 아니고. 특히 항공료보다 숙박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체류 기간을 늘린 이유가 뭐지요?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국외여비는 내년도에 핵안보정상회의를 사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국, 한 오륙십개 국가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전혜숙 위원 그런 회의는 이제껏 되어 온 돈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금 이 정부 와서 나라빚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청와대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서 긴축재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권 마지막에 체류비를 늘려서 마치 여행성 체류로 흥청망청 쓰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칩니다. 자제하시고요.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내년 선거 대비해서 관권선거용이라든가 또 재외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이번에 증액한 것은 원상회복시켜서 감액시키고 작년과 똑같이 긴축재정으로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위원님 말씀하신 선거와 관련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내년도에 특별한 그런……

○전혜숙 위원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국방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6월에 감사원으로부터 천안함 피격사건과 사후대처에 책임이 있는 25명의 공무원과 군인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받은 바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처분조치를 했습니다.

○전혜숙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상세내역을 말씀하십시오.

○국방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에서 9명에 대해서 최종 징계처리를 했습니다.

○전혜숙 위원 어떤 직위에 있는 분들을 했습니까, 주로?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안에는 해당 부대, 2함대 사령부 내에 근무했던 분들도 있고 합참의 작전부서에 근무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 그 사건 당시에 함장이었던 최모 중령은 징계가 유예되어서 지금 해군본부에 근무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전혜숙 위원 그렇게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제가 그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아니, 질의서를 미리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한테는 질의서가 사전에

안 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전혜숙 위원 제가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징계 대상자가 되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원 지적에? 우리 46명의 꽃다운 장병이 목숨을 잃었는데 정작 지휘를 맡았던 책임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자리를 보전하거나 위의 힘 있는 장성들이 승진하고 영전했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감사원 처분을 다 존중을 하고 군에서 과연 작전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이 징계 대상인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징계자로 확정을 했습니다.

○전혜숙 위원 그런데 위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영전하고 승진하고 밑의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만 징계를 받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이번 11월 인사에 승진을 한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물론 해당 부서가 아니라 합참 참모부서에 근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진급에 대한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이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 대한 자질이나 인품 또 지략에 아주 출중한 인물이라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늦었지만 발탁하는 이런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전혜숙 위원 제가 그러면 감사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지휘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취한 조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원장 양건 우선 천안함 사건에서 감사원이 직접 징계요구를 한 것은 아니고 군대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해서 국방부에 대해서 징계를 포함한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인사자료를 통보하는 형식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혜숙 위원 일단 25명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하셨지요?

○감사원장 양건 구체적으로 징계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국방부에게 일정한 재량적 범위를 주어서 인사자료 통보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중에 25명 인사자료 대상 중에서 조금 전에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9명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했고 최종적으로 6명이 징계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도 그중에 13명은 서면경고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나머지 3명은 전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어떤 제재조치는 대부분 다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감사원의 처분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승진된 일부 장성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방부장관께서 나름대로의 아마 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혜숙 위원 우리 영해에서 46명의 꽃다운 장병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인데 46명의 산화에 대해서 누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책임 없는 정부의 행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국방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장관님, 앞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문화부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미명 아래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주변국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고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 중국의 동북공정은 우리 고대사인 고구려사와 발해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고구려사를 왜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일본해 표기를 하면서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이 부분 때문입니다. 고구려 유적지가 이제 관리가 되지 않고,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 유적지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아차산성에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유적이 지금 유실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제대로, 좀 관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 특히 등산로에 있어서 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출토된 유물뿐만 아니라 고구려가 우리나라의 역사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고구려박물관을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우리 대한민국에는 신라사 가야사 조선시대 고려, 나라마다 다 박물관이 있지만 사실 고구려박물관은 없습니다.

○전혜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렇기 때문에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우리 역사상 가장 찬란했고 웅혼했던 고구려의 역사 또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고구려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혜숙 위원 그뿐만 아니라 사실 고구려박물관 건립은 민족의 정신을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재부에서도 예술·문화 부분을 경제논리로만 보지 말고 이러한 정신적, 국가의 정신을 살리는 이런 의미에서라도 고구려박물관 건립에 기재부에서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조금 전의 문화부장관님 말씀대로 역사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들 사업 차원에서 보면 공공박물관 건립사업이 성격상으로는 광특회계에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국립박물관으로 건립을 추진할 때는 부처에 일단 용역을 한번 추진해 보시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혜숙 위원 용역비용 때문에 우리 기재부차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고구려 역사문화체험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기본적으로 역사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동의를 합니다.

○전혜숙 위원 문화부장관님께서는 그러한 소신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보훈처장님 계십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전혜숙 위원 보훈처장님, 국가보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해 드리는 업무입니다.

○전혜숙 위원 내년에는 이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연간 세출예산과 세입예산 다 합치면 한 4조 원 정도 좀 넘습니다.

○전혜숙 위원 지금 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시고 있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전혜숙 위원 저는 이 정도면 한 5년 정도면 이분들께서 상당히 힘들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월평균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정갑윤 위원장, 장윤석 간사와 사회교대)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대상에 따라 전부 다릅니다마는 6·25 참전유공자분들은 월 12만 원을 받고 있고요, 수당으로. 또 무공수훈자분들은 월 18만 원을 수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 얼마 전에 6·25 참전유공자께서 저한테 사연을 보내 왔습니다. '보훈처로부터 참전유공자수당을 12만 원 받으면 약값 9만 원 나가고 나머지 3만 원으로는 담뱃값도 부족합니다. 1년을 모아 봐도 손자 세뱃돈도 주지를 못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선후보 당시 참전유공자들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방안을 추진하셨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참전용사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격상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는데 우리 참전유공자들이 뭉쳐서 찍어 주었는데도 약속과는 달리 우리에게 너무 인색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장님, 이분들이 정부의 지원에 만족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만족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수당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작년에 3만 원을 인상하는 등 획기적으로 인상해서 그분들을 대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 그것이 지금 제대로 인상을 하셨다고 보십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년에 비해서는, 예를 들면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12만 원까지 인상이 되었고 금년에도 지금 다시 추가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 지금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우리나라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그것은 사실입니다.

○전혜숙 위원 저도 보훈가족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처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으면 누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려고 하겠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맞습니다.

○전혜숙 위원 국가적으로 저는 보훈처장님이 그 예산 부족에 대해서 분명히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도 했으니까 만족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아니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전혜숙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거의 상이군경들이 많지 않습니까? 혼자서 지금 거동하기 힘든데 이 도움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조가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부족합니다.

○전혜숙 위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훈처장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그래서 금년에도 중상이 1급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당 인상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우리 정무위에서도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 처장님, 처장님은 보훈가족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정부대변인이 아니에요. '충분합니다,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예결위 회의장에서는요, '우리가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를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해야 기재부에서 말씀을 듣고 증액을 해 주거나 국회의원들이 말씀을 듣고 증액을 해 줄 수 있는데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증액이 되겠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당연히 보훈처장으로서는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서, 6·25 참전용사분들을 위해서 예우를 해 드리고 인상해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나 정부의 여러 가지 현상도 고려해야 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특별히 잘못한다고 하는 그런, 잘 해 주지 않는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혜숙 위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좀 증액해서 1인당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그것은 제가 지금……

○전혜숙 위원 지금 현재 도우미 부분도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것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혜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전혜숙 위원 이렇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명예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올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노후에 명예를 지킬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명예수당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나라를 위해서 공헌하신 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지원해 드리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만 참전유공자 지금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 무공수훈자 관련돼서는 이분들이 참전했다는 이유로 지금 지원을 해 드리자는 그런 취지고 또 무공수훈자는 무공수훈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지원을 해 드리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좀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 공헌도에 따라서 상이등급이 지금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돼 있습니다만 1등급의 경우에 이번에는 수당을 2배, 100%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혜숙 위원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를 위해서 먼저 뛰어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나라를 위해서 희

생한 사람들은 예우를 못 받고 독립운동가 자손들은 모두 형편없는 가정이 되고 자식들 교육도 못 시키는 이런 풍토를 만들어 가면 누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그런 데 대한 예우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문상부 예, 사무차장 나왔습니다.

○전혜숙 위원 투표율이 낮으면 대표성의 문제를 낳을 뿐 아니라 정치 무관심도 고착화시킬 수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전혜숙 위원 선관위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투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문상부 예, 당연한 일이지요.

○전혜숙 위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설치된 헌법기관인데 독려를 해야 하는데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문상부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 어떤 과잉 규제를, 지금 과잉 규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문상부 예?

○전혜숙 위원 과잉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문상부 과잉 규제는 우리 선관위……

○전혜숙 위원 특히 10월 26일 재보선 하루 전날 ‘선거일 투표인증샷 10문 10답’이라는 그 자료를 내신 적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문상부 예.

○전혜숙 위원 이 가이드라인을 왜 만들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문상부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안내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선관위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어쩔 수 없이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비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현 법 테두리 내에서 안내를 한 것입니다.

○전혜숙 위원 투표 독려자의 정치적 성향을 판별해서 규제 단속한다는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누구를 찍으라는 내용이 아니고 투표에 참여하자는 독려조차도 정치라는 딱지를 붙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문상부 우리가 선거기간 동안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투표 당일에는 그것조차도 선거운동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투표에 참여합시다’라고 하면 누구를 찍으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운동입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투표 당일에는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전혜숙 위원 SNS 투표 독려를 유명인이 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한 데 대해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과잉규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문상부 그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인의 잣대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느 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일반 국민이 안다면, 그 분이 하는 것은 유명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명인이라도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운동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혜숙 위원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도 선관위가 과잉규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국회의원의 입을 빌려서 말씀드리는데도 부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문상부 그것은 수용을 합니다.

○전혜숙 위원 선관위가 귀를 닫고 안 들으실 것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문상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2003년도부터 무려 네 차례에 걸쳐서 ‘인터넷 선거운동, SNS를 포함한 선거운동은 허용되어야 된다’ 국회에다가 네 번씩이나 개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저희들은 이것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張倫碩 예.

○전혜숙 위원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委員長代理 張倫碩 감사합니다, 전혜숙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한나라당 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희 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배은희 위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행정안전부 장관님이 안 오셨지요?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차관입니다.

○배은희 위원 차관님이 오셨지요?

질문드리겠는데요, 비교과교원, 제가 질의서를 먼저 드려서 파악은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비교과교원 수당에 가산금을 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비교과교원 중에서 가산금을 받는 교사가 보건교사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영양교사라든지 전문상담교사 이런 분들은 가산금을 못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예, 선생님들은 교직수당을 다 받고 있습니다. 교직수당을 받는데 다만 특수학교에 근무하시는 분, 특수한 근무여건에 근무하시는 교원 분들하고 그다음에 보직교사처럼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한테 가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영양교사 같은 경우 저희가 교직수당가산금을 주지 않고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지 그것을 좀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이것이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가야 되고요……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예, 맞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 규정은 행안부의 대통령령에다가 넣어주어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예, 그렇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교과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 필요성은 전부 다 공감을 했습니다, 위원들도 공감을 하고. 왜냐하면 보건교사는 지금 수당을 받는데 영양교사나 심리상담교사가 못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하는 것에 전부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도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산 편성을 하려고 보니까 보건교사가 될 때는 교육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것이 법이 바뀌면서 이 부분이 급여 문제는 지방재정교부금에 그냥 통으로 가야지, 그것을 국회나 정부에서 심의할 수가 없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회에서 예산 편성하기가 힘든데, 이것이 하나하나 해결해야 되는데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도 국회 교과위 예산심사소위에서는 이것을 정부에서 교직수당, 영양교사나 전문상담교사의 교직수당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라 해서 의견을 냈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행안부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교직수당 '교육 및 연구분야'의 '교직수당'에서 6항에 여기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 이런 항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영양교사 심리상담교사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검토가……

○배은희 위원 두 가지 요건을 말씀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아까 얘기했다시피 특수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학교 같은 특수한 근무여건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그다음에 보직교사처럼 별도의 부가적인 업무가 있어야지 교직수당 가산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양교사의 경우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배은희 위원 보건교사는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보건교사는 주고 있습니다. 보건교사는 추가……

○배은희 위원 보건교사는 두 가지 요건에 다 해당이 됩니까?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추가적인 업무가 보건교사들은 08년도부터 보건과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영양교사도 수업합니다.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제가 자세히 확인을 하라 그랬습니다. 어제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을 해 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배은희 위원 그 부분에 행안부에서 계속 반대의견을 내셨던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수업을 하고 있고 보건교사랑 달리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예, 저희가 확인하

겠습니다, 위원님.

○배은희 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 특수학교는 보건교사처럼 그런 거니까 이미 충족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특수한 임무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보건교사의 예처럼 교육을 담당하고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면 그러면 넣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예.

○배은희 위원 그렇게 규정이 바뀌어져야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고요, 교과부에서도 그것을 교육청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예, 위원님 저희가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배은희 위원 여성가족부장관님, 일하시는데 굉장히 힘드시지요?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여성하고 가족의 일이 사실 여성가족부가 담당하지만 각 부처에 산재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그렇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래서 하나하나 다 챙기시려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렇게 잘 협조가 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그런 인식변화는 강력하게 주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은희 위원 '여성가족부' 그러면 거기에 빠지는 것은 남편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아니, 가족을 하기 때문에 남편도 포함됩니다.

○배은희 위원 가족이 청소년 아닌가요? 남편도……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가족·청소년·여성이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배은희 위원 남편이 빠진 줄 알았는데……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가족 안에 남편도 포함됩니다. 아버지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부 예산은 진짜 다 국민 모두의 예산이라고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도 빠듯한 것 같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장관님이 여성의 각종 위원회 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게 그렇게 비중 있게 각 부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은희 위원 여성가족부 사업 중에서 영아 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2010년 6월에 처음 실시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배은희 위원 그래서 2010년에는 이용실적이 굉장히 미흡했는데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확인한 것에 의하면 9월까지는 집행률이 20%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이게 아시다시피 0세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에 맡기기를 좀 꺼려합니다, 너무 아기가 어리기 때문에 아침에 데리고 나오고 하는 게 부담이 돼서. 그래서 이 아이 돌보미 사업을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다른 보육시설에 맡긴 아동에 비해서 정부 지원이 낮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득가구 하위 70%에 보면 본인 부담이 한 60만 원 정도 되니까 저소득가정에서 이 비용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예, 저도 그게 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아 종일 돌보미 이것과 비교해서 보육료 지원은 그냥 70% 이하에는 전부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배은희 위원 그러면 제도가 형평성 문제에서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내년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작년에 이게 집행률이 낮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구간을 더 만들어서 소득하위 40%에는 10만 원을 정부가 더 지원하는 것으로, 7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 구간을 더 만들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보육시설에 맡기든 집에서 키우든 정부에서는 일정하게 그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해 줘서 같은 비율의 지원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육시설에 맡기는 정부 보육지원비와 같이 아이돌보미에도 같은 단가가 적용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정부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정부 지원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가 줘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배은희 위원 글쎄요, 이게 저는 일단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는 기준 변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보육처럼 70% 이하에는 그냥 일률적으로 75만 원을 주고, 단가는 100만 원으로 하지만 25만 원은 자비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정책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려면 예산이 더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은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제도 개선 가능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지금 한나라당에서 보면 보육에 대해서 0세아를 전면 무상보육 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5세를 지금 전면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4세를 한다는 발표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부안에 따라서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때 이 아이돌보미 사업이 정부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같이 형평성 있게 들어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은희 위원 그러니까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그러면 또 그다음에 예산 따기가 힘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개선 해서…… 이것이 굉장히 좋은 취지로 됐고 현장에서 개인 부담만 좀 낮으면 많이 이용하겠다 하는 요구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부담을 낮추는 것을 반드시 관철을 시키시고, 그렇게 됐을 때 추가소요 예산이 제 계산으로 한 42억 정도 드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42억 예산을 추가로 하셔서 현장에서 정말 이게 잘 정착되도록 추진을, 강력하게 의견을 내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알겠습니다.

○배은희 위원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배은희 위원 예산 배정하고 이 예산이 현장과 괴리된 정책으로 집행이 못 되면 안 되니까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예산 집행이 잘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저희들 전체 지원 기준을 일률적으로 통일하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사업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같이 맞추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은희 위원 영아돌보미나 보육료 지원이나 저는 차별을 둬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다음에 국방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군 병원 관련해서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예산 많이 확보하셨고, 이번에는 그게 없을 것 같지요? 전·이용하는 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이번에는……

○배은희 위원 11년도에 347억을 확보를 하셔서……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했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2012년에도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 외에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인원에 대해서 보충이라든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장비는 많이 확보를, 개선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방사선병, 여기에 뭐라고 그럴까요 전문인력이 아니고 또 무자격 일반병사를 그냥 쓰시는데 이것 의료법 위반입니다. 아시나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알고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어떻게 문제 해결하실 건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현재 자격증을 갖춘 방사선사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금년도까지 68명을 현재 확보하고 있는데 2016년도까지 142명으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단 여기에 수반되는 것이 민간 인력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보수, 또 내부 승진 같은 유인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강구를 해 가지고 이걸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은희 위원 민간인 확보가 안 되면 군의 인력을 교육을 시키셔서……

○국방부장관 김관진 위탁교육.

○배은희 위원 방사선병 자격증을 따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런 예산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군의관 확보도 지금 안 되어 있지요? 결산 때도 제가 지적드렸는데 내년 예산을 60명 기준으로 60명 채용하는데 52억 배정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배은희 위원 그러면 1인당 연봉이 1억도 안 되는데 이래서 민간 의사를 확보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민간 병원 수준으로 보수를 현실화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당면 목표이고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들도 노력을 할 것이고 현재 34명인데 매년 한 30명 수준으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60명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을 52억으로 해 놓으셨어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래서 평균 한 1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러니까 민간 수준 안 되거든요. 민간 수준으로 하시려면 현재 예산에서 50% 더 증액, 26억이 더 증액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은희 위원 그다음에 통일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사업 예산이요.

○통일부차관 김천식 차관입니다.

○委員長代理 張倫碩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마무리하시지요.

○배은희 위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이게 지금 정착기본금이 600만 원으로 계속 몇 년째 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탈북하고 난 다음에 탈북비용이라든지 이런 초기비용이 굉장히 많아서 정착기본금이 이 수준으로 가면 처음 출발할 때부터 영세민으로밖에 출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적인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통일부차관 김천식 위원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착기본금이 초기 정착을 위한 생활필수품 구입 자금입니다. 그런데 물가 상향 수준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상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래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수준으로 좀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관련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저는 의견을 내고요.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차관 김천식 예, 그렇습니다.

○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張倫碩 배은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당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민주당 대전 서갑 박병석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핵심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답변 준비하실 장관님들에 대통령실, 기재부, 보훈처, 문화관광, 통일부, 선관위, 행자부, 국민권익위, 병무청장 그렇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두 분 장관께 질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통령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 우리의 여성 1인이 낳을 수 있는 아이 합계출산율이 1.23명, ‘KDI 조사에 따르면 세계 222개국 중에서 아이 낳는 순으로는 꼴찌에서 여섯 번째, 아이 안 낳는 순으로는 앞에서 여섯 번째’ 이런 기사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저출산의 원인은 뭐 여러 경제·사회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 문제, 또 사회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에 따라서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을 회피하고 또 가치관도 바뀌고 이런 현상들이 총체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육과 교육의 비용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장래를 가름 짓는 결정적인 관건이 두 가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는 양극화로 표현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고요. 단기적으로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 장래·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이 안 낳는 문제와 관련돼서 묻는 겁니다.

저는 이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즉 보육교사들이 질 높은 교사들 그리고 자기의 최소한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우리 보육의 질도 높아지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 그러한 점에 있습니다.

지금 보육교사들의 평균 월급이 123만 원 그리

고 가정어린이집은 101만 원입니다. 하루에 평균 근무시간이 10시간~11시간입니다. 이러한 사태에서 제대로 된 보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따라서 내년부터 0세부터 4세까지의 누리교육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육도 이제 의무보육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수당을 좀 높여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월 5만 원, 3월부터 계상해 왔는데 이것이 10만 원 인상해도 평균 130만 원이 되는 것이고, 가정어린이집은 11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5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을 10만 원으로 높여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차관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저희들 지금 현재 보육시설의 90% 이상이 민간보육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비는 민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건비에 관련되는 사항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주5일제에 따라서 보육교사들의 환경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5만 원씩을 교육환경 개선 비용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 문제는 제가 정책위의장 시절에 기프트카드라는 이름으로 50만 원씩을 준 적이 있어요. 그것이 제도화돼 가는 단계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정도가 아니라 가랑비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다 하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점에서 10만 원 정도의 인상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의 문제인데요. 작년에 3만 원 올렸어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정부가 금년에 한푼도 올리지 않은 것을 제가 정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상임위 증액안으로 3만 원 인상안을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공감을 못 얻느냐, 바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특히 6·25 참전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고 자연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분들에게 살아 계실 동안에 얼마라도 보상을 해 드린다는 것이 확고하다면 다른 것을 줄여야지요.

예를 들면 무슨 낙동강 전투 기념공원 50억, 보훈 호국의 불꽃 32억 이런 조형물을 만들고 기념공원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보훈처가 지금이라도 '내가 이러이러한 예산을 깎을 테니 적어도 자연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유공자들한테는 좀 올려주십시다' 해야 동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훈처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6·25 참전유공자 분들의 수당과 대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보훈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서 6·25 격전지에 대한 그런 기념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것은 같이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지 어느 하나를 죽이고 어느 하나를 강화하고 하는 것은 사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 전쟁 기념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 없애라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6·25 65주년, 70주년 이런 기념일이 있다든가 했을 때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나 지금 국가보훈에 관해서 필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단호하게 결정할 때 설득력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그런 시설, 조형물을 줄이고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게 옳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돼서 문화부장관과 통일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경제올림픽, 환경올림픽, 문화올림픽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평화올림픽입니다. 분단의 상징인 강원도에서 세계적 올림픽이 열리는 만큼 이것을 평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 기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고 18년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남북 단일 훈련팀이라도 만들어서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그리고 화해와 평화 협력의 길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경제올림픽, 문화올림픽, 평화올림픽이 돼서 남북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차관 김천식 통일부차관입니다.

지금 문화부장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그런 논의가 있다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측면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석 위원 저는 통일부의 답변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통일부의 차원을 넘어서 범정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전략상 정부가 앞서는 것보다 민간 조직위원회를 앞세워서 민간끼리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힌 남북의 물꼬를 터야 되겠다, 중국과 미국이 탁구, 핑퐁게임으로 풀었듯이, 한국이 처음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한 것이 바로 테니스였듯이 이것이야말로 막힌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범정부적으로 지혜롭게 접근할 의지를 분명히 하셔야지요.

○통일부차관 김천식 예, 지금 위원님 제안의 취지가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은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자발적 모임인 동계올림픽을 사랑하는 모임 동사모의 활동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합니다.

다음에는 충남도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 행자부차관하고 기재부차관에게 묻습니다.

도청을 이전한 것이 전남도청이 있고 지금 옮기려는 것이 충남도청과 경북도청이 있는데 전남도청은 100%를 다 지원을 했어요. 물론 사정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도청의 경우는 35%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종시의 경우에는 지상 건물뿐만 아니라 지하의 지하주차장을 건물로 인정해서 약간 지급률을 높여 줬습니다.

지방 재정 사정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지방 간의 형평성이라는 점에서 지하 건물을 건축물로 인정하면 다소 숨통을 틀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물꼬를 터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우리 내년도 예산 편성에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주차장이 지금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위 예산 검토 과정에서 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증액 결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결위 차원에서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 기재부차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청사 기준면적 이외의 지하주차장 건설 비용 관련 사항은 추가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과거의 전남도청 이전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특별한, 또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요.

○박병석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100%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의 전례에 따라서 지하주차장 정도만이라도 인정해서 물꼬를 트라는 점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또 하나의 문제는 도청이 이전해 감으로써 대전시가 공동화되는 문제예요. 원도심이 완전히 공동화되고 도청 이전하면 약 4만 명의 인구 유출이 우려되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선거공약으로 이전하는 현 충남도청 부지에 국립현대박물관을 배치해 주겠다고 했는데 무산됐습니다. 서울로 결정됐어요. 대전시는 인수할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 국가의 다른 기관을 배치해 줌으로써 공동화의 우려도 막고,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을 최소한의 약속이라도 지켜 달라 하는 요구에 관해서 행자부와 기재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배치해…… 지금 혁신도시 이런 문제가 다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기관들이 그런 데 배치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있어서 이전작업 추진 중이니까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다른 기관을 또 배치할 수 있는지는 추가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기재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적지 개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또 조금 전에 행안부차관 말씀대로 이미 다른 기관들의 이전계획들이 확정이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관련 기관 간 협

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예, 공약을 100%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면 100% 지키지 않더라도 그것을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적극적 검토를 당부합니다.

다음에는 재외국민 선거와 세종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 관해서 선관위와 행자부의 의견을 듣습니다.

우선 재외국민 투표가 내년에 실시가 되는데 나라도 많고 나라의 제도도 다르고 또 재외국민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투표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걱정되는 것이 투표참가율과 소위 부정투표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 제대로 홍보가 돼 있고 얼마나 참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묻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문상부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확히 몇 %가 참석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난해에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때의 결과에 의한다면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 이런 분들은 전체의 한 70% 정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조사할 당시에는 아마, 이런 제도가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이렇게 어렵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게 나왔는데 그것을 감안한다고 봤을 때 저희들은 재외국민 중에서 유권자가 230만 정도로 볼 때 한 40% 정도가 등록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는 투표에 누락됨이 없이 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 전략과 그리고 부정투표의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를 촉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문상부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또 하나는 이게 세종시의 문제인데요. 세종시의 국회의원선거가 내년 4월에 있는데 지금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광역시·도 간에는 서로 섞을 수가 없고 기초단체를 분할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세종시는 세종시, 충청남도 공주군, 충청북도 청원군이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내년 4월 국회의원선거 할 때 세종시장과 교육감은 뽑는데 국회의원은 안 뽑는다 이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조금만 더 주시지요.

○委員長代理 張倫碩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박병석 위원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추가로 3분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張倫碩 예, 그러면 추가질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자, 그러면 한 국회의원이 충청남도, 충청북도, 그리고 세종시를 대표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선거 관리는 물론 행정조직상도 상당한 문제가 따른단 말이에요. 인구가 1만 명 부족한데 공무원들이 이주하면 내년 7월 이후에는 하한선을 훨씬 넘게 돼요.

따라서 세종시 출범의 근본 취지로 보나 공직선거법의 근본 취지를 볼 때 세종시의 문제는 부칙조항을 들어서라도 선거구를 분리해서 독립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관위와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문상부 예, 선관위 사무차장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선거 관리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개특위 이전에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저희들 의견은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될 때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행안부차관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지금 정개특위가 가동 중에 있으니까 거기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박병석 위원 정개특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와 행안부가 적극적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예, 알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문상부 예.

○박병석 위원 세종시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국회의원 하나를 더 뽑는다, 선거구를 분할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사실상 제2의 행정도시 아닙니까?

내년 7월이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세종시장, 세종시 교육감은 뽑혔는데 세종시의 일부는 청원군을 담당하는 국회의원, 세종시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서로 같이 관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법적으로나 법의 정신으로도 옳지 않다, 따라서 이 점은 반드시 세종시를 독립 선거구로 분리해서 내년 4월에 국회의원을 한 분 더 뽑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문상부 예.

○박병석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소위 병무청의 클린신고 포상금 제도예요. 이게 무슨 제도냐면 내가, 민원 담당자가 나한테 고맙다고 물건을 가져왔다 이걸 신고하면 상품권을 주는 제도예요.

병무청장님!

○병무청장 김영후 예.

○박병석 위원 병무청 걸 제가 보니까 6만 원 상당의 음악 CD를 가져왔는데 그 사람에게 신고했다고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줬고요. 현금 10만 원을 가져왔다고 신고하니까 현금 10만 원을 보상해 줬고 또 양주를 17년짜리 하나 가져왔다 그래서 10만 원을 보상해 줬고 사과 한 박스를 가져왔다 그래서 5만 원을 보상해 줬어요.

아니, 대한민국 공무원이 정당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인이 고맙다고 자그마한 선물을 가져와서 사양을 하면 사양을 했지 그것을 신고하고 돈을 받아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과거에 여러 가지……

○박병석 위원 어디 계세요, 병무청장?

○병무청장 김영후 예, 병무청장입니다.

○박병석 위원 예.

○병무청장 김영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금품 수령했을 때 자진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또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관련법에 근거해서 자체기준을 마련해서 포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지난번 국방위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저희들도 클린신고 제도가 정착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클린신고 포상금 400만 원 편성된 예산을 민간인들에게 지급하는 병무부조리 신고인 포상금에 통합해서 집행하도록 이미 조정을 하였습니다.

○박병석 위원 아니, 6만 원짜리 CD 가져왔다고 신고했다고 5만 원 주고 사과 한 박스 7만 원짜리 가져와서 신고했다고 5만 원 주는 그런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권익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클린신고 제도라는 걸 저희가 만들어서 각 부처에다가 자율적으로 설치를 해서, 클린신고센터를 설치해서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가 상담을 하거나 신고할 수 있게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 정착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저희한테까지는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지만 시간을 주시면 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조금 많이 주시면 조사를 해서 이런 신고제도가 거의 정착했다고 보고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전면 재검토해서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張倫碩 박병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나라당 신상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신상진 위원님께서는 최근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간략하게 인사를 해 주신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위원 성남 중원의 신상진 위원입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 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이 없다고 의견들이 있어서 저를 갑자기 이렇게 사·보임을 해서 참석하게 되었는데 사실 예산 부처 질의가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에서도 나오시고 여러 부처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선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셨나요?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예.

○신상진 위원 인권위원회 예산 중에서 취약분야 인권개선사업에 이주인권증진예산이라고 항목

이 있지요?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예,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게 2011년 올해 2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지요?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예.

○신상진 위원 집행률이 100%지요?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예.

○신상진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을, 지금 또 우리나라가 다문화 그런 어떤 문제가 우리 사회에 앞으로 그런 인권문제가 점차 크게 대두될 수도 있는 조건이고, 또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74%나 되는 경우에 인종 및 피부색에 의한 차별이 심각하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주인권증진예산이 100% 집행률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1억 6000만 원으로 34%가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이해가 곤란한데 인권위원회 자체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더 증액을 했거나 했는데 기재부하고 하면서 깎인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어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 사업예산이 약 50억 정도인데요, 새로운 의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충분히 반영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신상진 위원 제 질문하고 겉도세요.

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까?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예, 그렇습니다.

○신상진 위원 인권위원회가 인권위원회 맞아요? 이주자들이 우리나라에 100만이 넘어서고 굉장히 많은 비중과 사회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또 정부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신경 쓰는 그런 추세인데 인권위원회는 왜 거꾸로 갑니까?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거꾸로 간 게 아니라 다문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사업을 금년에 작년에 벌였던 것만큼 못 벌인다는 것이지, 작년에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신상진 위원 기획재정부차관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것 좀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권위원회에서 안 올라와서 그런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저희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요구를 하면 요구한 부분을 가지고 조정하고, 또 물론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새로운 소요가 제기되면 검토합니다마는 인권위하고 충분히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이슈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소위나 이때 같이 한번 논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상진 위원 증액을 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인권위원회도 말이에요, 전체 예산이 50억으로 적으니까, 또 새로운 사업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전체 예산을 적극적으로 올려서, 이것은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삭감한 게 아니라 위원회 자체에서 좀 소극적인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예,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예,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 다음에 국회사무처 총장님 나오셨나요?

○국회사무차장 구희권 예, 사무차장이 참석했습니다.

○신상진 위원 국회방송의 수화나 자막방송 예산이 대단히 적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회사무차장 구희권 예, 알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증액을 했는데 삭감됐습니까, 아니면 증액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적게 신청을 한 겁니까?

○국회사무차장 구희권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운영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셔서 바라건대 예결위원회에서도 증액된 대로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상진 위원 지상파 방송들은 수화나 자막방송이 100%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국회방송은 5.3%밖에 안 돼요, 장애인 방송 비율이.

○국회사무차장 구희권 예, 알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대한민국 국회에 장애인을 위한 수화나 자막방송이 5%밖에 안 된다는 게 창피합니다, 사실 이것.

○국회사무차장 구희권 예.

○신상진 위원 또 기획재정부에서도 이런 것은 대폭 한 번에 해결해 주세요, 찔끔찔끔 하지 마

시고. 이런 것을 뭘 이렇게, 이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대단히 적은 예산인데 기획재정부도 이런 예산 좀 어떻게, 계수조정소위에서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잘 해 주시겠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저희들 개별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전부 증액을 하면 아마 엄청난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될 겁니다. 이 모든 부분들은 전체 총량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각 개별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애고 꼭 필요한 부분이 반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신상진 위원 기획재정부는 전체적으로 쓸데없는 예산들 쓰지 마시고 요런 예산, 내년도 예산이 1억 5000밖에 안 돼요. 그것을 살림을 전부 다 이렇게 올려주면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진짜 적고 꼭 필요한 그런 데는 앞장서서 오히려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1억 5000인데 그것 두 배로만 해도 향상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국가보훈처장님 나오셨지요?

○국가보훈처기획조정관 이병구 기획조정관입니다.

○신상진 위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제가 매년, 또 작년 예결위에서도 지적했고 계속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올해 참전명예수당 월 12만 원을 15만 원으로 증액해서 올렸지요? 보훈처도 다 동의하고 부처도 같이 인정한 거지요?

○국가보훈처기획조정관 이병구 예, 그렇습니다.

○신상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보상금 전체 보훈보상금이 한 2조 9000억, 거의 3조 정도 되는 금액이 됩니다. 그중에서 명예수당 형태로 나가는 게 퍼센티지가 10%를 넘어서기 때문에 저희들 기획재정부 차원 이런 부분보다도 보상금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하는 전체적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전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차원으로 가신다면 보상금 체계를 다른 차원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보면 1급과 6급, 1급에서도 1항·2항·3항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은 이번에 특별수당을 100% 인상을 해서 저희들 정부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상금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먼저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상진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예결위 했고 또 제가 초선일 때도 몇 년 했는데 늘 똑같은 입장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부처가 그렇게 시원찮습니까? 매년 답변이 보상 체계를 만날 새로 검토한다, 검토해야 된다 하는데 매년 똑같은 답변입니다.

차제에 총리실 산하가 됐든 한번 이 보상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TF들을 구성하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금전적 보상과 명예를 포함한 예우에 관련되는 사항을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지원 제도를 바꿔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보상에 관련되는 금전적 지원에 있어서도 국가의 공헌에 따라서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체계를 가져가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신상진 위원 그리고 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참전해 가지고 고엽제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들에 의해서. 보상을 또 어떤 면에서 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역사적으로 인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정을 하시고, 그런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드리는 것은 개별적인 어떤 피해에 대한 보상 부분하고 또 참전유공자하고 무공수훈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엄격하게 구분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신상진 위원 예, 좋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그리고 또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은 다른 차원에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상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참전명예수당, 참전이라는 것 자체가 갖는 대한민국의 그런 6·25와 또 베트남 참전이라는 큰 그런 전쟁에 참여했던 부분에 대한 명예를 높이기 위한 그런 수단과 방법을 대단히 앞으로 강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요전에 베트남 참전 용사는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못 받았는데 그게 몇 달 전에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해서 유공자로 인정이 됐는데 왜 그것을 10년 전에, 20년 전에 못 했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재정부의 모든 그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참전 명예에 대한 진짜 진정한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그것은……

○신상진 위원 다음에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법무부장관입니다.

○신상진 위원 화학적 거세 올해 7월부터 시행하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신상진 위원 그런데 케이스가 없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왜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 요건이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고, 아직까지 하나도 없는데 지금 현재 한 사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예, 그 선정 기준이 까다로운 점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선정 기준을 보면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자'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성폭행 범죄자' 또 '2회 이상 아동대상 성범죄자' 이런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범죄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신상진 위원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루에 20명 꼴로 아동 성폭행범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한 적용 대상이 1명도 없다, 이것은 법무부가 이 법은 우리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또 시행이 되는데 올해 2011년 예산은 약물 치료비만 5000만 원 그리고 2012년에는 2억 원으로 지금 정부안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는 40명, 올해는 한 10명,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범죄율이 높은 경우에 비추어 봐서 여기에 대한 집행의 의지가 굉장히 없다, 그리고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다면 법이 통과가 안 되어야지요.

그리고 법이 통과됐고 또 선정 기준까지 다 시행령에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런 아주 성에 대한 인권 그런 부분을 총체적인 인권으로까지 해서 그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법무부 입장이 뭡니까, 근본적으로?

○법무부장관 권재진 법무부 입장이……

○신상진 위원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까, 화학적 거세를?

○법무부장관 권재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부에서 화학적 거세를 도입을 해서 약물치료 제도를 시행 중인데 현재 심사 중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인권침해적 요소의 고려 때문에 법이 통과 안 된다는데 사실은 인권침해적 요소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최소화하고 사회를 성범죄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을 전부 다 충족시키다 보니까 시행 초기에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인권 선진국의 사례를 좀 보십시오.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방부장관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방부가 올해 민간 계약직 의사, 2년 기간의 계약 기간을 갖고 있는 의사를 60명 목표로 채용계획이 있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신상진 위원 그것은 지금 군 의료체계가 대단히 미흡하고 또 부족한 것에 대한 아주 전향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신상진 위원 그런데 채용 결과 34명만 채용이 됐어요, 그렇지요, 한 반 정도?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신상진 위원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파악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무래도 민간 병원에 근무하시는 의사에 비해서 보수 수준이 낮아 가지고 그런 것으로 저희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예, 지금 문제가 의료 분쟁 또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요, 중재원…… 그러니까 의료분쟁중재원도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판사 출신의 법조인을 아마 원장으로 채용할 계획인가 본데요.

기획재정부차관님, 이 말씀 좀 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인건비 부분이 너무 적게 책정이 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사람을 못 구할 것 같답니다, 이게. 23년 동안 시행되지 못했던 의료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원 설립이 그런 문제로 또 막혀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도, 보수 문제뿐 아니겠지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텐데 상당히 이 부분이 정책 달성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서울대 출신 의사들을 고용하려고 서울대와 MOU를 체결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신상진 위원 그러니까 채용 결과가 이렇게 낮은 것도 결국은 서울대 출신들만 뽑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타 대학은 지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방식을 고려해 가지고 최대한 고수준의 의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할 텐데요, 보충질의를 안 하고 시간을 좀더 쓰면 안 되겠습니까?

○委員長代理 張倫碩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예결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안 하시고 주질의에 더 하시게 되면 회의 진행이 효율적이지 못해서……

○신상진 위원 민주당에 한 분 해 줬으면 한나라당에도 한 분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張倫碩 조금 전에 박병석 위원은 특별히 예외적으로 양해를 했습니다마는……

○강기정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代理 張倫碩 예.

○강기정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정부 참석자 중에 최시중 방통위원장님 안 오셨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강기정 위원 부위원장님이 와 계신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강기정 위원 그런데 지금 불출석에 대해서 제가 어제, 지금 최시중 위원장……

○委員長代理 張倫碩 잠깐만요, 그 문제는 그러면 조금 나중에 하고 신상진 위원님……

○강기정 위원 예.

○委員長代理 張倫碩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위원 한 분에게 예외를 허용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신상진 위원님, 사·보임돼서 첫 발언이시고 해서 보충질의가 없다는 조건으로 3분 질의를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기정 위원께서 제기한 불출석 국무위원, 정부위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행정실에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정 위원님!

○강기정 위원 제가 하던 말을 잠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張倫碩 그러시지요.

○강기정 위원 최시중 위원장님이 이번에 종합질의, 부별질의 때 거의 자리에 안 계세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저런 이유로 3일 그리고 오늘, 총 7일 중에 한 5일을 어디로 가셨어요.

그런데 16일 어제는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것도 5시까지 했다가 밤 시간에 또 제주도에 행사 있다고 해서 그러셨다 그랬는데 어제 도장 찍으면서 오늘 것까지 슬쩍 내서 우리 여비서가 아무것도 모르고 찍어 주게 됐어요.

부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강기정 위원 오늘 지금 여기 한미 양자 간 장관급 회담이라고 하는, 9~3시까지, 도대체 몇 시

부터 몇 시까지 회의가 있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지금 진행 중이고요, 미국 FCC 위원장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여태까지 온 일이 없는데.

처음 와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오후 2시 정도면 끝이 날 것으로……

○강기정 위원 왜 2시에 회의를 하지요? 끝나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회의하고 오찬하고 회의하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요……

○강기정 위원 회의 진행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줘 보십시오, 제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알겠습니다.

○강기정 위원 좀 주시고, 이것은 저희 여비서의 실수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드릴 말씀이 없고 인정은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자리에 불출석할 때는 제 이름을 쓰거나 시간을 쓰는데 17일 것은 그러지 않고 슬쩍 하니…… 여비서가 알겠습니까? 확인시켜 드리면 여기서 그냥 전화상으로 하는데 그것을 슬쩍 내서 이렇게…… 이런, 참……

○강창일 위원 주의 좀 줘요.

○委員長代理 張倫碩 강기정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위원 프로그램 좀 줘 보세요, 오늘 것.

○委員長代理 張倫碩 방통위원장 일정에 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張倫碩 자세한 일정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委員長代理 張倫碩 자, 신상진 위원님, 질의 도중에……

3분 보충질의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가 최종 끝나지를 않았는데 의사진행발언이 중간에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작년에도 주장을 했던 것인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서 올라왔습니다마는 또 삭감될 것 같아서 류성걸 기획재정부차관께 다시 한번 좀 확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전국의 아동, 그러니까 0세부터 12세까지 필수예방접종 열두 가지가 있습니다. B형간염, 수두, 디프테리아, 백일해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필수예방접종을 안 맞으면 아주 심각한 그런 전염병에 또 아동들에 아주 문제가 커집니다, 국민건강이.

그런데 올해에는 본인 부담을, 보건소에서는 무료고 동네 병·의원 아무 데나 가면 1만 5000원을 본인 부담 1회 비용을 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부처 안은 5000원으로 이게 조정이 됐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출산 문제라든가 또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의, 지금 젊은 층들의 경제적 여건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런 것은 다 아시는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아이들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은 무료로 해 준다, 어디 가서나 다 마음 놓고 맞아라 했을 때 접종률이 굉장히 오른다는 조사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찔끔찔끔 해 가지고 결국 국민들로부터 환영받는 그런 결과도 초래하지 못하는 재정 편성의 그런 철학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전액 무료화를 할 경우에 240억이 추가됩니다.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전체 우리 국가예산으로 비추어 보면 이 사업의 목표 달성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기대감이나 체감도는 굉장히 높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 기획재정부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이게 올라왔는데 삭감할 의지가 있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한민국에서 필수예방접종은 전액 무료로 지금 접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보건소에서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보건소를 통해서 전액 무료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동네 병원을 이용할 때에 본인이 어느 정도의 부담은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백신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액 지금 무료로 지원을 해 드리고, 다만 접종 행위료가 1만 5000원인데 근처의 보건소를 가면 전액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교통비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면 개인도 한

5000원 정도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1만 원을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5000원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계수소위에서……

○신상진 위원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6초가 남아서.

지금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상을 당했을 때 장제급여가 한 50만 원 지급이 되지요?

기획재정부차관께……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지금 장제……

○신상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장시설이 있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 사시는 분이 그 옆 지역으로 화장시설을 사용할 경우는 화장시설 이용료만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수급자께 50만 원 지급해 가지고 이게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증액 부분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그 부분을 잘 좀 기획재정부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張倫碩 신상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정수성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성 위원 정수성 위원입니다.

오늘 국무총리께서도 안 나오시고 대통령실장도 안 나오셨기 때문에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복지수석, 행여 오늘이 어떤 의미 있는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잘 모르겠습니다.

○정수성 위원 오늘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본인은 오늘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해서 순국선열을 비롯한 호국용사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정책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4월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많은 나라에서 보훈처는 부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로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또한 같은 해 5월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민간위원 오찬간담회에서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시켜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 문제는 이미 생각한 바 있어서 그대로 추진하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그 당시에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훈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반드시 보훈처를 부로 승격시켜야만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수성 위원 보훈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내용이 충실하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형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961년도 차관급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이 국가보훈처는 62년도에 장관급 승격, 98년도에 차관급 격하, 2004년도 장관급 승격, 2008년도 현 정부 들어와서 또 차관급으로 격하, 승격과 격하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100만 보훈가족이 원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성 위원 우리가 G20, 세계 공동의장국 회의도 하고 하면서 선진국의 대열에 곧 들어갈 거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보훈조직의 장은 전부 장관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무총리실 소속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할 때 카운터파트너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훈대상과 업무영역은 점차 확대되는데 보훈조직과 인력은 오히려 축소됩니다. 그래서 양질의 보훈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보훈가족들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홀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인식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존경과 추앙의 대상인 희생과 공헌의 그 가치가 낮게 평가된다면 누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로 승격하는 문제는 대통령께 한번 건의해 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예, 지난번에 정운찬 총리께서 국회에서 답변도 하셨고 정부 내에서 검토도 이루어진 바가 있고 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성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대통령께 건의를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입니다.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보훈처를 부로 승격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에서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안에서도 그동안 검토가 이루어진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검토……

○정수성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수석께서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결심할 문제는 아니니까 가서 그 뜻을 잘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기재부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주 국립박물관 내진보강공사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75년도에 준공해서 올해 36년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매년 150만 명 이상 관람객이 오는데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시급한데 내진성능평가 결과 최하위급인, 특히 경주 박물관 고고관은 내진 평가에서 E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진 발생 시 굉장히 안전에 문제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진 등의 재해·재난 발생에 국보, 보물 등의 유물뿐만 아니라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정을 해당 상임위 문광위에서 알고 검토해 가지고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38억 원을 순증하자는 것을 의결했는데 어떻게, 기재부에서 상임위 수정안대로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이번에 말씀하셨던 지진 관련 사항들은 안전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지난 소관 부처인 문화부로부터 내진 평가가 8월 말에 이렇게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는데 이 부분은 금액은 어떻게 되더라도 단계적으로 내진에 관련되는 사항은 보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수성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문제입니다.

보훈회관은 자유 수호의 상징으로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친목과 단합,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로 230개 시군구 지회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현황을 좀 확인해 보니까 전체 37%인 85개 지회에 단독 건물이 있고 나머지는 지자체 눈치를 보면서 무상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훈회관을 보유하고 있는 85개 지회를 확인해 보니까 33개 지회가 20년 이상 건물이고 또 30년 이상 된 건물이 9개소, 40년 이상 된 건물이 4개소나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 주지 못 할망정 적어도 눈치를 보며 부끄럽게 하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저희들 보훈회관은 지속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회의 경우에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성 위원 방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형공격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미래 우리 육군은 병력과 부대 수는 감소하는데 반해서 각 제대별로 담당하는 책임지역은 오히려 더 넓어집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동성과 화력이 우수한 무기체계를 적정 수준으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우리 한반도는 70%의 산악과 20%의 도심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이러한 지형에서 신속한 기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헬기전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육군이 보유한 공격헬기는 상당수가 수명주기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수년 내 필수소요 이하로 감소될 뿐만 아니라 헬기의 노후화로 사고 위험도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수년 전부터 신형 공격헬기를

확보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대형공격헬기는 언제부터 사업을 추진했고 몇 년째 순연된 사업입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제 기억으로는 1990년에 처음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간에 한국형 헬기를 개발한다 아니면 획득정책이 변하고 뭐 이래 가지고 두세 번 이렇게 연기가 계속됐습니다.

○정수성 위원 이번에 156억 원이 정부안으로 됐는데 이것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대형공격헬기 사업은 더 이상 순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의 공기부양정 위협이 증가되고 있어서 우리 군도 이제는 대형공격헬기를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렇습니다. 정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성 위원 기재부차관께서는 참고해서, 참고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저희들도……

○정수성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전투예비탄약입니다.

전시에 군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하는 전투예비탄약의 확보 목표는 얼마이고 현재 우리 육군은 어느 정도 전투예비탄약을 확보했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글쎄요, 그렇습니다.

○정수성 위원 해당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문제 있다 없다 이것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탄약은 비공개 사안이라서……

○정수성 위원 문제 있다 없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비교적 지금 낮은 수준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수성 위원 현재 육군의 전투예비탄약 확보량이 목표치 대비 많이 부족하고, 특히 우리 군 주력 포병전력인 K-9 자주포용 신형 탄약의 확보 수준이 매우 저조합니다.

신규 무기 개발에 예산을 지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무기에 쓸 탄약을 확보해서 무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감사원 09년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지상군 탄약 부족으로 인해 전시 작전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탄약 조기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죠?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렇습니다.

○정수성 위원 그리고 특히 지난 11년 UFG 훈련 당시에도 탄약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렇습니다.

○정수성 위원 그래서 전시 소요 대비 확보 수준이 저조하기 때문에 작전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전투예비탄약의 확보를 위해서 예산 45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하여튼 재원 확보는 필요하고요. 다만, 재원이 탄약 확보에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재정 능력을 감안해서 이렇게 적정 협의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수성 위원 기재부차관!

지난번에 한 번 질문드렸는데, 뭐 아직까지, 그때는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고도보존육성사업 과목 분리 문제입니다.

지난 7일 종합정책질의 때 고도보존육성사업의 과목 분리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보존육성사업은 대상이 명확하고 사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액계상사업인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서 분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 상임위인 문방위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고도보존육성사업의 과목 분리 필요성을 의결해서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심사 과정에서 고도보존육성사업의 과목 분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지금 저희들 총액계상예산사업 6개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리하는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리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취지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 총액계상예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모든 사업들이 전부 다 개별 과목으로 가버리면 총액계상사업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연 고도보존육성사

업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또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가를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성 위원 그런데 과목 분리가 안 되니까, 총액계상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고도보존사업에 예산 할당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총액계상사업은 국회에서 심의·확정해 주시면 내년 초에 관계부처인 문체부하고 그다음에 또 문화재청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할 때에 많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성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경주국립박물관 문화재수장고가 보관 및 관리를 위해서……

전국의 12개 국립박물관에 문화재수장고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수장률이 95%가 넘었는데……

경주박물관 문화재수장고는 75년도 건립되고 난 다음에 1981년도, 2002년도, 2008년도 세 차례에 걸쳐서 증개축 되었음에도 현재 수장률이 101.7%나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지금 다 전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예산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12억 800만 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 수정안대로 예산이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장고가 부족한 박물관이 경주 포함해서 3개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수장고를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성 위원 시간 딱 11초를 남겨두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張倫碩 우리 정수성 위원님, 시간을 아껴 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나라당 진성호 위원님 예결위 첫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호 위원 서울 중랑을 출신 한나라당 진성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무총리실장께 함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일 중에서 지금도 많은 문화인들이, 잘했다고 평가받는 일이 문화예산을 1% 수준으로 올린 겁니다. 그 당시 박지원 의원이 장관을 지냈는데, 우리 정병국 의원이 장관 되면서 역대 문화부장관 중에서 가장 좋은 평점을 준 사람이 박지원 장관이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외국 사례를 봐도 OECD 국가의 정부지출 대비 문화예산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2배 수준입니다. 2.2%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를 넘긴 지 지금까지, 올해도 약 1.2, 1.3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1.12% 수준입니다.

물론 이게, 문화예산을 늘리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옆에서 봐도 기획재정부의 기준으로 볼 때는 문화예산을 주기 힘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예산의 달인이신 기획재정부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산의 기준이라든지 이게 일반 정부예산의 예산편성 기준으로 볼 때는 애매한 것도 많고 굉장히 주관적인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문화부 공무원들이 이런 예산편성 기준을 세우는 데 좀 소홀히 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병국 의원이 장관이 되어서 올해 예산 수준을 1.5% 수준으로 늘린다고 했을 때 기대를 했지만 올해도 결국 예년 수준으로 묶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화예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여유분의 예산이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새로 성장하는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또 미래성장동력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치인들보다 인기가 높은 쪽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입니다. 문화인들이고 연예인들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정치인들의 경쟁자로서 연예인들의 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어떤 중요도, 물론 이 기준은 애매하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동력을 펼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예산, 특히 문화산업을 선도할 예산은 계속 깎이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 문방위 예산소위가 만든 증액을, 저희들도 상당히 깎았지만 어느 정도 올렸습니다. 이 예산에 맞게 장관들이나 우리 계수조정소위 위원들께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우리나라의 문화예산이 좀 늘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처음에 취임하실 때는 문화예산을 사실은 굉장히 늘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18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을 다루는 이 자리에서도 문화부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최소한 정부재정 대비 1.5%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차관하고 우리 국무총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에서도 재정자립도가 25개 구 중에서 뒤에서 두 번째인 중랑구의 국회의원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예산을 다루다 보면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국회의원이 돼서 저희 지역구 중랑구의 교육예산을 상당히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중랑구의회가 한나라당 의원이 다수였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어서 8%까지 교육예산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강남구 다음으로 교육예산이 많았던 게 중랑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많은 주민들의 소원이 뭐냐 하면 '우리 애들이 좀 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좀 더 좋은 학교에 진학했으면 좋겠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곽노현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에, 그분은 사실 이미지만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분들의 자녀들을 더 잘해줄 것으로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을 했습니다.

저는 무상급식이 재정 여건만 허락한다면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무상급식 예산으로 들어가는 돈 때문에 정작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2012년 예산은 6조 6165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4.8%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으로 1162억 원이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시설, 낙후된 학교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은 452억 7100만 원이 감액됐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은 1100억 78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1100억 7800만 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방과후 학교라든지 원어민교사라든지, 특히 서울에서도 좀 낙후된 지역 학생들의 교육 질을 올리는 데 써 왔습니다.

가령 우리, 제가 뭐 지역을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강남구나 서초구나 재정 능력이 높고 또 잘사는 가정이 많은 고등학교나 중학교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하지 않더라도 학원도 가고 과외수업도 받습니다. 반면에 중랑구나 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학생들은 학원이나 이런 혜택을 많이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을 했지만 지금은 점점 더 어려운 학생들이 좋은 대학교 갈 확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과부나 우리 교육 당국에서 상당히 많은 장치들을 해서 어려운 지역의, 뭐 농어촌이나 서울에서도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이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터 주기는 했지만 지금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곽노현 교육감의 무상급식 때문에 실제 빈익빈 부익부, 못사는 동네의 학생들이 꿈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곽노현 교육감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교육감 1명이 바뀌어서 이렇게 서울시의 교육 질이 확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무총리실이나 기재부가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냐, 아무리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돼 가지고 서울시의 우리 학생들, 우리 꿈나무들이 꿈을 잃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실장 임종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환경을 잘 조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관계부처와 함께 실태 파악을 해서 강구될 수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성호 위원 여기에 서울시장도, 우리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신 이후에 무상급식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구청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이것은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은 더 깎이게 됩니다.

기재부차관님, 이런 경우에는 총리실이나 기재부에서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지방자치단체인 교육청이 의사결정을 하고 지방의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내국세의 20.27%에 해당하고 또 교육세 전액 합치면 내년 경우에는 38조 3000억 정도 되는 규모로 교육재정교부금이 16개의 교육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교부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인 교육청이 일반 지자체인 서울시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지,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항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교육환경 개선에 지원이 줄어든다면 관련되는 주민이라든지 또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내부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진성호 위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100년 만의 기습폭우라고 하는데, 지금 초·중·고등학교를 한번 들러 보시면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비가 새고 이런 학교가 부지기수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후변화 이런 데 대해서 이런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작 자신의 자녀들이 밥 먹는 걸 낼 돈은 있지만 비 새는 교실에서 공부하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교실에서 공부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예산 편성 같은 것은 불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답변을 할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전체적인 재원 중에서 교육특교라는, 교육특별교부세 교부금이지요, 교부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나중에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호 위원 예.

행정안전부차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예.

○진성호 위원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 시장이나 나경원 후보나 공통적으로 내세운 공약 중의 하나가, 서울의 어디에 살든지 똑같은 어떤 복지수준이나 또 똑같은 어떤 혜택을, 최소한의 혜택은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다녀 보시면 아주 60년대 모습을 갖춘 곳들이 있습니다.

차관, 지금 서울에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자료를 안 갖고 있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진성호 위원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잘사는 아파트촌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아서 월동비가 싼데, 못사는 지역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서 연탄·등유 등을 쓰기 때문에 약 서너 배가 듭니다.

자, 이런 곳이 있으면 없애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예, 그렇습니다.

○진성호 위원 저희 중랑구 지역에 신내동, 일명 새우개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직도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것도 그렇지만 아예 도로 같은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곳을 개발하는 데에는 이건 토건사업이라고 투자하지 않고, 복지는 늘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잘사는 집 자녀가 무상급식 하는 돈으로 이런 곳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代理 張倫碩 예, 답변만 들으시겠습니다.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자치단체에서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협의를 요청해 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호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질의할 테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張倫碩 진성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당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강창일 위원입니다.

외통부차관 나오셨어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예, 1차관 나왔습니다.

○강창일 위원 장관한테 질의하려고 그러면 늘 차관이 나온단 말이야. 할 수 없지.

독도, 우리 땅이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예.

○강창일 위원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하면서 되찾아 온 땅이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맞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예.

○강창일 위원 국제분쟁 지역입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그렇지 않습니다.

○강창일 위원 않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예.

○강창일 위원 일본은 분쟁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분쟁지역이 아니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런데 멀쩡한 자기 자식 가지고 재판 가겠다고 하면 응하면 안 되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물론입니다.

○강창일 위원 그런데 왜 외통부에서 '국제분쟁에 대비한 예산 편성' 했어요? 그걸 역발상이라고 하는데 악발상이에요, 악발상.

밑의 실무자들 잘 교육시키라고요, 예? 그게 일본의 논리에 휘말려 드는 게 돼요. 그런 건 국제홍보비라든지 국제공조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돌리고, 고지도 같은 것 모으는 것은 옛날부터 모아 왔잖아요? 자료수집 이래야지 뭐 '국제분쟁에 대비한 예산', 그래서 한번 언론에 두드려 맞았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예.

○강창일 위원 왜 그런 식으로 허술하게 해, 외교부가요, 예? 잘못했지요? 당장 그것 좀 고쳐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잘 알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다음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판결 받았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예, 8월 달에 판결이 있었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래서 지금에야 TF팀 만들고, 하는 시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시늉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지금에야……

본래 말이지요, 잘 아시는 건가요, 1965년 한일협정 맺을 때에 아예 논의조차 안 된 사항이었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예.

○강창일 위원 그것 지금 얘기할 수 있겠어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예.

○강창일 위원 얘기해 보세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위안부 문제하고 원폭 피해자 문제 그런 게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또 나머지 3개.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또 사할린 문제도 있고요, 또 유골 봉환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BC급 전범 문제도 있고 시베리아 억류자 문제도 있고, 그렇지요? 아예 논의조차 안 됐습니다. 때문에 자국민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지요. 일본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제법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게.

그런데 왜 외통부는 가만히 있어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요. 사할린 동포 지원을 위해서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원폭 피해자 문제라든지 그런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해 왔고 또 일본 정부하고도 협조를 해 왔습니다.

○강창일 위원 별로 안 보여요, 안 보여. 어떤 식으로 노력해 왔는지 모르겠어. 예? 지금 위안부 문제 합쳐 가지고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도 하고, 외통부가 나서서 하세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강창일 위원 안 보인다니까. 위안부 문제만 성명서 하나 툭툭툭툭 던져 놓고 나머지 부분은 별로 안 보이는데, 근래에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도 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예, 예산도 저희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예?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예산도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예산 얼마 확보했어요? 예산 턱

도 없이…… 내가 지금 거꾸로, 예산 제대로 확보해서 제대로 일하라고, 외통부 좀 도와주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예산 협의 과정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외통위 예산 소위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또 우리 예산 당국하고 또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강창일 위원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강창일 위원 얘기 들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강창일 위원 싹둑싹둑 자르지 말고 그런 것에 좀 제대로 해 주셔야지요. 예?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잘 검토하겠다고, 잘…… '잘'자 붙였어요. 그 검토가, '잘'자 붙였지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라는 취지입니다.

○강창일 위원 검토를 잘 하겠다는 게 무슨 뜻이야?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잘 하겠다는 뜻입니다.

○강창일 위원 '잘 검토하겠다'야, '검토를 잘 하겠다'야?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잘 검토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기재부 분들 만나면 한국말 쓰는 게 이거 한국말인지 딴 나라 말인지 잘 몰라서…… '검토 잘 하겠다'하고 '잘 검토하겠다'하고 좀 뉘앙스가 다른데……

그다음에 문화재청장님하고 그다음에 문광부장관님도……

문광부장관은 우리 한국 고대사의 대가인데,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감사합니다.

○강창일 위원 문화재청장은, 누구 와 있어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여기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문화재청장이 아니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청장입니다.

○강창일 위원 청장은 문화재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지요? 행정……

○문화재청장 김찬 문화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같이 하고 있는데, 행정관료 출신이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충분히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자, 고구려 벽화고분 말이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장윤석 간사, 정갑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창일 위원 남북 공동발굴조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3기가 새로 건설현장에서 나왔는데, 필요성 못 느껴요?

○문화재청장 김찬 위원님 말씀대로 3기가 2010년 그 사이에 발견됐는데요, 그게 공동조사가 일본하고 중국하고는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공동조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북쪽에서도 공동조사를 의뢰해 왔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창일 위원 있지요.

기재부차관, 고구려가 우리 역사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중국에서 고구려 고분 발굴조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동북공정?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고구려사를 자국의 변방 지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강창일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이야말로, 만일 중국하고 북한이 같이 고구려 고분벽화들을 발굴하게 되면 어떤 결과로 진전될 것 같습니까? 큰 예산도 아닌데 왜 이런 걸 잘라요, 기재부에서?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이런 부분들은 역사 관련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또 최근에 사업이 재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러니까 긍정적 검토라는 것은 '잘 검토'보다 한 단계 높은 거예요? 지금 '잘 검토' '긍정적 검토' 말이 틀린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긍정적이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잘 검토’하고 어느 게 격이 높은 거예요?

(웃음소리)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그 부분 뭐 위원님 판단하시지요.

○강창일 위원 고구려 역사가 우리 역사이지요? 고구려는 우리 땅이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이상한 역사 해석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다음에 문화재청장님, 개성만월대 이것도 말이지요, 계속…… 이건 남북 관계가 이전부터 아주 경색되어 가는 와중에서도 인정이 돼 가지고 계속해 왔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런데 계속 증액돼야 되는데 계속 삭감이 됐어요.

○문화재청장 김찬 이게 남북 사업은 독특한 상황에 따른 집행상에 그런 게 있어서 그랬던 건데요.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북이 공동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예산이 감액되면 감액되는 만큼 발굴면적이나 조사기간이 늦어지거나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창일 위원 통조림 말이지요, 통조림 깨 놓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그 속이 다 부패해 버립니다. 문화재라는 건 그런 식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고분 안을 열어 놓잖아요? 빨리 수습해서 원상회복을 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발굴한답시고 깨 놓은 다음에 시간을 끌게 되면 문화재 훼손이 되는 겁니다. 이왕 시작했으면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 삭감이 아니라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문화재청장 김찬 예, 맞습니다.

올해도 그게 훼손된 부분이 서로 보고가 돼 가지고 지금 긴급확인 겸 조사차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강창일 위원 기획재정부차관께서 잘 들으셨어요, 이 말도?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강창일 위원 긍정적으로?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이 부분도 금액에 관련되는 사항은……

○강창일 위원 큰 액수가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금액에 관련되는 사항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최근 사업이 재개되고 또 역사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다음에 국무총리실장하고 행정안전부에 질의하겠는데요.

대일항쟁기 피해조사 및 지원위원회가 있지요?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예,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내년까지 완료되지요?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예,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지금 특히 해야 될 일이 유골 봉환 문제이지요?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예,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지금 러시아 사할린부터 시작해서 남사할린까지 유골들이 엄청나게 방치되어 있지요?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예, 알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러면 미국 공부할 때 말이지요, 미국 정부가 하는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받아들이지 말고 이렇게 돼야지요? 6·25 한국전쟁 때 미군병사 유해 하나 찾으려고 몇십 년 노력해서 찾아오잖아요? 작년에도 한 구 찾아내는 걸 봤는데……

지금 러시아 땅, 사할린 땅, 남사할린 땅에, 일본에도 유골들이 엄청나게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종료돼 버리지요?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법상으로 보면 6개월씩 두 번 더 연장할 수도 있도록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012년, 내년 말까지인데 두 번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강창일 위원 행안부에서는 연장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아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피해조사하고 위로금 지급업무 이런 것들이 저희는 12년 내에 다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창일 위원 자, 그렇게 하려면 그 후에 뒤따라서 예산도 제대로 배정돼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턱도 없어요, 10분의 1도 못 해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

다음에 또 하나는 말이지요, 이런 식의 진실 규명, 과거사 정리, 이런 식의 문제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이 위원장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보은인사 해 가지고 과거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제대로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보은인사 해 가지고 그 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예?

뭐 어디 정치하시던 분이 들어가 있던가요, 어디 한나라당 당원협의회 위원장 이런 분이 들어가 있는가요, 거기에 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아니, 행안부에서 추천해 놓고 뭐 그거 당연하듯이 얘기하면 어째요.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아, 그게 대통령 인사권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창일 위원 추천은 행안부에서 하지요?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예,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다른 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이런 식의, 참 민족사적 의미를 갖는 이런 식의 사업에 말이지요 무슨 보은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그냥 머리가 텅텅 비어 있게 되면 뭐 일이 제대로 되겠냐 이거예요.

방통위원장께 질의하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지금 오신 분은 뭡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부위원장입니다.

○강창일 위원 차장, 처장?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강창일 위원 부위원장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강창일 위원 그 법정분담금 말이에요, 종합편성채널 법정분담금 왜 계상하지 않아요? 봐 줄라고 그래요?

내년에 당장 시행되는데, 종편이 당장 만들어지는데 왜 예산에 계상하지 않냐고, 분담금 배정하지 않냐고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지금 종편은 빨라야 아마 금년 12월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사업이 되겠지요. 그러면 내년에 방송광고액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면 방송광고액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고시율 개정해서 거기에 얼마 이런 것을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통상 그동안에 방송 허가를 해 가지고 몇 년간 대개는 적자가 납니다. 적자가 날 경우에는, 적자가 나는 동안은 좀 유예를 해 줬습니다.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위성방송은 6년, IPTV는 3년 그리고 위성·지상파 DMB 방송은 0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흑자가 나면 바로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할 겁니다.

○강창일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말이지요, 그러면 종편이 내년에 적자나고 하는 객관적 지표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아니요, 지금은 그러니까 적자다 흑자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창일 위원 왜 그런 쓰잘데 없는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특혜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내년에, 앞으로 4~5년 동안 아마 적자 볼 것 같다 이런 식의 투로 얘기하게 되면 특혜가 되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아니요……

○강창일 위원 저희가 볼 때는 내년에 흑자예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내년에 흑자가 나면 바로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할 겁니다.

○강창일 위원 그러면 좀 객관적인, 과학적인 지표를 가지고 예측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에.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그게 방송광고 매출액 산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시작이 돼서 적어도 한 6개월은 지나야 그게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런데 부위원장님의 아까 말씀은 과거에 보면은 몇 년간 적자였기 때문에 운운했기 때문에 특혜가 된다 이거예요. 특혜처럼 비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과학적인 분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객관적 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말이지요, 분석해 놨겠지요? 내년에 흑자인가 적자인가?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강창일 위원 이번 주까지 저한테 자료 보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창일 위원 그걸 보내 주시고, 우리는 흑자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담금이 계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흑자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흑자가 되면, 분석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보내 달라고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특별히 제가 보너스 1분을 드렸는데 안 쓰시겠다니 다행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이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차관입니다.

○이정현 위원 차관, 내년에 우리 수교 기념국 몇 개국입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10주년, 20주년 다 포함해서 한 50개국 정도 됩니다.

○이정현 위원 보통 어떤 단위로 합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10주년 단위로 그거해서……

○이정현 위원 10주년 단위로 하는데 금년에 20개국이었는데 내년에 50개국이더라고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것 하면 주로 뭐 합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서 문화행사라든지 학술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게 하는데, 말하자면 주요 국가들이 내년에 어디가 해당돼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첫째, 미국이 130주년이 되고요. 중국이 20주년이 되고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50주년 그리고 중남미 쪽에 50주년 나라가 15개국이 되고요. 또 중앙아시아 나라가 20주년 되는 나라가 한 5개국 더 있습니다. 등등해서 한 50개국이 됩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가 한류의 우수성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인데, 돈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돈 어떻게 마련합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돈을 좀 마련했습니다마는 조금 힘이 든 측면도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자, 기념국은 2.5배로 늘었고 미국·중국을 포함해서 큰 나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예산은 보니까 67%가 늘었어요, 기념국은 250%가 늘었는데 예산은 67%.

이것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나머지는? 대충할 겁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이 부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과 똑같은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서 우리 예산당국하고 좀 더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기재부차관님, 이런 부분 조금 고려가 되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나중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다음에 재외공관, 지금 청사·관저가 없어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데가 몇 개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저희들이 청사, 우리가 공관이 한 170개 되니까요. 그것 한 반 정도는 임차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

○이정현 위원 그런데 시급하게 이전을 해야 될 곳이 있다면서요, 29개?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내년에 예산으로는 다섯 곳만 이전이 가능하다면서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좀 참고 견딜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또 내부적으로 좀 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보안시설에 대한 비용이 지금 13억이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러시아 대사관에 극우파들이 협박 편지를 보내고 아프가

니스탄 대사관에는 로켓포가 떨어지고, 지금 이런 시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시설을 보강하는 문제하고 또 장비를 보충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급한 곳에는 일단 장비라든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최근에 테러라든지 그런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이러한 보안 문제하고 시급한 임차료, 이 부분은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좀 잘 그것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재부차관님, 이 부분도 좀 한번 검토를 더 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저희들 해외 청·관사 국유화 관련되어서는 장기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법안 개정안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신설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문광부차관님 나와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장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장관님, 우리 파리관광문화센터 있지요? 문화원이라고 그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정현 위원 그게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 임대입니다.

○이정현 위원 규모는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이정현 위원 어떻게 작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

○이정현 위원 지하 1층, 지상 1층 건물에 누수·누전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정현 위원 아파트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파리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아주 큰 규모로……

○이정현 위원 지하 5층, 지상 5층, 중국이 구관에 4층, 신관은 지하 4층, 지상 6층으로 되어 있고 넓이는 우리가 245평인데 일본은 2269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지금 파리가 우리 문화 한류의 근원지가 되고 있지요?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문화원, 이대로 이렇게 방치해 둘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저희들이 그것을 늘려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방위 상임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반영이 되어서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현 위원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요, 이렇게 한류 바람을 타고 있고 그 베이스캠프가 되고 있는 이런 데는 좀 신경을 쓰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냥 그 주장만 하고 끝내 버리지 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정현 위원 저는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청장님, 어디 계십니까?

○경찰청장 조현오 예, 청장입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광주 서구에 있는 한 지구대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근무인원이 47명인데 평수가 42평입니다, 청사 평수가요.

○경찰청장 조현오 예.

○이정현 위원 여경들이나 여성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서 인근에 있는 교회에 가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장애인들은 더 문제가 많습니다. 회의실이나 휴게실, 문서고, 샤워실은 꿈도 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47명 근무하는데 42평의 지구대가 있더라고요.

부하 직원들 이렇게 방치해도 됩니까? 현장에 좀 다녀 보시고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경찰청장 조현오 저희 경찰은 지금 말씀하신 금호지구대뿐만 아니고, 어제 정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지구대, 파출소가 적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인근에 있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기관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 그 청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1인당 사용하는 공간은 물론이고 지금 말씀하신 화장실, 샤워실, 세면장 이런 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려고 하는데 저희 경찰이

전국적으로 워낙 관서 수도 많고 소요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경찰청에서 바라는 식으로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여기 보니까 경찰들이 위법을 하고 있어요. 경찰 관련 차들을 그 앞에다 전부 불법 주차를 해 놓고 있어요. 그러고 불법 주차를 단속하러 다니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데 예산이 얼마가 드냐면요, 1억 3000만 원 들더라고요.

47명이 42평짜리 여기서 근무를 하는데 국회의원이 가 가지고 간담회를 하려고 하는데 자리가 안 되어서 서서 했어요, 테이블 하나를 놓을 공간이 없어 가지고.

○경찰청장 조현오 지금 말씀하신 그 파출소는 99년 준공한 건물인데요. 전국 지구대·파출소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열악한 지구대·파출소가 거의 태반 정도는 될 겁니다. 이것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자구책도 한번 마련해 보세요.

거기는 굉장히 요지입디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그것을 팔아 가지고 오히려 훨씬 더 싼 땅을 같은 관내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더라고요. 다양한 방법으로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세요.

○경찰청장 조현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기재부차관님, 제가 가서 봤더니요, 이런 경우는 좀 선별을 해서 해 주어야 되겠습디다. 경찰들 47명이 42평에서 근무를 하는데, 물론 교대로 하기는 하지만, 너무 열악했었습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지금 저희들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올해 새로 신설되어서 관련되는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또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광주의 고검·지검에 근무하는 383명 중에 여성 근무자들이 91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들 위탁을 희망하는 직원이 80여 명이 있는데 이 어린이집 신축이 보니까 검찰청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서울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산업훈련 인센티브지원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것은 열악한 영화 스태프 근로여건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서 전문성 강화하고 기본생계를 보장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반영이 지금 잘 못 됐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외국에도, 프랑스에도 이런 제도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정현 위원 그런데 그 영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한류 붐을 일으키고 있고 각종 영화제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상을 받고 있는 발전하고 있는 우리 영화 그 스태프들이 이를테면 한 영화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실업자입니다, 그다음 찍을 때까지. 그리고 또 찍게 되면 다시 이렇게 하게 되고,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영화발전기금에서 이 사람들에게 적어도 교통비하고 식대, 교재구입비만 대서 영화를 찍고 그다음 찍을 때까지 쉬고 있는 동안에 스태프들이 재교육을 좀 받을 수 있는 아주 최소한, 최소한……

이겁니다. 영화발전기금에서 사실은 30억을 내년에 요구를 했지만 그게 다 안 되더라도 10억, 10억이 안 되면 7억이라도 우선 지원을 해 주면 이것을 마중물로 해서 영화산업, 제작자협회라든가 산업 각 대표들에게 더 추가로 돈을,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최소한의 마중물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것은 영화발전기금의 문제인데, 어때요? 이것 좀 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정현 위원 연간 한 1000여 명이 한 석 달 동안 월 100만 원씩 이것 지원해 가지고 교육받게 하는 건데, 또 마중물만 주면 자기들이 아까 다른 영화산업 쪽으로부터도 기금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이것 꼭 좀 서둘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난번에 최고은 작가 돌아가셨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정현 위원 그리고 나서 뭘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저희들이 예술인복지법을 준비해 가지고 최근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그 시행을 위하여 어떻게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런데 그 예술인복지법이 2012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법 시행을 위한 예산은 아직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방위에서 예술인복지재단의 운영비라든지 복지금고 출연금, 또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사업 예산 이런 것을 문방위에서 위원들이 모두 찬성해서 지금 예결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일단 법이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 꼭 돌아가셨을 때 반짝 관심 갖고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술인들 창작안전망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문광부장관께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언제 완공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원래는 2012년에 하려다가 도청 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2014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해서 몇 % 정도 진행되는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 원래는 12년에 60%, 13년에 90%……

○이정현 위원 그런데 60%가 지금 차질 없이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 예산은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2012년도 완공 예정을 14년으로 연기했는데 14년에도 또 완공 안 하면 정부의 신뢰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적정한 예산 반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2015년도에 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에서 완공이 되게 되면…… 200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죽 해 왔고 중간에 다소의 문제들이 있어서 예산의 불용이나 이런 게 있긴 있었지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많은 아시아 각국 사람들이 와서 들를 수도 있고, 바로 2015년에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또 광주에서 있거든요. 그리고 2014년에는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해서 완공을 해 놓으면 상당하게 여러 가지로 좋은 곳에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차질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또 문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문화산업은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산업이 지금 우리 21세기의 여러 가지 산업 트렌드로 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여태까지는 후기산업사회니 이런 말씀을 했지만 지금 21세기는 그야말로 문화 창조 시대이기 때문에 콘텐츠라든지 또 우리의 전통문화나 이런 것들을 산업화하는 게 실질적으로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제일 첨단적인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국도 무기산업을 국가의 제1 전략산업으로 세워 두고 있다가 문화산업을 함께 동시에 국가전략산업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가장 근간이 된 게 뭐겠어요? 결국은 문화기술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정현 위원 문화기술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서 한다는 게 CT연구원이고, CT연구원에 대해서 오랫동안 광주에서 이 부분을 유치하기 위한 문화중심도시로서의 광주, R&D 특구로서의 광주, 그리고 문화 관련 여러 가지 국가기관들이 나주로 이전해 오면서 서로 연계성이 있어서 CT연구원이 광주에 설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어제 그래서 이 CT연구원이 문방위에서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 법사위로 넘어갈……

○이정현 위원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어떤 변화

가 있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러면 아무래도 여태까지는 CT가 대개 IT 중심으로 됐는데 그야말로 문화 콘텐츠가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진흥원과 다른 대학의 이러한 문화 창조 산업과 관련된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지역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러 가지 고용 그리고 경제 발전, 삶의 질 향상, 일자리, 모든, 그다음에 아까처럼 문화중심도시로서의 광주의 도시브랜드 제고에까지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광주 유니버시아드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어떻습니까, 현재 준비 속도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런데 광주 하계 U대회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난 9월 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늦게 완료되어서 정부 예산이 일부가 반영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결과는 좋은 쪽으로 나왔는데요. 다만 늦어져서 예산이……

○이정현 위원 9월달에 통과됐기 때문에 법안은 금년에 통과된 건데 어쨌든 내년에는 그냥 한 해를 허비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래서 특히 진입도로라든지 경기장 개·보수, 보상비, 시설비 이런 것들이 아마 좀더 반영이 되어야……

○이정현 위원 광주 유니버시아드가 다른 지역에서 개최되는 세계대회하고 다른 점, 준비에 있어서 다른 점이 뭔지 혹시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여기는 특히 있는 시설들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이정현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국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대학교를 포함해서 기존 있는 시설들, 그것도 전라북도 것까지, 광주·전남은 말할 것도 없고 시설을 최대한 이용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모범되는 자세를 감안해서라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뿐만 아니라 저희는 그것을 문화 또는 관광과 연계시켜서 더욱더 아주 축제적인 분위기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 다음에 3D 콘텐츠 제작 지원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3D 영상 보급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퍼센트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정현 위원 퍼센트보다도 이제 스카이라이프에서 전용채널로서 이것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G20 때도 그랬고 세계육상경기도 이것으로 시험방송을 했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소기업들이 영세하게 이 부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이 시장이 워낙 넓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분간 제작 지원의 확대가 전체적으로 필요하고 또 글로벌 시장 개척하는 데도 초반에 정부에서 나서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 그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법.

○이정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3D 제작 지원을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에 대해 문광부에서 그동안에 준비한 입장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래서 중소기업하고 해서, 진흥법안을 지금 제출해서 진흥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甲潤 참고로 이정현 위원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넣어 주라고 그러던데, 질의 많이 하면 빼 버립니다.

민주당의 장세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환 위원 전북 전주 완산을의 장세환입니다.

기획재정부, 문체부, 중앙선관위, 민주평통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남으면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제 질의하는 시간에 편안하게 시

간을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문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장세환 위원 지금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사가 사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승병, 이른바 의승병을 한 1300명 동원해 가지고 왜적을 엄청나게 물리치고 해서 아주 참 유명한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기념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념관이 건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 문화재청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하여튼……

○장세환 위원 문화재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세환 위원 기재부장관, 기재부차관……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차관입니다.

○장세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다가 말씀을 못 들어서 한번만……

○장세환 위원 전북 김제 금산사라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고찰입니다. 그리고 특히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의승병 1300명을 동원해 가지고 왜적을 물리친 곳으로도 유명한데 그에 대한 기념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건립 필요성을 아마 정부 쪽에서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도……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저희들이 이것은, 주무부처가 판단을 일단 하고요, 관련되는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절차를 좀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세환 위원 알겠습니다. 기재부에서도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권도공원 조성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지금 2013년 완공으로 돼 있는데 올해 정부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됐습니다.

○장세환 위원 기재부차관, 이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당초 정부 예산대로라면 2013년 완공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감안이 돼 가지고 상임위에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기재부에서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제가 그 자료를 보겠습니다. 특히 태권도공원 관련돼서는 계획에 맞춰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환 위원 제가 18대 국회 전반기에 문광위원이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인촌 장관 얘기가 '지금은 그렇지만 좀더 시간이 갈수록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해당 부처에서 증액을 지금 또 요구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환 위원 중앙선관위에 질의하겠습니다.

총장께서 나오셨는데, 지금 내년부터 재외국민 선거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행안, 제가 행안위원이니까 그래서 행안위원장이랑 함께 쭉 한번 둘러봤는데요. 나가보니까 정말 투표율이 너무 저조할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제가 볼 때는 1, 2%도 채 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도 동포사회가, 우리 한인 동포사회가 분열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선거 준비를 하려고 하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선거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정파적 이해관계로 분열·대립·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일단 말입니다. 저는……

지금 해외공관에 하나씩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공관마다 돼 있습니다.

○장세환 위원 그리고 우편 투표나 인터넷 투표 이런 것은 지금 허용이 안 되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장세환 위원 저도 가기 전에는 그거 허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걸 허용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기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멉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수송 편의를 도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좀더 증액해서라도 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 교통 편의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교통 편의를 제공할 때는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세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우선 이 선거를 감시·감독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건 현실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선거 또는 불법·편법 이런 것이 난무하는 그런 부정선거가 많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이 공정선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런 선거를 관리·감독하고 감시·예방할 수 있는 인력을 대폭 보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재외선거는 지역이 광활하고 주권이 미치지 않고 그러니까 상당히……

○장세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없으면 못하지요, 이 인력은.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부정·불법 이런 것을 막으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까닥하다가 내년 재외선거로 인해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재외선거는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강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재외선거고 그에 대해서 공정성 확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의 질의와 같이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이 일부 감안되어서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세환 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재외국민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는데 실제로 납세의무도 또 국방의무도 지지 않고 있는 재외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제도적인 문제점, 미비점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외국민들한테 선거권 주는 것이 꼭 타당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 부분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결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세환 위원 제가 아까 사전질의 예고 때 법무부장관 말씀은 안 드렸는데 마침 계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재외국민들 참정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막상 시행해 보려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장세환 위원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인데요. 내년에 만약에 만에 하나 해외 어느 지역에서든지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게 생기면 내년 총선·대선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선거 자체에 큰 영향을 미쳐 가지고 까닥하다 우리나라가 엄청난 혼란으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태가 생기고 나서 법·제도 정비를 한다고 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법무부나 선관위나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그러겠습니다.

○장세환 위원 민주평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이상직 사무처장입니다.

○장세환 위원 지금 민주평통이 해외에서 회의도 많이 하고 있고, 계속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이상직 예, 그렇습니다.

○장세환 위원 그리고 강연도 하고 있고.

그런데 민주평통의 본연의 업무가, 헌법이나 민주평통법에 규정된 본연의 업무는 우리 통일정책 수립이나 통일에 관한 내용들이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이상직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장세환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본연의 업무나 본연의 기능에 위배되는 그런 활동을 한다면 그 활동은 중단되어야겠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이상직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장세환 위원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

런 일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일 날 미국 휴스턴에서 한 강연 내용 알고 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이상직 예, 보고 받았습니다.

○장세환 위원 어떻게 보고 받으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이상직 특정 정파를 유리하게 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앞뒤를 다 자르고 특정 정파가 유리하도록 이야기했다라고 기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환 위원 앞뒤를 다 자른 것이 아니고요, 저도 그 내용을 다 구해서 봤습니다마는 통일정책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 그리고 이른바 진보세력에 대한 비판, 그러한 것 하자고 그런 통일 강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이상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 지도감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사정에 의해서 강연자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사전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세환 위원 저는 말입니다, 지금 내년도의 예산이, 해외나 또는 국내에서 하는 회의 참석 예산이 한 33% 늘었지요? 21억 9000 정도 되던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이상직 해외 부분은 상임위에서 상당 부분 삭감됐습니다. 특히 필요한 부분들이 차세대 위원들 또는 차세대와 관련된 포럼임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선거가 있는 해여서 상임위에서 대폭 삭감됐습니다.

○장세환 위원 좌우간 앞으로 또 그러한 경우가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민주평통이 어떤 통일정책 수립 목적이 아니고 선거 때에는 집권 여당 홍보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꼭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이상직 설립 목적에 범정파적 모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견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세환 위원 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예산을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이상직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세환 위원 선관위 사무총장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11월 3일 휴스턴 강연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관계가 별로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세환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재외국민 선거는 정말 부정선거가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중하게 지금 선관위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장세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甲潤 장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김성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會 委員 경기 화성갑의 김성회 위원입니다.

문광부 장관님!

차관님이 오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조현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장관님 잠시 세면장에 가셨습니다.

○金成會 委員 서울드라마어워즈라고 있지요? 2006년부터 시작된 TV 관련 시상제인데요, 올해가 5년째로 37개국에서 204개의 작품을 출품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서울드라마어워즈가 국제적 위상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서울드라마어워즈는 지금 아시아의 최대 국제 시상제로 자리매김해서 도쿄국제드라마페스티벌이나 또는 상하이 TV페스티벌보다도 오히려 우월한 위상으로 성장

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金成會 委員 그렇게 국제적 위상에 비해서 정부의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산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金成會 委員 내년도 예산이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내년도 예산은 지금 6억으로 책정……

○金成會 委員 6억 가지고 충분히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글쎄, 작년보다는 늘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金成會 委員 작년보다 1억 늘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1억 2500이 늘었습니다.

○金成會 委員 올해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金成會 委員 한 9억 정도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좀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金成會 委員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金成會 委員 이 문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이 부분은 지금 지방비하고 또 자체 부담이 사실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른 사업들을 많이 좀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문화부장관님 말씀하셨듯이 1억 2500을 증액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金成會 委員 좀더 증액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金成會 委員 우리 향방작계훈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金成會 委員 그러니까 우리 예비군들이 자기 지역 방위를 위해서 하루에 6시간 정도 훈련을 하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金成會 委員 그런데 이 향방작계훈련 시에 예비군들한테 급식비가 지원이 좀 안 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주지 않고 있습니다.

○金成會 委員 그러다 보니까 예비군 훈련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대부분 또 저녁을 먹고 약간 심야훈련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훈련에 참여하는 분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실전적 훈련에 많이 제한을 받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급식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현재는 8시간 이상 훈련받는 예비군한테만 식비 6000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6시간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원해 주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야이고 또 민원과 불만이 다소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방위에서도 소요예산 97억을 수정의결해 가지고 반영을 했는데 예결위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會 委員 우리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金成會 委員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재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저희들 정부안에서는 당초에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사실은 요구를 안 해 온 사업입니다마는 시간을 6시간이면서 지원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은 그렇고 다음 13년부터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成會 委員 내년도에 일부라도 국방위에서 수정한 대로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많은 예산도 아닌데 그걸 안 해 준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그러니까 지금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8시간 이상 훈련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金成會 委員 차관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이죠 상식이 통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니까 국가가

조금 약간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부터 좀 상식이 통하는 그런 행정을, 예산 집행을 해 주길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다른 사업 우선순위하고 또 다른 훈련과의 형평성 이런 것을 전부 다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成會 委員 예,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님, 어제 존경하는 권경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K-2 전차 국내 파워팩 개발과 관련해서 이것이 지난번에 문제가, 약간 결함이 생겼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金成會 委員 그래서 이게 1년간 연기가 됐는데, 파워팩이 뭡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엔진과 미션을 결합한 몸체입니다.

○金成會 委員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金成會 委員 우리나라 개발 수준이 현재 선진국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K-2 전차에 소요되는 이 파워팩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데는 현재 독일인데 그 수준에는 약간 못 미칩니다마는 기술개발을 많이 해 놨습니다.

○金成會 委員 상당히 많이 진전이 돼 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신 거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金成會 委員 예를 들어서 기술 수준이 약간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하고 계속 외국 것을 도입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물론 국산을 써야만 차후에 ILS 분야, 즉 군수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 또 유사시에 여러 가지 수리 부속을 조달하는 데도 편리성이 있습니다.

○金成會 委員 여기에 참여하는 중소업체가 얼마나 되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15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金成會 委員 1500개 정도 되는 그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의 예산 지원이 감소하거나 줄어들게 되면 이 중소업체들도 굉장히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金成會 委員 이와 관련해서 우리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金成會 委員 지금 현재 예산을 3000억을 요구를 했는데 466억 원이 감액이 됐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金成會 委員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전차는 말이지요 이게 지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전력무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개발이 돼서 전력화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외국에 이것을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더러 있기 때문에 기재부차관께서도 이것을 좀 증액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그래서 아까 국방부장관님 말씀을 하셨듯이 관련되는 중소기업 그 협력업체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만 지금 파워팩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지금 불확실한 상태기 때문에 좀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金成會 委員 국방부장관님, 의사결정이 어떻게…… 안 되어 있습니까, 아직?

○국방부장관 김관진 운용시험평가가 내년 8월 정도에 종료가 될 예정이고, 이것이 이렇습니다. 만일 여기 운용시험평가까지 불합격이 됐다 할 것 같으면 해외 도입이 불가피한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역시 거기에 또 매달려 있는 협력업체가 120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양산 단계에 있어서는 예산은 역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金成會 委員 그런데 전망을, 운용평가가 지금 합격이 될 것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장관님은?

○국방부장관 김관진 현재로 봐서는 많이 근접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히 종료된 이후에만 정확히 판별이 가능하겠습니다.

○金成會 委員 그래서 예산당국과 이것은 잘 협조를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잘 알겠습니다.

○金成會 委員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金成會 委員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사업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金成會 委員 국내 장애인 등록 선수가 1만 2000명이 되고 있거든요.

이 장애인 전문체육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종목별 선수층 강화를 위해서 장애인 체육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金成會 委員 그래서 장애인 국제대회 개최 지원을 우리 정부에서 계속 해 주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장애인 국제대회가 몇 개나 되는지 대략 파악을 하고 계세요?

8개 대회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金成會 委員 예, 8개 대회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3억 5000만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金成會 委員 8개 대회를 3억 5000 정도로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金成會 委員 그래서 약 5억 정도가 증액된 약 8억 5000 정도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글쎄, 액수는 제가 정확하게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증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金成會 委員 기재부차관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제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토가……

앞으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편성했을 때의 기준이 있을 거고 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거기 때문에 사업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成會 委員 우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증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金成會 委員 행안부장관님, 오셨나요?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예, 1차관입니다.

○金成會 委員 우리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제공된 지역을 뭐라고 우리가 불렀지요?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공여구역이라고 그럽니다.

○金成會 委員 그렇지요, 주한미군 공여구역이라고 부르지요?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예.

○金成會 委員 한국전쟁 이후에 약 50년간 주한미군에게 제공이 되어서 그 특정한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경제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보면서 희생을 감내했지요?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예.

○金成會 委員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다 보니까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예, 하고 있습니다.

○金成會 委員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예, 공여구역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공공용지로 해서 도로나 공원으로 조성하는 토지를 매입할 때 토지매입비의 60% 이상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도로사업에 대해서 한 50% 저희가 국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成會 委員 예.

마찬가지로 우리 기재부차관께 또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경기도 지역에도 보면 주한미군 공여지역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金成會 委員 가장 많이 이런 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경기도의 시도 4호선의 경우 도로 확포장 사업에 내년도 예산 23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18억이 감액이 돼 가지고 5억만 반영이 됐는데요.

그리고 또 시도 13호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12억 원을 요청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벌써 설계용역도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50년 동안 피해를 봤던 지역주

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이게 많이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이런 것을 이렇게 아예 전액 삭감을 하거나 이렇게 과감하게 많은 금액을 삭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지금 시도 4호선 관련돼서 보니까 금년 예산 중에서 대부분이 이월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월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5억만 반영을 했고, 어쨌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 13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도 13호선은 지자체,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반영이 됐고요.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사업추진사항이라든지 또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成會 委員 그러면 단 얼마라도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계용역비라도?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요구를 안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어쨌든 전체적으로 13년 그리고 또 그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金成會 委員 예.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예.

○金成會 委員 지금 오산하고 화성시의 인구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선거를 할 때 2008년보다 지금 화성시의 경우는 20만 명이 증가를 했고 오산시도 약 한 2만 명 정도가 늘어나서 22만 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가 됐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서부경찰서를 새로 만들었고요. 또 최근에는 동부경찰서에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승인을 해 줬지요?

어떻게 됐지요?

이 문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경찰서 신설은 중기계획 세워 가지고 하고 있는데 화성동부경찰서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金成會 委員 그래서 그 인원이 많이 늘다 보니까 새롭게 동탄경찰서를 설립하는 것을……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예, 동탄경찰서 들어가 있습니다.

○金成會 委員 그렇지요?

8월 11일 날 승인을 했지요?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예.

○金成會 委員 그런데 이게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제가 정확한 인원수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金成會 委員 한 57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예.

○金成會 委員 내년도 예산을 44억을 요청을 했는데……

사실 왜냐하면 앞으로 동탄은 동탄2가 개발되면 거기 인구가 30만 명이 또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동부경찰서에서 일부 떨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가 1인당 담당 인구가 1014명입니다. 전국의 6위거든요. 전국 평균 500명의 2배 이상에 달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해서 행안부가 동탄경찰서 신설을 승인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예산당국에서 이것 전액을 삭감을 했는데요.

차관님, 이것도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민생과 관련된 그런 사업인데 이 전액을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저희들 경찰서 분할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신축 관련돼서는 내부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 주무부처인 경찰청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실 요구를 해 오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치안수요라든지 또 관련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成會 委員 예, 이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그래도 우리가 중앙부처가 됐든 광역이 됐든 기초가 됐든 공무원들께서 말이지요, 현장에 대한 감각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여러 가지 사회현상들이,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행정부를 불신하는 모습들이 그

런 데서 나타난 거거든요. 현장을 모르고 탁상에서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얼마나 치안 문제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경찰관들은 오버가 되니까 또 격무를 하게 되고 제대로 하지도 않게 되고 피해는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예산 당국에서, 우리 기재부에서 이건 전향적으로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역시 우리 김성회 위원 앞으로 크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이종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 위원 한나라당 부산시 부산진을의 이종혁 위원입니다.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조현오 예, 청장입니다.

○이종혁 위원 얼마 전에 FTA 시위 도중에 경찰관 발로 짓밟고 폭행한 시위자 처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찰청장 조현오 한 명 검거를 했는데 구속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혁 위원 정당한 법치 수행하고 정당한 공무 집행하는 경찰관을 앞으로 폭력하는 행위, 이건 엄단하셔야 됩니다.

○경찰청장 조현오 예.

○이종혁 위원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이게 방치되면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민주주의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법치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앞으로 엄격하게 이 부분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소위 경찰청의 대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주문을 드립니다.

○경찰청장 조현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든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질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국방부장관께 제가 좀 묻겠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이종혁 위원 이스라엘 정부가 길라드 샬리트 상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무장괴한 단체 하마스하고 1 대 1027 포로 맞교환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이종혁 위원 왜 이스라엘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서……

○이종혁 위원 그렇습니다. 국가가 잊지 않고 있다는 그런 정신이고요,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국민들은 국가가 끝까지 보호한다는 정신이고요, 그리고 국가는 자국 국민의 아픔을 끝까지 챙긴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입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재론의 여지가 없겠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이종혁 위원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국가공동체 구성원인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는 거고,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난번 결산 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국민들로 하여금 나라의 긍지감을 심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국가 경쟁력의 최고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국방부에서 말입니다, 잘 좀 챙기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잘 알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통일부장관…… 통일부 나오셨지요?

○통일부차관 김천식 예, 차관입니다.

○이종혁 위원 김대중 정부 시절에 비전향 장기수 62명을 북한에다 송환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차관 김천식 그렇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때 당시 우리 정부에서 말이지요, 우리의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이 문제와 연계해서 상의·의논한 적 있습니까, 북한 당국하고?

○통일부차관 김천식 그 문제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상의하지는 않았지만 그 후에 계속해서 북한의 국군포로 또 납북자 문제 해결을 계속 촉구해 왔었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러니까 비전향 장기수 보낼 때에는 우리 북한에 남아 있는 우리 국군포로라든지 납북자 문제들은 전혀 언급을 안 했구먼요,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까?

○통일부차관 김천식 그 문제와는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얘기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지금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는 우리 국군포로·납북자 수 어떻게 됩니까?

○통일부차관 김천식 현재 국군포로는 약 500여 분 생존해 계신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납북자는, 전후 납북자는 517명이고 전시 납북자는 8만 명 이상으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거의 정부가 비전향 장기수를 보낼 때, 그때가 우리가 국군포로라든지 이런 맞교환을 할 절호의 찬스였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은 언급을 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 지금 제가 하나 여쭤 봐요. 지금 우리 이명박 정부에는 이 납북자 문제나 국군포로 관련되어져 있는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부 내에?

○통일부차관 김천식 지금 그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돼서 현재 전담 부서를 만들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아니, 이런 것은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결국 뭐냐 하면 이 납치자 문제를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차관 김천식 예,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전후납북자대책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서 보상을 끝냈고요. 지금 전시 납북자 규명과 명예회복에 대한……

○이종혁 위원 아니, 아직 500명 이상 남아 있는 국군포로 문제하고 납북자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 전담부서 설치에 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국민 앞에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통일부차관 김천식 지금 그것 구성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언제쯤 끝내실 겁니까?

○통일부차관 김천식 금년 내로 협의를 해서……

○이종혁 위원 금년 내로 끝을 내면, 전담부서를 설치를 하면 소위 어떤 유의 이분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플랜도 지금 현재 잡고 있는 겁니까?

○통일부차관 김천식 현재 송환과 관련해서는 북한과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 이전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우를 할 것인지 그런 문제들도 국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해야 될 일과 대북 관련해서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이 문제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아주 진지하고도 전격적으로 그리고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셔야 합니다.

○통일부차관 김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아까 제가 이스라엘 정부의 예를 들어 드린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통일부차관 김천식 예, 감사합니다.

○이종혁 위원 그게 국가 존립 이유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통일부차관 김천식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인식하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혁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번 예결위 질의에서 몇몇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고 저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에 횡행하고 있는 종북·친북 사이트 이 숫자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찰청하고 법무부장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경찰청장 조현오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종북 사이트가 127개였는데 그중에서 88개에 대해서는 차단조치를 했고 25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사이트를 폐쇄를 했고 나머지 14개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청에서 지금 처벌할 수 있는 액션에 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혁 위원 이런 사이트·카페 운영자들 신병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청장 조현오 그 정도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국보법 위반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벌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프록시 서버, 해외 서버를 우회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직접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해당 국가 인터폴이라든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서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국가안보가 무너지면 백 가지 우리의 정책이나 지금 논의하는 게 전부 다 무효라고 하는 얘기는, 아무 소용 없다라고 하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의 강력한 단속이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언론자유의 억압 이런 논

리는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은 저는 성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청장 조현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종혁 위원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제가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보면 연봉 1억 4000짜리의 무슨 민간항공기 기장도 있고 병무청 직원, 공무원, 의사, 이 사람들 불러다가 조사를 해 보면 왜 그랬다고 그럽니까? 그것 좀 뒷 배경을 파악해 보셨나요?

○경찰청장 조현오 지금 조사를 했고 했을 때……

○이종혁 위원 아니, 굶주렸고 뭐 그야말로 사회 맨 극단 계층에 있다고 그런다면 또 이런 주장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라도 가겠는데 연봉 1억 4000씩이나 받는 의사, 기장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것을 운영한다고 합니까? 이 뒷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국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찰청장 조현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그런 계층만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가진 계층에 속하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배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철저하게 밝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말이지요 그런 이유가 이것은 뭔가 배후가 있거나, 북한의 배후가 나는 의심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이 무슨 정신병원 환자들도 아니고 월수익이 1000만 원이 넘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게 이게 정상적 사회가 아니거든요.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이 비정상적 사회입니다, 이런 것을 방치해 두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청장 조현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종혁 위원 앞으로 법무부하고 경찰청에서는 이런 특히 친북·종북 그래서 국가안보, 이것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쏘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북조선 인민공화국이 축포를 쏘아 올렸다' 이게 종북 카페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것 엄격히 단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청장 조현오 저희 경찰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치려고 하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제 지역 부산에 관한 얘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께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진구에 보면 개금동에 17만 평 정도 되는 예비군훈련장이 있습니다. 53사단 125연대가 거기에 지금 있고요. 이것 위치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 주변 환경을 지금 알고 계세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환경은 가 보지는 않았는데 도심지에 들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이것 완전 원도심이고 말이지요 주거 고밀도 지역입니다. 아파트로 주위에 빙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런 곳에 군부대와 예비군훈련장이, 제가 제 지역 이기주의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를 테면 예비군 훈련의 성과를 본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부대의 보안을 본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도심지역의 국민의 안전을 본다 하더라도 이것 이 자리에 그대로 둔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정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전국적으로 그런 지역에 위치한 예비군훈련장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대급 예비군훈련장을 연대로 통합해야 되겠다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부산시 개금동 지역 거기도 2016년도경에는 해운대 지역으로 통합하도록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러면 2015년 이전 확정하고 옮겨 간다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를 우리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직 공식화된 게 아니고 현재 계획상으로는 2016년도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를 다 따져 가지고 내년 초에 다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제가 문체부에다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에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계층 간에도 심각하고요. 그리고 또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화 양극화현상도 심각합니다.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문화 소외계층도 문화를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지금 현재 부산이 말이지요 얼마나 문화 불모지인지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400만 가까이 사는 도시에 예술의 전당,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다음에 창의영재교육관, 미래를 위한 투자 그런 쪽의 시설도 부산에는 지금 전무합니다. 그다음에 동물원, 그 흔한 에버랜드 같은 놀이공원시설도 하나 부산에는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제가 다시 국방부장관에게…… 우선 문광부장관에게요.

이와 같은 문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방의 소위 말하는 문화 확충 계획 같은 것들을 정부가 한번 계획하고 정책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최근에 우리가 거기에 국악방송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지금 하이얼리어 미군부대기지 거기에도 공원을 하는데 거기에 국립시설, 문화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국방부장관께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이 개발되는 해운대 남구 이런 쪽에는 지금 현재 도심지가 급격히 발전되면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산 400만에 가까운 거의 대부분의 우리 부산시민들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구시가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전혀 이런 문화시설이나 국민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그 지역의 예비군훈련장 이런 것들이 이전해 가야 할 세 가지의 이유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확충되지 못하는 것은 구시가지에 관련되어져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데도 그 이유가 큽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이유를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그리고 국가의 균형발전,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지방의 소위 말하는 문화양극화의 해소 또 국방정책에 있어 가지고의 효용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원래의 계획을 갖고 계신대로 꼭 확정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잘 알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답변하신 겁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이종혁 위원 그다음에 제주해군기지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묻겠습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마을 예산 이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금년에 계획되어 있던 공사를 제대로 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유는……

○이종혁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국방부나 해군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단체들이 거기에 관련되어져 있는 반대의사를 가지고 공사 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입니까? 어디에 이유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반대단체들이 공사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예산 이월의 이유가 정부 당국, 즉 국방부 해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소위 말하는 불법적 주장을 하는 단체에 기인한 것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예산을 깎아야 된다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에 저는 동조를 할 수는 없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꼭 확보가 되어 가지고요, 조속히 민군 복합형의 소위 말하는 이 항구가 조속히 건설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甲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甲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임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호 위원 대전 동구 출신 자유선진당의 임영호 위원입니다.

김찬 문화재청장님, 문화재청에서는 전통문화의 전승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맞습니다.

○임영호 위원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수관인 풍류센터 건립을 위해서 자체 예산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또 설계를 착수해 가지고 이번 금년 12월이면 설계 완료할 그런 예정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여러 분야 중에서 가장 강점이 있는 것이 문화인데 이런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예,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영호 위원 그래서 이 풍류센터는 무형문화재의 시연·전수·공연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고 그래서 국비 31억 원 이것 지원돼서 중부권 무형문화재 전수와 시연의 중심이 되도록 청장님께서 특별한 지원과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김찬 예, 소위에서 잘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호 위원 기재부장관 안 나오셨나요? 그러면 차관 나오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차관입니다.

○임영호 위원 류성걸 차관님, 충남도청 신축청사비 귀에 따갑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강조를 안 해도, 제가 대충 말씀드려도 이 도청 이전 원인은 국가에서 제공합니다. 1989년 1월 1일 충남도하고 대전광역시 분리했어요. 그래서 다른 행정구역에 도 단위 기관, 단체 사무소가 이렇게 소재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당시에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전을 완료했을 그런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 지원 필요성을 인정해서 특별법으로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고 그 법 제1조에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형평성 문제입니다. 1946년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1963년에는 부산직할시와 경남도, 1986년도에는 광주직할시와 전라남도 이렇게 해 가지고 분리되어 있는데 이때는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없었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전남도청은 현재의 환산가로 얘기하면 한 2243억의 관련 총 이와 같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 사례에 비해서 정말로 충남도청 또 경북도청의 지원은 이 사례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국가가 정한 지원기준을 보면 전남의 경우에는 이사비, 가구 구입비까지 일체를 지원한 사례가 있고 또 지하주차장 설치 이 문제는 충남과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한 지방청사 면적 기준 이것은 지상의 건축물 면적만을 제한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 목적이 과대청사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즘의 건축물은 지하주차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모든 공공청사가 오히려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지하주차장만 설치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최소한 전남과 같이 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비를 모두 인정하든지 아니면 국회 행안위에서 2012년 예산안 심의한 결과대로 관련 법에 의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은 지하주차장 면적을 모두 인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사료되는데 우리 류성걸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이 부분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답변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광역시의 분리는 인구라든지 경제력 변화 등에 따라서 국가 정책적으로 지방행정구역을 구분하는 것으로 청사 소재지 이전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남도청의 예를 드셨습니다만 사실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감정평가액이라든지 또는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작년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는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기준면적이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건축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하주차장을 포함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의 기준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영호 위원 차관께서 여러 가지 논리로 그것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문제에 대

해서 국회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어요. 2011년 결산심사 얼마 전에 진행되었는데 그때도 형평성 문제가 주요 문제로 대두되어서 '이것을 시정하라'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은 바 있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내년도 예산안 부처별 심사에서도 형평성 문제 제기와 함께 지하주차장 면적의 포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충남도나 경북도나 재정자립도가 20%의 아주 열악한 그런 재정여건입니다. 때문에 이 지원 기준을 좀 재검토를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 관련된 사항들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임영호 위원 여기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임영호 위원 세종로 문화부 청사를 국립 근현대사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임영호 위원 있지요?

그래서 문화부 청사를 서울과학관으로 옮겼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임시로 지금 옮겼습니다.

○임영호 위원 이에 따른 비용은 총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액수는……

○임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종시에 문화부가 또 옮겨가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옮겨가야 됩니다.

○임영호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했는데 차라리 대통령의 공약대로,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 출마 시에 공약한 대로 충남도청을 국립 근현대사박물관으로 활용했다면 125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이전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장관님 이것 전형적인 예산 낭비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아마 그것은 여러 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호 위원 국립 근현대사박물관 건립 사업 이것은 2007년 대선 당시 대통령께서 공약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가에서 등록문화재로 지정돼서 매각도 못 하고 그렇다고 대전광역시에서는 재정여건상 이것을 매입할 방법도 없고 다른 사용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도청과 경찰청이 내년부터 이사 가면 도시의 흉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남의 경우 도청사 이전하면서 바로 전임 대통령이 공약사항을 착수해 가지고 지금 국립시설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충남도청 부지 황폐화되고 또 대통령께서 약속을 어겨 가지고 사실상 합리적 대안이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걱정입니다.

장관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청, 지자체에만 미루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뒷짐 지지 말고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래서 저희 문화부에서 충남도청 청사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임영호 위원 예,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임영호 위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사무총장입니다.

○임영호 위원 안 보입니다. 저 끄트머리에 계시는구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권에서는 선거구 문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대한 국회의원을 갖다가 내년 4월 총선에서 사실상 국회의원을 배출을 못 하는 그러한 경우를, 지금 자칫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는데 세종시에 편입된 지역주민들이 자치단

체장과 교육감은 세종시장과 세종시 교육감 이런 것은 이렇게 세종시에 맞는 시장과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은 충북과 충남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그러한 모순이 있어요. 때문에 굉장히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전문가인 사무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세종시설치법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정개특위에서 충분히 그 부분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선거구획정위원이라든지 획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이라든지 정개특위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영호 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세종시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않는다면, 뽑지 않는다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통합해서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25조 규정에 위반되는 거지요?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래서 저희들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런 세종특별시 설치에 관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그다음에 현재 그대로 유지해 가지고 선거를 했을 때의 관리상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임영호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의 경우는 인구가 약 150만 명, 국회의원이 6명입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146만 명인데 국회의원 수는 8명입니다. 울산은 113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6명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투표가치가 실현되고 있는데 대전시의 선거구 증설 이런 문제를 볼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대전시와 광주, 울산의 인구수하고 지역선거구의 비례성의 원칙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구 획정은 현행법이나 판례에서도 인구적 요소와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 인구수하고 시·도 지역선거구수가 이렇게 비례하는 것은 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설을 한다면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영호 위원 사무총장님이 생각할 때는 전문적 식견으로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것은 지금 시도의 인구수와 지역 국회의원 수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영호 위원 국방부장관님 나오셨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임영호 위원 장관님, 예비군훈련을 받는 모든 인원에게 급식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향방 작계훈련 예비군한테 급식비가 지급되지 않는데 이것이 계속 민원이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영호 위원 이것 때문에 예비군훈련 전반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임영호 위원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난에 죽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국방부 참 양심 없다. 2년 고생시켰으면 됐지 최소한 최저임금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나 하루에 일당 12만 원이다. 돈 내놓고 부려먹어."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가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래서 1일 8시간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은 급식비가 나가고 향방작계훈련에 해당되는 6시간은 안 나가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 문제점을 이번에 국방 상임위에서 증액을 시켜 가지고 예결위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잘 부탁을 드립니다.

(정갑윤 위원장, 장윤석 간사와 사회교대)

○임영호 위원 기획재정부차관도 이런 점을 꼭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제가 강조합니다.

기재부차관님,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정부안을 보니까 전혀 계상이 안 됐네요? 그런데 최저생계비 53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증액이 돼도 이것 상당히 어려운데, 또 한 가지 6·25 참전용사님들이 사실 연세가 이제 9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분들의 삶이.

때문에 이번 정무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15만 원으로 또 무공영예수당을 21만 원으로 각각 3만 원 증액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꼭 해결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차관님, 보니까 6·25 자녀 수당, 생활조정 수당 뭐 다른 수당들은 인상된 반면에 이것 인상되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보훈보상금 체계하고 또 명예수당하고 영예수당하고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생활 전체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을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참전했다는 사실만으로 해서 계속 이런 수당 형태의 지급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영호 위원 차관 말씀이 제가 유감인데 사실은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지켜낸 분들입니다. 그 분의 영예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해 줘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에 대한 또는 공헌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최대한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다만 공헌과 관련 없이 참전했다는 사실만으로 또 무공수훈, 훈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서 지원해 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보상금 체계하고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봐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委員長代理 張倫碩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나라당 백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운 위원 감사합니다.

일산의 백성운입니다.

행안부장관님하고 기재부차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접경지역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보호법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위치가 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적으로 아주 낙후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여전히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접경지역의 10개 시·군 강화, 김포, 파주, 고양, 연천, 인제, 철원, 양구, 화천, 고성 이 지역은 정말 아주 이중·삼중고를 겪으면서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말 국회에서 여야가 아주 한 마음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5월에 제정을 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금년 7월에 확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역 주민들은 이제야말로 정부가 우리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예산을 넣는 것을 보면 아주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사업으로 평화누리길 사업, 자전거도로 이야기입니다. 이 접경지역 일원에는 생태·역사 관광지가 많습니다. 이 지역을 연결해서 이 지역 주민들도 궁극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지금 자전거길이 열리는 이 길을 자기들도 지역에 한번 연결 지으면 수도권에서, 정말 서울권에서 사람들도 그 길로 탐방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게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보면 정작 법이 통과되지 않은 작년만 해도 예산이 88억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 예산이요, 내년 사업이지요. 내년에는 도리어 81억 6000만 원으로 7%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약 올리는 것도 아니도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종합발전계획이다, 정말 태산명동을 시켜 놓고 서일필 이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금년 예산에 획기적으로 순증을 해서 원래 사업의 요구대로 130억, 그렇다면 한 48억 4000만 원이 순증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선 맹형규 장관님 견해와 또 류성걸 차관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장윤석 간사, 정갑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우리 행안부 입장은 위원님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지난 60여년 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 왔고 또 많은 희생이 강요돼 왔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특별법도 통과되고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 지역에 대해서만은, 다른 데는 몰라도, 특별한 어떤 배려가 있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백성운 위원 우리 국방부장관님도 이 점에 대

해서는 대변을 해서 정부 국무회의든 어디든 좀 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 지역 주민들은 정말 옛날에 남북이 아주 팽팽한 긴장과 이렇게 했을 때는 주민들도 어느 정도 수인했지만 지금 전쟁 양상이 꼭 접경지역 DMZ 붙었다고 그래서 거기를 완전히 억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먼 장거리포가 발달되어 가지고 수도권이 없이, 수도권 남부인들 북부인들 그게 무슨 전쟁과는 큰 직결되는 사안이 아닌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 규제는 묶고 있는데 그동안의 이런 피해를 생각한다면 이런 특별법이 제정이 된 만큼 이제는 좀 예산 특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접경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군사작전상 개인이 받은 피해를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한다는 의미에서 국방부에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운 위원 이런 요구를 감안해서 류성걸 차관님 답변 한번……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정부에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계획도 확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1년부터, 금년부터 추진 중인 자전거길,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조금 줄었습니다만 계속사업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지원을 하겠고요. 신규로 접경 초광역권 발전 지원사업이 8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금액은 88억에서 163억으로 85%나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또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앞으로 계속 적정 소요를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운 위원 그리고 기재부차관님, 항공안전 융합 이쪽 관련한 연구 필요성 이것이 아주 시급하다고 봐집니다. 항공안전은 아시다시피 금년 우리나라만 해도 1년에 3000만 명 이상 사람들이 해외를 오가기 때문에 교통수단으로서는 필수적이고, 이게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이기 때문에 항공교통안전과 관련해서는 각국에서 아주 자기 나름대로 이 안전연구에 대해서는 매년 기술융합 연구를 시행해 오고 있는데 우리 경우는 이 부분에는 상당히 IT 기술을 접목을 하면 새로운 일자리와 또 새로운 기술, 정말 교통안전 이런 데 효과를 엄청 거둘 수 있는데 실제 우리 교통연구원에 보면 이 분야 기구도 있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인력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좀더 관심과 예산 배려만 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돈도 들지 않고 10억 원 예산 증액을 좀 해 달라 이런 요구도 묵살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위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해양부 항공기 제작 관련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항공사고요인 분석시스템 개발하고 항공관제, 위성항행 등 안전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교통연구원에다가 항공안전 융합연구를 따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을 때 유사·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사·중복성에 관련돼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중복하지 않는다면 반영을 할 것이고 또 유사·중복성이 강해서 이렇다면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더 충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성운 위원 물론 완전 중복이 된다면 전적으로 우리 류 차관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R&D 사업은 조금은 중첩 있더라도 그것을 선을 명확하게 갈라서 사각이 생기는 것보다는 다소 중첩 있더라도 나는 그것이 국가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지금 국토부에서는 중복성이 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백성운 위원 예, 더 봅시다, 앞으로.

문화부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백성운 위원 우리나라 인쇄문화 사업 육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인쇄업체가 1600여 개나 밀집되어 가지고 소재하고 있기 때문도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도 우리 국내 인쇄산업은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과부장관께서 여기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선 문화부장관으로서는 좀 유념하셔야 될 사안 중의 하나는 지금 교과부에서 전자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부 미국 같은 경우에 전자책

으로 도입했을 때하고 종이책으로 했을 때의 학습효과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가 돼 있는데 다시 종이책으로 가야 된다는 걸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는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아무리 IT 기술이 발달이 되어서 학교에서 화면으로 공부를 한다지만 종이책은 그 자체로 매우 소중한 자산이고 애들에게는 특히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과서가 점점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전체 인쇄 물량이 대폭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점도 좀 재고가 되어야 될 분야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인쇄 기술이 앞서 있는데도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마케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산업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작은 홍콩, 싱가포르 규모보다도 우리가 수출 면에서 적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얼마든지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자기들이 수출시장도 개척할 수 있고 이런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또 보면 작년까지도, 재작년까지지요. 6억 정도 늘 지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내년 예산에는 2억 5000만 원 돼 있는 이게, 해외수출 지원 이 분야는 싹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 분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저희들이 좀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더 증액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성운 위원 이것은 같이 좀 노력을 해서 성과가 나왔으면 싶습니다.

인쇄문화산업은 실제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더더구나 요즘 애들이 전부 모바일 이런 데 또 컴퓨터 이런 쪽에 가다 보니까 책을 읽지 않고 전부 그런 화면에만 나가는 것, 이것은 책 읽고 난 뒤의 반응하고 정서하고 기억력 그리고 미치는 효과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인쇄문화산업 이쪽 육성을 위해서 장관님이 특별히 좀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성운 위원 그리고 끝으로 기재부장관님하고 행안부장관님, 아마 직접적으로는 행안부장관님이 되겠습니다마는 소방 업무,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총리께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정부 체계와 관련된 문제인데 저는 아주 심도 있는 정말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방이라 하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렇지요? 자기 집과 자기 공장과 자기 회사가 불타 없어지는 것, 이것을 정부가 막아 줘야지. 때로는 옆집에 불났어도 자기 재산이 타 버리는 경우니까 개인에게 화재를 완전히 맡겨 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업이 소중해도 기업마다 소방차를 다 구입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소방은 국가로서는 가장 기초적인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 치안, 전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국방, 그리고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 줘야 할 서비스인데 이게 꼭 도청이 그 비용의 98.2%를 부담하는 게 말이 됩니까?

과거에 저는 내무부에 근무해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광역 소방이라는 뜻은 그전에 소방서 단위로 기초 시·군의 모든 소방을 맡겼을 때는 대형 화재가 날 때 인근 지원 소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방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광역 소방이지 그렇다고 해서 소방서 신설과 소방장비 구입 등등의 비용 부담의 주체를 도에다가 98.2%나 부담시키는 것은 이건 잘못이라는 거지요.

지금은 어느 시장·군수도, 50만 이상 되는 시의 시장도 소방에 관해서는 예산 한 푼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도 이 예산 넣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에서는 어떠냐? 어떻게 하든지 소방 예산을 억제하려고 하는 게 민선 시장·도지사들의, 다 공히 결과입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에는 소방력이 열악한 상황에 이르겠지요.

우리가 지출 면에서 놓고 보면 정부가 부담하는 분 이런 것은 조금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 소스를 놓고 보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 점은 각국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명확합니다. 프랑스가 국가가 78.4% 부담하고 있고 또 스페인은 국가가 54.7%, 거의가, OECD 평균만 봐도 국가 부담률이 67.7%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아주 기형적인데, 우선 행안부장관님 의지와 방침 이런 걸 좀 제가 듣고 싶고 또 아울러서 예산

관련되지만 이것은 기재부에서도 좀 열린 마음으로, 물론 중앙도 부담하고 동시에 기초도 부담하는 체제가 저는 공히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열악한 소방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 7월 달에 소방기본법이 통과된 게 있습니다. 그게 국비로 소방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한 법이라서 일단 시작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98.2%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나머지 1.8%를 국가에서 하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OECD 국가들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 모두가 거의 국가가 다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반대로 되어 있어서……

○백성운 위원 지방의 98.2%도 도가 부담하는 것도 또 문제입니다. 그 외에 기초도 적정한 부담을 당연히 해야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류 차관님 의견……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좀 전에 행정안전부장관님 말씀대로 관계 부처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에 대한 사항들은 기초자치단체이건 광역자치단체이건 그 부분에 대한 역할과 재원 부담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소방과 지방경찰, 또 지방교육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물론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가 됩니다만 시설세의 소방 분야 세입을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감사원에서도 시도가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 자동차 등 소방시설에 투자하지 않아서 노후화를 초래했다고 분석하고 시도에 시정 권고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역자원지원세를 소방시설에 전액 투자하는 등 시도의 소방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성운 위원 제 이야기는 중앙이 더 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중앙과 도와 시군이 한 3분의 1씩 고루 부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甲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배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 위원 한나라당 대구 중·남구 출신 배영식 위원입니다.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배영식 위원 지난주에도 제가 예비탄약 확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다.

○배영식 위원 내년도 방위력개선비가 그 전년 대비 몇 % 늘어나는지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4.6%입니다.

○배영식 위원 4.6%지요. 그 정도 늘어 가지고는 본 위원이 볼 때 많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주요 무기·장비 획득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 중요성에 비해서 4.6%의 증가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영식 위원 과거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월등히 작은 증가율입니다. 이것 MB 정부에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 달라 하는 걸 지적을 하고, 특히 2010년·11년·12년 이렇게 내려오면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래 가지고는 정말로 우리 방위력 증강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본 위원이 볼 때 국가안보가 없으면 자유민주주의고 경제발전이고 또 무상복지고 이게 다 아무것도 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배영식 위원 또 아시다시피 지난번 천안함 폭침이다, 연평도 포격이다 이런 북한의 만행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재앙을 겪었는데 앞으로도 우발적 도발, 계획적인 도발, 나아가서 전면적인 도발, 이것 우리가 예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배영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야 가릴 것 없이 복지에 빠져 가지고, 포퓰리즘에 빠져 가지고 우리 안보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걸 제가 지적해 드립니다.

우선 지난주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쟁 초기에 들어가는 K-9 자주포 우리 탄약 확보 수준이 정말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군에 애정을 가지시고 국가안보를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탄약 문제는 고가 탄약 또 정밀 탄약일수록 확보지수가 좀 낮고, 구형 탄약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이 도발을 할 적에 대응하기 위한 정도의 탄약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군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해 가지고 충분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영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일부 무기·탄약 확보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보육에 너무 정치권이 매몰이 되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 국가안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공감합니다.

○배영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기획재정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배영식 위원 이제 4대강 사업 거의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금년에 거의 다 끝나고 내년에 한 3200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배영식 위원 지금까지 홍수 이후에 수해복구비로 1년에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평균 한 1조 4000억 정도 이렇게……

○배영식 위원 본 위원이 뽑아 보니까 1조 4000억이 들어갑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1조 4000억 그렇습니다.

○배영식 위원 또 무상급식 하는데 고소득층 자녀들한테 들어가는 무상급식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충 추정치로?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전체 지방비라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배영식 위원 지금 무상급식에 2조 이상이 들어간다는데 그중에 적어도…… 상당 부분이 고소득층 자녀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배영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4대강 사업 끝났고 수해복구비라든지 고소득층에 들어가는 이런 소위 무상급식비라든지 이런 돈을 우리 국가 안보, 소위 방위력 개선, 전력 운영하는 데 더 투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국방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배영식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복지, 복지 하다가 지금 구라파 재정 거덜 나는 것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그런 나라하고 달리 특수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정책의 우선순위가 안보에 집중이 되고 그 안보 우산 밑에서 복지고 교육이고 보육이고 이런 부분이 순차적으로 논해져야지 옳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립니다. 장관, 이 부분에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동의합니다.

○배영식 위원 기획재정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배영식 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서 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배영식 위원 행정안전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배영식 위원 공무원들의 해외파견 관련된 별도 정원에 관한 훈령, 그 관리지침이 벌써 15년 전에 규정이 되었네요, 보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배영식 위원 그래서 장·단기 국외훈련과 관련된 지침이 너무 오래돼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최근에 보면 대외 부분, 특히 G20다, APEC 회의다, 자원에너지, 또 FTA다, BIT다, 통상 분야 이런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 우수한 공무원 인재가 필요한데 소위 해외훈련에 관한 지침이

15년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 T/O를 꽁꽁 묶어 놓으니까 공무원들을 단기·장기연수를 시켜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는, 또 소위 말하면 글로벌 이슈에 대비해서 선제적 대응능력을 갖추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소홀히 하고 뒤처져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견해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재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숫자가 한 100명 정도인지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공무원 해외연수 규모를 확대시키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배영식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대외의존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배영식 위원 정치 부분도 그렇고 경제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소위 선제적 대응능력을 배양해야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배영식 위원 그런데 기획재정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배영식 위원 우리 국영기업체 중에 신의 직장, 신의 직장 하면 산업은행이 그중에 대표적인 예로 들립니다, 그렇지요? 지금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비교해 가지고 산업은행 예를 제가 한번 들어 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정원이 2157명입니다. 그런데 매년 정원의 1.4% 수준을 해외에 장·단기연수를 보냅니다. 그중에 학위 취득 목적으로 해서 보내는 인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2000년부터 2011년 연말까지 뽑아 보면 학술연수, 그것도 학위 취득용으로 근 100명 가까이 내보내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공무원의 경우는 적어도 국가정책 핵심 추진인력으로 하면 과장, 사무관, 주무관 중심인데 7만 명에 한 0.4%가 해외연수를 가는데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1.4%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대부분이 학위 취득용으로 갑니다. 해외에 가서 석사학위 받을 것 같으면 애시당초 뽑을 때 석사학위 취득자를 뽑으면 되지 왜, 1인당 평균 9500만 원이 들어가요, 계산해 보니까.

근 1억씩 들어가는데 이 인력을 단기연수를 보내면 3배, 4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글로벌 뱅크 금융인력 양성한다 해서 보면 최신 금융분야 연수를 많이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물거래기법이라든지 또 선진 트레이딩이라든지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이런 연수를 보내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꼭 학위 취득하게 이렇게 보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분야 연수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국가적으로 득이고 업무수행하는 데도 득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공공기관관리운영지원법에 의해서 감독을 하잖아요, 평가도 하고?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그렇습니다.

○배영식 위원 이럴 때 이런 소위 개별 사항을 바로잡아야 돼요. 이 모럴해저드가 아주 심각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는 해외의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인력양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너무 과도하다든지 또는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는 아까 행안부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공무원들의 능력개발, 대외역량 제고 차원에서 교육훈련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식 위원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365명이 소위 해외 장기연수훈련 갔다 오는데 그것도 학위 취득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이것은 전후좌우를 따져볼 때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소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선진 글로벌 금융기법을 연수시키면 3배, 4배의 효과를 더 거둘 수 있는데 왜 가서 개인의 소위 여러 가지 욕망을 채워주는 식으로 국민의 세금을 쓰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적절히 통제를 해 주시고, 거기에 비해서 공무원들은 너무나 15년 전의 지침 훈령에 얽매여 가지고 제대로 교육연수를 못 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그 부분도 T/O를 좀 넓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배영식 위원 그리고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배영식 위원 자율방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배영식 위원 이것 보니까 전국에 3980개 조직에 9만 9579명이 활동하고 있고, 대구만 해도 173개 조직에 4373명이 지금 투입돼 있는데 소위 행정적 지원에 관해서는 지방경찰청의 자율방범대관리규칙에서 정하고 있고, 재정적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아무리 자율이라고 하지만 겨울의 혹한기에 이분들이 활동할 근거지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컨테이너박스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컨테이너박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또 거기서 대기를 하고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전기세, 난방비, 털장갑, 털모자, 야식비, 피복비, 차량유지비까지 이것 지자체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도저히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또 한전에서는 컨테이너박스에 전기 넣어준 게 불법이다 해 가지고 그것도 끊어 버립니다. 난방이 안 되지요, 자율방범 활동은 해야 되지요, 이것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연구해 보겠습니다.

○배영식 위원 지금 금액이 대구만 하더라도 3억 지원이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에 한 백삼사십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제주의 경우 1인당 연간 4330원밖에 지원이 안 돼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자율방범대를 보면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역의 헌금하는 분들, 또 유지들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찰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해서 현재까지 그럭저럭 꾸려가는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뭘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배영식 위원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알겠습니다.

○배영식 위원 예.

1분 더 주시겠습니까?

○委員長 鄭甲潤 예, 알아서 하십시오. 여기 다 평가하고 있으니까.

○배영식 위원 보훈처장님 계십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배영식 위원 6·25 참전 소년소녀 참전 유공자들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배영식 위원 실태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끝났습니다.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배영식 위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곧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식 위원 그런데 소년소녀 참전병 중에는 징집연령이 되기 전에 복무를 하고 또 나중에 복무 마치고 나서, 갔다와서 정식 징집연령이 되니까 또 소집돼서 또 갔다오고 이런 분들도 많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배영식 위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예우도 못 받고.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배영식 위원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배영식 위원 지금 이분들의 아픈 마음은, 형평성 차원에서 재일학도의용군 수준의 예우와 보상을 해 달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고 있습니다.

○배영식 위원 그분들은 국가유공자 대접을 받고, 지금 이분들은 참전유공자 대접을 받고 있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차이가 있습니다.

○배영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실태조사가 끝나셨으니까 반드시 재일학도의용군 수준의 예우를 한번 검토를 진지하게 하시고, 보상도 그에 맞는 수준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합당한 예우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훈처장님 나오셨을 때 제가, 오늘 보훈처 앞에 월남 참전 전우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던데 공법단체 빨리 만들어 달라는 그 내용인 것 같던데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지금 대책이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엄청난 인원이 지금 모여있거든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그게 지금 베트남참전전우회와 고엽제전우회 간의 갈등 문제와 이해관계가 지금 풀리지 않아 가지고 우리 정무위에 계류

돼 있는 이 법이 지금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요번에 베참 회원들이 저렇게 수백 명씩 와 가지고 저런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훈처 입장에서는 저분들이 일반 시민단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가유공자 분들이 저렇게 와서 시위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조만간 양쪽 베참과 고엽제의 대표들을 불러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정무위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예, 보훈처에서 이 갈등을 조정을 못 하면 결국 정치권에 오게 됩니다. 정치권으로 오게 되면 내년의 양대 선거를 두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게 되니까 보훈처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수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다음은 민주당의 주승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위원 전남 여수 출신 민주당 주승용 위원입니다.

저는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장, 외교부장관,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행안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찰청장께 묻겠습니다.

내년에 물대포차 한 대를 도입하기 위해서 3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계상돼 있어요.

○경찰청장 조현오 예.

○주승용 위원 충북에 도입합니까?

○경찰청장 조현오 본래 계획은 저희들이 그렇게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주승용 위원 3억 3000만 원 다 삭감됐습니까?

○경찰청장 조현오 예, 국회 행안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때 물포하고 물보급차 각 한 대씩 내년도에 도입하려고 하던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주승용 위원 지금 그 보급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경찰청장 조현오 지금 현재 내년에 삭감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도입을 안 할 계획입니다.

○주승용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경찰청 계획이 어떠냐고요.

○경찰청장 조현오 본래는 물포하고 물보급차 각 22대씩 해서 전국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각 19대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역별로 잘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추가로 도입하려고 했던 각 3대씩은 도입을 안 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승용 위원 그렇게 확정됐습니까?

○경찰청장 조현오 예, 대신 그 돈으로 전·의경 급식비 개선에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승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더 이상 물대포차는 구입하지 않지요?

○경찰청장 조현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2대 수준에서 19대 수준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주승용 위원 예.

지금 서울청에 5대가 있고, 경기청에 3대가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출동 횟수, 그리고 사용 횟수를 보면 너무나 사용 실적이 저조해요. 서울 이외에는 다른 지방은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세 번 출동했습니다, 물포차가. 광주 같은 데도 네 번, 2년 동안에, 전남 세 번, 이렇게 된다면 광주·전남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도 되고, 2대를 1대로 운영하고 지금 없는 데를 차라리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사용해도, 시범적으로 사용해도 관계없겠다, 제 생각은 그렇게 되는데……

○경찰청장 조현오 예, 저희 경찰청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권역별로 해서 3대 도입 운영하려고 했던 것을 한 2대 정도로 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아니, 앞으로 구입 안 한다면서요?

○경찰청장 조현오 지금 현재 있는 게 19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많은 서울이라든지 경기청 같은 경우는 3대, 5대씩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도 나머지 지방청은 각 1대씩 도입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을 2개, 3개 지방청에서 1대 또는 2대씩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승용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아까 청장께서 말씀하신 전·의경들의 급식비 이게 지금 한 끼에 1940원이에요. 그런다면 지금 초등학생들 급식비만도 못 하다고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조현오 예.

○주승용 위원 그래서 전·의경들에 대한 급식비를 증액을 해 주는 데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장 조현오 예, 저희 경찰에서도 전·의경 급식 현황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물포, 물보급차 줄여서라도 우리 전·의경들 급식 개선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조치를 취한 겁

니다.

○주승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방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주승용 위원 지금 KT가 2G 휴대폰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알고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심지어 KT가 2G 가입자들의 집전화를 일부러 고장 내 가지고 가입자 집으로 찾아가 가지고 3G로 전환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그래요.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런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그 언론보도 안 보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봤습니다.

○주승용 위원 이렇게 KT가 2G 종료를 위해서 2G 가입자들을 불법적으로, 거의 협박성에 가까운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지금 금년 들어와서 KT 민원이 8000건인데 2G 관련 민원이 1000건이 넘어요. 지금 KT에 주의조치 같은 것 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KT가 2G를 종료하고 다시 3G로 전환해야 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가입자의 1% 이하가 남았을 때쯤 되어서 허가해 준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맞추려고 아마 조직원들에게 얘기를 해 놓으니까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부 좀 과잉적 현상이 생긴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주승용 위원 2G 종료는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가입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협박성 또 꼼수를 부려 가지고 집 전화를 고장 난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3G로 전환하게끔 하는 이것은, 이러한 행동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그래서 그런 일부 보도를 보고 실무자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승용 위원 즉각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이거 지금 주의조치 주고 조치시켜야 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알겠습니다. 이미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승용 위원 예, 조사 착수하시고 그 실태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그러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다음 외교부장관!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예, 1차관입니다.

○주승용 위원 1차관 잘 나오셨습니다.

필리핀에서 2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김규열 선장 아시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예, 알고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지난 15일 날 구금 2년 만에 법원의 보석 결정이 났었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예, 일단 보석 결정이 났습니다.

○주승용 위원 본 위원이 지난 4월 달에 대정부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 박 차관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셨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예, 그렇습니다.

○주승용 위원 그때 답변 속기록을 보게 되면 "결과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박 차관이 "예, 보석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보석 결정됐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예.

○주승용 위원 외교부 직원이 이렇게 그 당시에…… 결국 그 후에 7개월 만에 보석 결정이 됐는데 그 당시도 제가 왜 이렇게 우리 재외교민들에 대해서 외교부가 무심하냐, 무관심하냐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보석 결정 났다고 했는데 뭔 보석 결정이 났습니까? 허위 답변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뒤로 저한테 정정해서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주승용 위원 지금 알아보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것이? 속기록 확인,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아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차질이 생겼는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밑의 직원이 보고를 잘못했겠지요. 알지도 못하고 답변서를 올렸겠지요.

이것은 그만큼 외교부가 재외교민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2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어요. 말이 2년이지 당사자는 피를 말리는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죄목으로 구속된지도 모르고 총으로 구타를 당하고 각종 가혹행위에 의해서 귀에서 고름이 나오고 개밥만도 못한 음식을 먹으면서 몸무게가 30㎏ 이상 빠지고 칫솔질을 못 해서 자기 손으로 치아를 3개나 뽑는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필리핀 영사는 '당신을 위해서 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런 일은 당신이 알아서 나오는 방법뿐이 없다' 이렇게 외면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대정부질문을 했고……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위원님,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승용 위원 예.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규열 씨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건을 접수한 게 사건 발생 일주일 만입니다. 그 후에는 여러 가지, 마약 약물검사라든지 또 최초에 김규열 씨가 우리에게 진술한 것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진술한 것이 많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들은 우리 국민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실제로 정기면회, 수시면회 또 수시통화 등을 해 가지고 우리 김규열 씨를 포함해서 이러한 처지에 있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차관, 밑에 사람이 답변서 써 준 것만 읽지 마시고요.

정기면회, 수시면회 간 것이 아니고 제가 직접 당사자를 만났는데 추석 때, 설 때 라면 한 박스씩 갖고 와 가지고 전달하고 간 것뿐이 없어요, 한 10분 이야기 듣고 가 주고. 무슨 정기면회를 오고 수시면회를 했어요?

자, 이번에 보석허가…… 어떻게 해서 마닐라 법원에서 보석허가 난지 압니까, 보석허가 조건? 왜 보석허가를 한 이유, 알고 계세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보석허가를 한 이유는 검찰 증거가 좀 미약하다, 그래서 40만 페소,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주승용 위원 물론 40만 페소의 보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했는데 보석허가가 불법체포가 인정됐다, 필리핀 경찰의 불법체포가 인정된다……

두 번째, 마약사범이라고 한다면 체포 이후에 마약반응 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마약반응 검사 한 번 실시하지도 않았다, 마약사범으로 체포되었다면 모발반응 검사나 심지어 소변 검사라도 실시하여야 함에도 체포 직후는 물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런 마약반응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필리핀 법원에서 보석허가 이유를 설명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외교부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필리핀 당국에다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약사범으로 체포했으면, 불법체포에 대한 것도 항의를 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마약반응 검사 같은 것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왜 당당하게 필리핀 정부에 이야기를 못 합니까, 외교부가?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저희들이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은 필리핀 당국으로부터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하는 것을 문서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아니, 이번에 필리핀 법원에서 보석허가 이유로 체포 직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약반응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나왔어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 차질이 있는지는 돌아가서 우리 공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확인하시고요.

지금 문제는 석방은 되겠지만 무죄 판결을 받아줘야 됩니다, 이것은.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2년 동안 옥살이 한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예.

○주승용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요, 재외교민 보호에. 뭐 하라고 영사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지금 우리 대사관 차원에서 마약청뿐만 아니라 교정청 그리고 사법당국을 통해서도 그러한 관심을 표명하고 공정한 재판과 신속한 석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정기면회, 수시면회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무죄판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세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저희들이 본부에서 보고를 받은 거로는 생필품도 라면뿐만이 아니고 비타민 등을 비롯한 약, 치약, 칫솔, 비누, 소금 등도 제공을 한 것으로 나오고요, 정기면회도 한 것을 저희들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여부를, 진위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제가 4월 달에 대정부질문 하기 전에는 1년 6개월 동안 두 번인가 갔다 왔어요. 지금 내가 대정부질문 하고 난 뒤에 그나마 조금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좀 관심 더 가져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다음 행안부장관,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내년도 예산에 지금 471억 7000만 원 편성됐는데요, 이게 지금 200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는데 시범사업이 종료되기도 전에,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2010년부터 10년간의 계획이 벌써 나와 버린 거예요.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도 없이 바로 2010년부터 10년간 계획으로 그냥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그렇습니다.

○주승용 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또 전국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이 연구용역이 완료되기도 전에 1조 205억이라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버린 겁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추진하는 이유가 뭐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지금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률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거의 한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유 한 방울도 제대로 안 나는 나라에서 이 자전거가 앞으로 주요한 교통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습니다마는 남한강 자전거 길이라든지 전국에 영산강, 금강, 낙동강에서 자전거 길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거의 폭발적인, 자전거 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 봄쯤 되면 아마도 자전거에 대한 수요라든지 도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자전거 도로 확충해 가지고 자전거 이용자 늘리자는데 누가 반대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면 시범사업을…… 그러면 시범사업조차도 필요가 없지요. 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연구용역조차도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연구용역은 뭐 하러 합니까, 돈 들여서? 또 시범사업으로 하고 할 게 뭐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시범사업을 하면서, 모든 게 시범사업 다 하고 그 결과 보고 나서 한다는 것보다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승용 위원 시범사업을 하면 시범사업 결과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거 내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아니, 결과보고서 나오기 전에 이 사업을 10년간 사업을 집행을 해 버리고, 또 기본연구계획을 했으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에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 진 뒤에 모든 것이 타당성 검사를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주승용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이 왜 지금 정부가 이렇게 1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시행하는가, 이게 너무 지금 마음이 급해 가지고, 4대강 사업을 하다 보니까 4대강 사업 주변 공원이라든지 자전거도로 확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졸속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4대강 사업도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당초에 자전거사업은 4대강 사업의 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한강 자전거 길을 우선 뚫고 보니까, 얼마나 그다 황량하게 폐허가 된 철로를 자전거 길로 만든 것 아니겠어요, 돈 절약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과 지원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밀고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용역은 12월 중으로 여기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시범사업 실시하고, 또 연구용역비도 12억 3000만 원이나 돼요. 이런 거 하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와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분석이 끝나고 나서 사업이 집행되고 발표가 되는 게 맞지요, 10년 계획이.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논리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승용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러면 뭐 하러 연구용역을 하느냐 이거지요, 제 말은.

그게 뭐 시간이 그렇게 급해서, 보니까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아니, 그렇게 의심하실 것은 없고요, 하여튼 여기 자전거사업에 대해서 국민들의 호응은 대단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서 해야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12월 달에 나오니까요, 저희들이 대충 예상을 합니다마는……

○주승용 위원 그런데 벌써 사업은 시작되어 버렸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사업은 시작을 했지요.

○주승용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사업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를 연구용역을 한 겁니다. 아예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그런 연구용역이 아니고요.

○주승용 위원 내년 총선은 다가오고 4대강 사업은 빨리 지금 해 가지고 4대강에 대한 효과는 나타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위원님, 이것은 너무 정치적으로 보지는 마시고요, 이것은 그렇게 보실 것 없습니다.

○주승용 위원 정치적으로 안 볼 수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이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이 자전거 사업은 정말 해야 되고……

○주승용 위원 내가 자전거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위원님도 자전거 사서 한번 타 보십시오.

○주승용 위원 왜 행정절차를 안 지키고, 모든 게 절차와 방법이 있는 것 아니에요, 순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요.

○주승용 위원 행안부장관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하여튼 선거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제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대통령 비서실장 나오셨어요?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고용복지수석 나와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내년도 예산 지금 금년보다 31억 4000만 원 증액했어요.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예.

○주승용 위원 여비가 많이 증액됐어요. 여비가 한 34% 증액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지요.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국내여비는 현장 상황을 좀더 많이 파악하고 소통을 좀 강화하고자 해서 좀 늘렸고요.

○주승용 위원 이제서야 강화해요?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예?

○주승용 위원 이제서야 소통을 강화해요?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아니, 이제까지도 해 왔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주승용 위원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내년에 총선 또 대선이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나 참모들이 지금 정치활동 강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34%나 증액합니까, 왜?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저희들이 지금까지 현장에 가서 각종 계층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그런 측면에서……

○주승용 위원 그것은 정부 부처가 다 마찬가지예요. 국내여비 증가, 왜 증가하느냐,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활동 가서 현장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그 말 누가 못합니까? 왜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내년에 갑자기 34%나 증액합니까?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해외 국

외여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핵안보정상회의가 3월에 있기 때문에 그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사전에 협의하는 외국과의 협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늘었고요.

국내여비도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상황이지 저희들이 이제까지 국내 현장을 다니면서 무슨 정치적인 목적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승용 위원 해 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예.

○주승용 위원 특정업무경비 20억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 직제상 고위공무원 행정관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한 460명 가량 됩니다.

○주승용 위원 고위공무원이?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고위공무원이 아니고요. 전체 정원이 그렇습니다.

○주승용 위원 기능직, 정무직 빼고요.

지금 특정업무경비는 고위공무원하고 행정관에게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340명, 이들에게 월정 최고액 30만 원을 일괄지급해도 12억 2400만 원뿐이 안 돼요. 왜 20억씩이나 반영했습니까?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

○주승용 위원 제가 질문할 것을 준비를 안 해 갖고 나오셨습니까? 제 질문서가 안 갔습니까?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질문서를 사실은 못 봤습니다만 특정업무경비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든가 수사라든가 어떤 특수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반영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별히 내년 예산을 증액한 것이 아니고 예년도 수준으로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승용 위원 특정업무경비 대상이 340명밖에 안 되는데 월 30만 원씩 월정 최고액을 지급하더라도 12억 2400만 원이 나왔는데 20억 원이나 반영된다는 겁니까?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자세한 그 산출 내역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鄭甲潤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실에 부탁입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가장 관심 사항이 특수활동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예.

○委員長 鄭甲潤 다음은 한나라당 한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연일 계속되는 질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국방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의료체계 보강추진위원회가 국방부에 편성이 되어서 연구를 했었고 또 국회에서도 2012-16년 군의료체계 개선계획을 함께 검토를 하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여기서 나온 안들이 실제로 소요 제기 된 것은 10월 이후에 소요 제기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한기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또 다른 군에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래서 국회 제출 전까지 저희가 605억 원을 요청을 했었고 군의료체계 개선 TF에서 나온 여러 가지 과제 중 105억 원에 해당되는 이런 사업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국방위에서 인정을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 줬는데 예결위에서 잘 심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부탁을 드립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예산들이 다시 누락됐을 때는 또다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국방부와 군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은 국방부장관뿐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앞으로 또다시 질타를 받는다면 국방부뿐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함께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번에 사단급 이하 제대에서 진료체계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진료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다음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 급식에 대한 것이 어제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실제로 저는 군에 근무할 때 교육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장병들이 교육훈련을 받는 현장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병사들에 대한, 훈련병에 대한 예산은 3564원을 8주 동안에 증식시켜 주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도와 간부후보생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한기호 위원 그러면 학군장교가 입영훈련을 받을 때 받는 훈련 강도가 훈련병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교나 부사관후보생 이런 훈련 시 증식비는 고된 훈련이나 훈련의 강도를 봐 가지고 이것은 증식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호 위원 저도 군생활을 했고 생도생활을 하고 교육생활을 해 봤지만 이때는 배가 고파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먹을까 이런 궁리까지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사들 배는 고려하면서 후보생들의 배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교육받는 간부후보생들, 사관생도 그리고 기술후보생들 이러한 인원들은 훈련 강도가 병사들보다도 훨씬 강한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누락을 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은 다시 한번 고려가 되어서 추가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지난 80년도부터 지급해 왔던 장교와 부사관 후보생에 대해서 증식비가 1일 약 1000원씩이었는데 그것을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다음은 유류단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류의 단가를 결정할 때는 그 전년도부터 당해연도 6월까지의 가격을 가지고 결정하는데 실제로 이와 같은 가격을 가지고 결정했을 때 급격하게 유류단가가 올라갔을 때는 감당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편성된 예산을 보면 11년도 대비해서 15.5% 증액시키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유류단가 인상 비율을 비교해 보면 35.5%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부족한 편성이 됐을 때 지금 훈련은 어떻게 시킬 것이며 앞으로 전투기라든가 함정들의 전투대기태세는 어떻게 유지시킬 것이며 또 부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난방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래도 괜찮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군 운용과 전투력 유지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금년도 7월 이후에도 고유가가 역시 지속되고 있는데 현재 국제유가가 배럴당 93불, 그래서 이 문제도 현실화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지금 유류단가 편성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요되는 것이 7945억 원이 편성됐는데 실소요로 봐서는 8523억입니다. 자그마치 578억이 덜 편성됐는데, 그러면 이만큼 내년도에 부대 운영하고 훈련을 시키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다시 예결위원회에서도 편성이 되도록 장관님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감사합니다. 잘 노력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다음은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몇 가지 부사관들에 대한 배려를 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우선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 주임원사들에 대한 운영비를, 대대와 연대급이 16년 동안 10만 원으로 편성돼 있던 것을 특단을 내려서 2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물론 20만 원도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플러스해서, 전방 오지에서 고생하는 부사관들을 위해서 전투부사관에 대한 장려수당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론 국가의 전체 예산 규모도 고려가 되겠지만 GP, GOP, 해·강안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한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GP라는 곳과 바로 1, 2㎞ 뒤에 있는 부사관들하고 업무의 양이나 피로도나 또 그리고 훈련의 강도, 스트레스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오히려 전투부대가 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GP, GOP, 해·강안만 편성했을 때, 저도 예비사단 사단장을 했습니다만 예비인 부대는 더 많은 작전을 뛰어야 되고 더

많은 훈련을 해야 되고 전방에서 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커버해야 되는데, 이 인원들을 빼도 괜찮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존경하는 한 위원님께서 우리 중대급 이하 전투부대에서 묵묵히 임무 수행하고 있는 부사관들의 고충 또 중요성 이걸 알고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특히 최근에 이러한 이유로 전투부대를 기피하는 이런 현상까지 있기 때문에 최초에 저희가 월 10만 원 정도로 전투부대 수당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부 예산의 사정도 있기 때문에 월 5만~7만 원 수준으로 책정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 수당과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증액시켜 가지고 사기 증진에 기여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액수를 전체적으로 못 늘린다 하더라도 대상을 나눈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비부대까지 포함을 시켜야지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같은 액수를 가지고 인원을 늘리든가 전체적인 주는 인원에 대한 액수를 못 늘린다면 대상 인원은 다시 한번 검토가 돼서 예산도 다시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현재는 제한된 예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 합니다마는, 수혜받을 수 있는 범위와 폭 그리고 지역까지도 다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갑윤 위원장, 장윤석 간사와 사회교대)

○한기호 위원 다음은 K-2 전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K-2 전차는 전부 다 전력화에 대한 것을 완성해 놓고 파워팩, 엔진과 미션 결합체에 대해서 국산을 쓰겠다는 그 방침 때문에 결국은 지금 2년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연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그 전차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부속들을 부품들을 생산하는 업체가 자그마치 1400개 업체 수가 되고 여기에 종업원은 4만 2000명이 됩니다.

이 인원들이 지금까지 무슨 문제가 생겼냐? 결국은 2년 이상이 지연됨으로써 금융 비용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되고 또 시설유지 비용의 부담을 안게 되고 인력유지 비용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단가를 상승시킵니다.

처음부터, 제가 작년도에 국방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외국에서 도입하는 파워팩을 그냥 쓰고 나중에 국산이 개발되면 얹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걸 하지 않고 끌어온 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직도 결정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종합적으로 내년 가을까지 가야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국산을 쓸 수 없는 것을 국산을 쓰겠다고 자꾸 고집하는 게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국산 기술도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 수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마지막 운용시험평가까지 마치고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관련돼 있는 기업과 종업원들, 이분들은 도산해도 괜찮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게 아니고, 그 관련된 기업이 중복된 기업도 많이 있고 또 국산을 만일 쓰게 되는 경우에는 후속되는 수리부속이나 ILS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에, 현재 외국 제품을 쓰게 되면 약 500억 정도 사업비가 또 증가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결론 낸 것은 내년 10월까지 마지막 운용시험평가까지 보고 결론을 내리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한기호 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내년도 일부 물량이라도 우선은 전력화하는 데 써야 됩니다. 야전부대도 실제로 전차부대를 편성하겠다고 해 놓고, 사람은 편성해 놓고 장비를 못 주고 있는 부대가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금년 봄에 이것을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더 이상 늦추지 마시고, 일단 일정 물량이라도 외국산을 쓰더라도 전력화를 먼저 일부를 추진해야지만 그 기업도 살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도, 실제로 500억이 지금 장관님께서 든다고 하셨는데 이 500억도, 지연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이 누적된 것이 결국은 나중에 단가로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 500억이 절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비용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상세한 것을 방사청장

이 추가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위원님, 아마 자세한 것은 장관님께서……

○한기호 위원 마이크가 안 켜졌습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장관님께서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조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발시험평가 있고 운용시험평가가 있는데, 개발시험평가는 11월 1일까지 끝났습니다. 운용시험평가를 내년 8월까지 해야 되는데, 일단 이번 동절기까지만 해서, 동절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시험을 해서 3월 달에 최종판정을 해서 국산 장착 여부를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 하청업체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산이 불합격이 된다 하더라도 중간에 중대한 결함이 생기고 그러면 해외 파워팩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서 13년 1월부터는, 13년부터는 전력화가 가능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래서 예산도 거기에 맞게, 일부 전력화가 될 수 있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반영을 하는데, 다만 지금 예산 담아 있는 것이 조금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기호 위원 이 협력업체들이 지금 국방위원회를 포함해서 저까지 수없이 찾아와서 '저희들 정말 못 살겠습니다' '정말 도산할 지경입니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데, 청장님 얘기 듣고 계십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래서 저희도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한 이천오백몇 억을 집어넣어 놨습니다마는, 그래도 원래 정상화하려면 한 1000억 정도가 부족하지만 최소한 한 500억 정도만 더 추가적으로 해 놓으면 아마 중소 협력 업체의 경영난 해소는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렇게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하고, '이 정부가 실제로 우리 국민들을 돕느냐'…… 어차피 중소업체입니다, 협력업체들은.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런 불만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연기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데드라인이 내년 2월이고, 그래서 바로, 아마 2월 전에도…… 또 우리가 실패했다 그러면 해외에서 조달하는 가격이 비싸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협상은 지금, 해외 조달선하고 협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결정이 돼도 조달되는 데 10개월이 걸린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내년도에도 예산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아니…… 그 초입에 계약금으로부터 집행이 되기 때문에요 아마 그것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것은 제가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협력업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국방부와 방사청이 해서는 안 됩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저희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다음은 UAV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는 무인 과학화 감시 장비 시대가 됐고, 더 나아가서 무인 무기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UAV에 대해서 진척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방사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희 소형 UAV는 각 개별 업체들이 개발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저희 정부가 투자해서 하는 건 중형 UAV, 중고도 UAV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전력화하는 데 내년도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중형 UAV는 사실 탐색개발 종료 후에 최종 체제 개발을 할 거냐 그거를 검토하기로 했는데 아마 내년까지 탐색 개발해서, 지금 탐색 개발이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내년도 소형 UAV 같은 경우는 6억 원이 필요하다는데, 이것도 지금 안 태워져 있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거는 지금 긴급소요로, 저희가 사업 전략이 큰 거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적은 대대급에 이게 굉장히 긴요하다는 소요가 있어, 지금은 사업 계획을 다 완료

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게 예결위에서 좀 도와주시면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한기호 위원 다음은 공격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호국훈련 11월 2일 날 500MD가 떨어졌죠?

원인이 뭡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아마 다른 것도 다 기종이 낡아서 그런 게 주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결국은 30년 이상 쓰다 보니까 노후화해서 떨어진 거죠?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언제 공격헬기는 갈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우선 헬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소형 무장헬기도 있고 대형 공격헬기……

그래서 대형 공격헬기는 저희가 국외 구매 사업으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서 어떤 기종을 살 건지 내년 말쯤에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500MD부터 코브라까지 지금 실제 군에 가지고 있는 헬기들은 전부 30년 이상 낡은 헬기들입니다. 이걸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국회의원들한테도 알려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만날 선정할 때 보면 '우리의 막강한 헬기'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다 낡은 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바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알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張倫碩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당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위원 경기도 남양주시 박기춘 위원입니다.

청와대, 누가 나오셨습니까?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이 나와 있습니다.

○박기춘 위원 비서실장 안 나오셨습니까?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예.

○박기춘 위원 대통령실장 안 나오셨습니까?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예.

○박기춘 위원 왜 안 나오셨죠?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

○박기춘 위원 왜 안 나오셨냐고요.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어제 오전에 좀 나왔고……

○박기춘 위원 피곤해서요?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저희가 이제 좀 교대로 이렇게……

○박기춘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委員長代理 張倫碩 사전에 간사 양해를 얻었죠?

○박기춘 위원 어제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거 질문 시간 빼세요.

이게 도대체 답변이 됩니까, 지금 저 말씀이?

○委員長代理 張倫碩 우리 강기정 간사님, 양해가 된……

○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실장이 못 오면 좀더 책임 있는 위치에 오셔야지 이거 뭐 쉬러 오시는 자리입니까, 교대로 나오시게?

○委員長代理 張倫碩 그래서 수석급들이 대리 참석을 지금 하고 있는……

○박기춘 위원 여기 군대에서 불침번 섭니까, 교대로다? 고용복지수석이 어떻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겠습니까?

○委員長代理 張倫碩 수석들이 교대로 대참을 간사 간에 양해해서,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기춘 위원 하여튼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하세요,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질문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 해당 부처에다가 얘기를 했는데도 공감을 하면서도 수정이 안 되고 또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총리께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시정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좀 시정해 달라, 이렇게 취지를 가지고 질문할 테니까 답변을 책임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보금자리주택을 이 정권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예.

○박기춘 위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보금자리주택이 실패한 정책이라고들 얘기하고 있습

니다, 국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예, 일부 그 지역에서 문제점이……

○박기춘 위원 일부만 공감해요?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예, 문제점이……

○박기춘 위원 문제점이 많이 나오지요?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박기춘 위원 가장 큰 문제는 말이에요, 자기가 평생 조상 대대로 살아 온 그런 집이나 토지를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수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린벨트 지역이지요, 수십 년 동안 그린벨트 지역의 아픔과 그 고통으로 해서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해 오던 이런 분들이 갑자기 또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짓겠다고, 결국은 자기 보금자리를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바랄 수 있는 것이, 합당한 감정가격을 통해서 거기에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이 그야말로 정부 시책에 협조하는 거다, 또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그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보상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 보상 단계에 들어갔을 때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감정평가사를 의뢰하는 데 있어서 토지소유주는 1명밖에 못 해요. 그런데 시행자인 정부는 2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2 대 1로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2명 중에서 1명은 반드시 또 한국감정원에서 의뢰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형평에 맞습니까? 공생발전에 맞는 겁니까, 이게?

2 대 1로 하면 열 번을 싸움하고 열 번을 계산을 해도 정부가 이기지 않습니까?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감정원에다 의뢰하게 되면 정부에서 같이 담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의도대로 가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서민의 보금자리를 뺏게 되는 것이고, 조상 대대로 지켜온 토지는 물론이지만 전 재산을 송두리째 뺏기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현실이 사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책임 있는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정부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감정평가가 좀 자의적으로 지나치게 과다하게 돼서 예산을 낭비한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제도를 바꿔 가지고, 한국감정원은 꼭 정부 편을 드는 기관이라기보다는 국책기관으로서 공신력과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박기춘 위원 그것은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하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 주변 거래되는 가격에 반도 못 미칩니다. 공시지가도 때로는 받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것이 특히 저가로 감정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정이 아주 상당히 극에 달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2명을 추천하고 여기는 1명을 추천하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 제도를 개선해 달라, 정부에게 수없이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15일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토론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만장일치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정부는 선량한 국민들의 재산을 착취하겠다는 거라고밖에 다른 의도가 없다고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동의한다 이 말이에요. 법안심사소위 1명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부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청와대가 나서서 그야말로 억울하게 피해 보는 국민들을 바로 구해야 되는 이런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해 보라 이 말이에요.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예, 관련 부서로 하여금 검토를……

○박기춘 위원 검토는 몇 번씩 했는데, 대통령께서도 "검토하면 그건 안 되는 걸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공무원들이 검토한다고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라고 한번 말

씀하신 것 기억 안 나세요?

이건 시정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정부는 두 사람을 추천하고, 토지소유주는 1 명을 추천합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정부가 한 사람 추천하고 그 지역 현황을 잘 아는 기초단체장이 1명을 추천하고, 토지소유주가 1명을 추천하고, 이렇게 해서 3명이 감정가격을 산정해서, 그러면 합리적인 감정가격이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공감이 갈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고?

그것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서 나온 분이 '그러면 기초단체장 말고 광역단체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했더니 그것도 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상당히 잘못된 제도지요. 그런 것을 고쳐야 그야말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생발전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위원님, 이것 제가 직접 담당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과거에……

○박기춘 위원 담당하지 않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청와대를 대표해서 나온 분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라고 내가 그러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과거에 국책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평가를 하거나 지자체에서 보상업무를 수행하면서 굉장히 과다하게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완해 보고자 아마 지금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돌아가서 관계 수석들과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좀……

○박기춘 위원 그래서 제가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은 겁니다. 정부가 1명 하시고, 그 지역 현황을 잘 아는 기초단체장이 1명 하고 그리고 토지소유주가 1명 하면, 그러면 누가 봐도 객관성 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예산 증액에 대해서 모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우리 수석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민심 파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다고 그랬습니다. 소통도 안 되고, 민심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그동안에 운영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심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가 그렇듯이 청와대도 특히나 여론조사 많이 하지요, 각종 여론조사?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예.

○박기춘 위원 그것 좀 자료 요청하면 왜 안 줍니까, 그건? 거기에 뭐 국민이 알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상당히 위험한, 보안에 문제가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돼 있습니까?

자료 좀 주시지요. 계수조정소위 시작하기 전까지 정부가 각종 여론조사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정부가……

○박기춘 위원 아니, 우리 청와대에서.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그런데 그건 과거부터 대통령 국정수행과 직접 관련되는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박기춘 위원 별로 민감하지 않은 사항이에요. 민심을 파악하고 또 소통에 문제되는 거 그런 정도인데, 별로 민감하지 않은 건데도 안 주고 있어요. 그게 아마 결과가 좋으면 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과거부터 안 줬으면 지금부터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로 공생발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여론조사라는 것이 시행하는 기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를 보여 주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춘 위원 생각을 해 보시고요. 지금 총리께서도 나 몰라라 하고 있고, 관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불합리한 제도는 이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청와대에다 질의한 겁니다. 해결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예.

○박기춘 위원 다음은 말이지요, 민주평통 사무

처장 나오셨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이상직 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박기춘 위원 민주평통에서 위원들 추천하는 제도가 말이지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이상직 정부단체에서 추천을 하고, 국회의원님께서 추천하시고, 이북오도에서 추천을 하시고,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추천하시고, 사무처장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춘 위원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추천이 된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역협의회장 임명할 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임명합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이상직 각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무처장이 제청해서 의장인 대통령께서 결재하십니다.

○박기춘 위원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이상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춘 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가 내 지역에 속해 있는 광역단체인데, 51개 시군에 보면 전혀 터무니없는 사람이 낙하산으로 뚝뚝 떨어져 내려와요, 예?

여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열정과 경험과 도덕성·신망도 또 지도력·사회봉사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회원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갑자기…… 특히 여당 당직자, 정부 관련된 그런 어떤 경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초등학교 반장도 전체 반원들이 다 모여 가지고 비밀투표로 선거를 합니다. 동네 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입니다. 부녀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그마한 마을에 가도 동네 주민들이 다 나와서 비밀투표로 뽑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화통일을 자문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덕망 있고 도덕성, 신망, 지도력, 사회봉사 경력, 이것을 다 갖춘 사람을 뽑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서 임명하는, 이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이상직 전체적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

○박기춘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스스로 거기에서 상향식으로 선출해서 올라오게 되면 임명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이상직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을 임명할 때 그 협의회 회장을, 법에 의하면 같이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기춘 위원 그 방법이 잘못됐으면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규정에는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동네 이장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비밀투표로 뽑고 그렇게 임명을 하는데, 지역의 소방대장도 그렇게 뽑고 있는데, 읍면동에 가도……

그런데 어떻게 평화통일, 1개 시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100여 명의 대표자를 뽑는데 전혀 의견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상당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딱 찍어서 내려보낸다 이 말이야. 잘못된 거라 이 말씀이에요. 제가 아닌 것을 그렇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이 귀중한 시간에. 개선하세요.

그 밖에도 예산 삭감해야 될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평통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참고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컨대 말이지요,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면 통일 여론 수렴, 특수활동비…… 이 특수활동비가 여기에서도 필요합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이상직 예.

○박기춘 위원 그다음에 자문위원 일반지원사업비 이런 것도 말이지요, 단체별로 달라요. 인구가 많은 광주광역시라든지 대전광역시 같은 데는 150만 명가량이나 돼 있는데, 1개 광역단체에서 한 군데는 2억 이상을 지원하고 광주광역시에는 3000만 원 정도뿐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4억 8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인구가 많은 경기도는 6000만 원뿐이 지원을 안 합니다. 이건 왜 차등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이상직 그 부

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부분들이니까 한번 찾아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형평에 안 맞는 것이 어떻게 광역 간에 말이지요, 어느 광역단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委員長代理 張倫碩 마무리하시겠습니까, 1분?

○박기춘 위원 예.

5억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어느 광역단체는 6000만 원뿐이 지원 안 한단 말이에요. 이 기준이 뭔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삭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조현오 예.

○박기춘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경기 2청 필요하지요?

○경찰청장 조현오 예, 필요합니다.

○박기춘 위원 인구가 300만이 넘으니까 당연히 해 주셔야 됩니다. 2청으로서 모든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지금 거기 경기 2청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조현오 예, 제가 경기청장을 해 봐서 경기 북부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수원에 있는 경기청에서 북부지역에 대한 정상적인 감독지휘권을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경기 북부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춘 위원 그런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조현오 경찰법에 보면, 1개 시도에 1개 지방청만 설치하도록 이렇게 법제처에서 그런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 문제가 지금 선결해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이 관련해서 계류 중에 있는데 좀 심도 깊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기춘 위원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박기춘 위원 21일 날 그 관련법이 행안위원회에서 토론이 되거든요. 여야 위원들이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동의가 가능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제 입장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북부의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는 의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2차장이 있습니다. 2차장이 거의 독립적인 체제를 가지고 경기도 북부의 치안을 지금 담당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방행정 체제 개편이라든지 자치경찰제 문제하고 같이 연계를 지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찰만 거기다가 남북으로 잘라 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으면 교육청 문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관련되는, 소방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서 지금 신중하게……

○박기춘 위원 그것까지 걱정하실 것 없이 지금 당장 국민들의 치안행정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우선,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아니, 지금 그렇다고 의정부에……

지금 경기도 청장 밑에 2차장, 1차장은 수원 쪽에 있겠고 2차장이……

○박기춘 위원 독립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받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하여튼 제약을 받지 않도록 그건 좀 개선을 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박기춘 위원 그게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답변입니다, 소관 부처 장관님께서.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여하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기춘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委員長代理 張倫碩 박기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나라당 홍일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표 위원님, 첫 질의시지요?

○홍일표 위원 예.

○委員長代理 張倫碩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인천 남구갑 출신 홍일표 위원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별로 질문하는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고맙습니다.

○홍일표 위원 선재성 판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그렇습니다.

○홍일표 위원 지금 사표를 낸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아닙니다. 아직 정직 징계처분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일표 위원 아, 정직됐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홍일표 위원 어쨌든 현직 판사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게 국민들로서는 참 보기에 민망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을 1심에서, 광주지법에서 무죄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비판이 아주 먹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등법원 관할은 서울고법으로 이관이 됐지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그렇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게 검찰의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그렇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법원이 좀 알아서 직권으로 또는 판사들의 회피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관내에 근무하는 현직 판사를 재판하는 데 과연 공정하게 볼 거냐 하는 국민들의 의식 그런 게 있다면 법원 스스로 좀 이것을 다른 관할구역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그런데 그 점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에서 직권으로 관할을 이전할 수는 없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검사의 신청이나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관할 이전 신청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러니까 회피는 같은 법원 내에서 다른 판사가 할 수밖에 없다?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그렇습니다. 관할 이전……

○홍일표 위원 그래서 법원 자체를 옮기는 것은 어렵다?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법률상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법률상 어렵다?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홍일표 위원 그랬으면 본인이 사실은 다른 법원에서 재판받겠다고 신청을 했어야 되는 건데 현직 판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이 너무나 보기가 안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최근에, 얼마 전에 사법연수원에서 성범죄 전담 재판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것이 뉴스에 나온 걸 봤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했습니다.

○홍일표 위원 최근에 도가니 사건으로 국민들이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원의 양형에 대해서 크게 불신을 하고 있고 또 이미 2, 3년 전부터 조두순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건이 나오면서 그런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판사들이 모여서, 그 뉴스를 보니까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재범까지 이어졌다. 이런 반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회의는 정말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 취임하신 대법원장님께서는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그렇습니다.

○홍일표 위원 국민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법관들끼리의 소통도 더 중요하다. 들쑥날쑥한 판결과 튀는 판결 없애려면 법관들끼리 이런 회의를 좀 자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같은 의견입니다.

○홍일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걸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면 국회가 얼마든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필요한 것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필요한 것이 뭐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래요.

사법연수원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앞으로?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아닙니다. 연수원을 이용해서 그런 모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며칠 전에 인천의 백령도 다녀오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다녀왔습니다.

○홍일표 위원 가서 하루 종일 계셨다고 들었는데.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대피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나, 그것도 점검도 했고요. 가서 흑룡부대 장병들 격려도 해 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홍일표 위원 잘 하셨고요.

그런데 지역 신문에는 장관님 왔다가 가신 그 소식을 '행안부장관 빈손으로 백령도 방문' 이렇게 제목을 뽑았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날 제가 장갑을 안 끼었습니다.

○홍일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홍일표 위원 이게 지금 작년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 생겼고, 그 법에 근거해서 정부가 여러 부처 협의 끝에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까지 이렇게 내놓았는데 그 계획에 나온 여러 가지 사업예산들이 터무니없이 깎여 가지고 영, 이래 가지고서 과연 주민들이 실감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제목이 나온 건데 노후주택개량사업 당초 160억에서 28억으로 줄었다, 안보교육장 건립도 49억에서 29억으로 줄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것을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이것은 사실 기재부에서 할 얘기 같습니다마는 노후주택개량사업은 원래 융자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경우는 안보적인 특수성을 감안해서 국비보조 지원 대상으로 했고, 1가구당 지원비용을 20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줄어들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보다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보교육장 건립예산은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49억 원에서 29억 6000만 원으로 반영이 됐는데 원래 총 부지 488평을 구입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어떤 종교단체가 갖고 있는 땅이 100평이 있었습니다. 이와 연관된 땅이 좀 더 있었고. 그래서 그게 빠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 매입을 하지 못해서 총 부지가 315평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 빈손으로 갔다 오지 않았느냐 그러셨는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거기 보니까 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달라는 그런 특별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쭉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사업의 저희 행안부 예산이 절반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백령도 하고 서해 5도의 경우는 그냥 거기도 마찬가지로 깎지 않고 거기는 원래대로 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홍일표 위원 기재부 차관님, 이게 지금 서해 5도 지원사업 예산을 이렇게 팍 깎아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실망이 많은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다른 도서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저희들이 이 법을 제정할 때부터, 보조율의 예를 들면 다른 데보다도 높은 80%를 적용하도록 법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앞으로 그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행안부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노후주택개량사업의 경우에도 융자로 지금 다른 지역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로 지금 해 드리고 있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보조하고 융자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융자는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데, 보조를 지금 80%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팍 깎았다 이렇게……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보교육장도 제가 보니까 규모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좋겠습니다만 당초에 요구한 한 300평에서 규모를 좀 조정해서 184평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일표 위원 백령도·연평도는 사실은 그냥 일반 도서로 보아서 다른 도서하고 비교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정말 우리 안보의 최전방이고 언제 또 어떤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에 떠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정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

록, '이 정도라면 내가 좀 위험하지만 이 지역에서 그냥 살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생활지원금은 요구대로 전액 그대로 반영을 다 했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다음에 우리 기재부 차관님하고 경찰청장님한테……

어저께 뉴스에 전·의경들의 급식비가 무상급식 시행 중인 서울지역 공립 초등학교 급식비만도 못하다, 이런 뉴스 보셨나요? 차관님 보셨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홍일표 위원 그러니까 1945년도에…… 이게 2457원인 초등학교 급식만도 못하다, 이런 것이고.

또 집단급식소 134개소 가운데 영양사는 11명, 조리사는 26명만 배치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전·의경들이 부실한 식사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 고쳐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지금 저희들 급식비 단가에 관련되어서는 기준을 공통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의경과 군인에 대한 급식비는 6008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인건비라든지 또 관련되는 연료비 이런 게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급식 관련되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전체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유사한 사업을 비교할 때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해가 생길……

○홍일표 위원 물론 그거야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생보다는 잘 먹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한창……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아니, 왜냐하면 뭐보다도 낮다고 이렇게 했을 때에 단순히 금액을 나누기 얼마해서 이렇게 단순비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홍일표 위원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 조현오 저희들 전·의경들이나 군인이나 같은 국가에 대한 역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 전·의경들이 군인들보다 더 잘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전·의경들 같은 경우는 소단위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들 같은 경우처럼…… 식재료 구입비라든가 구입단가 이런 게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 정도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불리한 여건에 있는 것은 좀 보전을 해서 실질적으로 군인들하고 같은 수준의 급식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입장입니다.

○홍일표 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가가 높으니까 내용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개선이 되도록 해야지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렇게 취직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뉴스에 이삼십 대 절도범이 그렇게 늘어났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지로 그렇습니까, 청장님?

○경찰청장 조현오 실제로 그런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기상황이 범죄, 절도범 통계수치 증가처럼 그만큼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들 경찰에서는 이 범죄통계를 지금 달리해서 적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사사법 통합망이라고 해서 KICS 체제에 의해서 지금 통계를 잡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때까지는 누락되었던 그런 범죄라든지 또 지연 입력했던 이런 범죄가 지금은 바로 즉시즉시 입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저희들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볼 때는 과거 예년에 비해서 우려할 정도 수준의 그런 범죄 증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 절도 증가율보다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서울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런 방범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일표 위원 요즘에 뉴스에 보면 쇠가 되는 대문도 떼어 간다, 구리 성분이 들어 있으면 하수관도 뜯어 간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됐습니다.

그것은 금방 통계에 쉽게 잡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언론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112 순찰차 교체 예산이 너무 삭감돼서 이것 좀 살려 주려고 얘기를 했는데 뭐, 범죄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는 것은 아

닌 것 같고.

지금 기재부차관님, 이게 보니까 노후 112 차량 교체 예산이 828대분만 반영했는데 원래 1037대를 요구했는데 207대분을 깎았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구연한이 3년인데 실제 4년차에 교체되는 것이 5년차에 교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수리비가 과다하게 요구되고 신속한 범죄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 시민의 안전과 직접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색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지금 저희들 경찰 순찰차는 구입하는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이제까지는 임차 형태로 해서 연도별로 예산을 집행을 하다가 일괄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앞으로 기 반영된 범위 내에서 일단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조정을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임차 할부구매 방식에서 일괄구매 방식으로 지금 현재 전환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충분하게 미반영된 교체 소요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어떠세요, 청장님?

○경찰청장 조현오 이게 지금 기재부차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순찰차 구매 방식이 할부 방식에서 일괄구매 방식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내년에 저희들 요구한 게 200대 같은 경우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3년이 경과하면, 저희 경찰청 이때까지 통계를 죽 보면 3년 경과하게 되면 수리비가 새로운 차량을 구매했을 때보다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이것은 좀 구매를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홍일표 위원 지금 이런 잔범죄 그런 것의 증가를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에 맞는 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야 시민의 안전이 보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는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장관님, 제가 어저께 워싱턴 미국 의회에서 북한자유이주민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IPCNKR이라고. 거기서 북한 인권 관련 회의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크게 클로즈업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잔혹한 인권탄압상을 직접 그 정치범 수용소에 있던 사람이 와서 증언을 했고, 또 신숙자 씨 모녀 구출을 위해서 남편인 오길남 씨가 직접 와서 또 증언을 했고, 그래서 신숙자 씨 모녀 구출 이런 것들은 하나의 사례이긴 하지만 북한 인권과 관련된 상징적인 사건으로 국제사회에서 클로즈업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국제사회는 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서는데 국내에서는 별 관심이 없거나 정부조차 때로는 무관심한 경우도 많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접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취하고 있거나 취할 계획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우선 정부가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신숙자 씨 모녀를 포함해서 국군포로,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그 일의 성질상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위원님께서 국제 연대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조금 더 부연하면 유엔 등의 국제기구나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국제적십자위원회 등과 또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근래에 우리 총리실과 협력해서 그 대책을 위한 정부 내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기구가 만들어지면 조금 더 조직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래서 총리께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현재 작업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예, 총리실과 협의해서 저희 통일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외교부장관님.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외교부 1차관입니다.

○홍일표 위원 TPP가 성사가 되면 FTA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TPP의 내용도 FTA의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러면 TPP가 되면 미국과 일본 사이에 FTA 체결된 거나 마찬가지가 되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본,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12개국인가 되어 있는데……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예, 다 합치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도 결국은 나중에 한미 FTA와 별도로 TPP에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지금 현재 TPP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하고 우리가 FTA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다자적인 그런 FTA에 들어가게 되면 또 저희들이 생각 못한 여러 가지 제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조금 더 그 논의사항을 지켜보면서 참가 여부를 결정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해외에 한글학교 운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예, 대부분의 우리 교민들이 있는 지역에는 한글학교가, 토요일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그렇습니다.

○홍일표 위원 모국과의 유대 관계 증진이나 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미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대체적으로 좀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홍일표 위원 올해 외교부 한글학교 지원 예산이 68억 원인데……

○委員長代理 張倫碩 1분 더……

○홍일표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여기에 한인회나 한인교회나 이런 데서 한글학교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총비용의 20% 수준밖에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올해 1억 8000이 증가했지만 너무 미미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좀 늘려야 된다, 외교부가 그런 데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겠고요.

또 토요학교라는 것이, 토요 한글학교가 꼭 정부 지원금으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학생들의 약간의 수업료라든지 또 교민사회의 약간의 보조라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정부 지원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문체부장관님, 생활체육 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빈약해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애로, 불만도 많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 인상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요. 내년도에 지도자가 195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 부담 때문에 인원은 증원됐는데 인건비 인상은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홍일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재부차관님, 아까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에 관해서 동료 위원들 질의할 때 전체가 한 3조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보상 체계 자체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지금 전체 금년도에 한 2조 9000억 정도되고 전체 명예수당 형태로 들어가는 게 14%에 해당이 됩니다.

○홍일표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의 평균 연령이 80세인데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수명이 79세인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된다, 반드시 정책을 설계할 때. 그 점 감안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연령이 그렇고 앞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연령에 따라서 또는 어떤 사정에 따라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드려야 되겠지만 기준과 원칙은 명백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委員長代理 張倫碩 위원님들이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6·25 참전용사의 그 보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획재정부차관님, 위원님들의 말씀을 유념해서 바른 정책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委員長代理 張倫碩 홍일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나라당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위원 부산 사상구 출신 장제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권재진 법무부장관입니다.

○장제원 위원 제가 결산 심사 때 부산구치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한, 시간을 많이 할애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부산구치소가 정원이 500명 초과돼 있습니다. 이번에 또 조현오 청장께서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해 가지고 부산 조폭들이 부산구치소에 다 오면 이거 진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안에 조폭들하고 일반범들 그렇게 섞어 놓으면 다 조폭됩니다.

○법무부장관 권재진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구치소·교도소는 재소자 인권 문제라든지 또는 시설의 노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난번 결산 국회 때 지적도 해 주셨고, 저희들이 그 뒤에 실태를 파악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때 예산당국하고 협조를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했습니다마는 이 재원이 참 만만치가 않아서 지금 당장 국가 재정사업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부처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당국하고 부산시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이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이 원만하게 이전되도록 정말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아니, 그래 가지고 안 돼, 다각도로 노력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오늘 결판을 좀 냅시다.

그 시설 노후도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장제원 위원 그런데 왜 이 1970년대 초반에 있던 광주·장흥·대구 교도소 신축 예산, 안양교도소 재건축 예산 다 기재부에 신청하면서 이렇게 노후된 사상에 있는 부산구치소는 예산 신청을 안 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산당국하고의 협의 과정을 다 공개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장제원 위원 아니, 기재부에 물어보면 예산 신청 안 하셨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사위에서 기재위로 그 의견을 올렸……

○장제원 위원 아니, 그것은 국회에서의 얘기고요. 법무부에서 기재부로 예산 신청을 안 했다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것은 기재부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기재부에서 올리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답니다.

(웃음소리)

○장제원 위원 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 담당자하고 법무부 담당자하고 다 같이 왔어요. 기재부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법무부가 의지가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법무부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저희가요, 기재부에다 부산구치소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재부 절대 안 된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게 진실…… 기재부차관님,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핑퐁치지 말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당초에 시작할 때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했다가 그게 지금 LH공사의 사업, 여러 가지 그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다시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새로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거기에 따라서 세입을 마련하려면 매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재원 사정을 보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 그게 어떤 형태가 됐건. 부처 간에 실무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급한 대로 해결을 하고 또 조금 늦게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금 속도를 늦추고 그런 검토를……

○장제원 위원 그러니까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 기재부차관님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들어도 될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제원 위원 애매한데…… 자,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자살을 7명이 했어요, 자살을. 이 죄수들이 6명 자살을 하고 30대 간수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얼마나 시설이 노후되고, 우리 재소자들의 인권이나 간수들의 인권은 뭐가 되냐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 주변에, 그 앞에 학장천이 '고향의 강'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요, 이제 생태하천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집니다, 이 청계천처럼. 저의 필생의 사업이었는데 이제 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깨끗하게 흐르는 하천 앞에, 도심 한가운데 구치소가 덩그러니, 완전히 뭐라고 그럽니까, 슬럼화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은 죄수들 정원이 꽉 차 가지고 500명이 넘고 있고 아마 조폭들이 들어오면 한 600명, 700명이 넘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기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부처 간에 이견이 어떻고, LH공사가 지금 빚이 많아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국민들에게 통하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당장 지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50억 요구했는데 그것도 안 되겠다, 부산시에서 정확하게 한번 짜 봐라 그랬더니 "28억이면 설계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해야 내년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재정방식으로 하든 아니면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땅을 팔아 매각방식으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ing가 되고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28억의 설계비를 주시면 내년에 설계 잘 해서…… 그리고 지금 화전산단으로 옮기는데 화전산단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민원들이 있겠습니까? 구치소하고 교도소가 합쳐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주변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부산시가 법을 개정해 가지고 완전히 구치소하고 교도소하고 통합교정시설로 만들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애기하고 했단 말이지요. 그래 가지고 법 문제, 제가 국토해양위 왜 들어갔겠습니까? 이것 하나 해결하려고 들어갔어요. 국토해양위,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것 하나 해결하려고 들어가서 법 개정 완벽하게 했는데 LH공사가 뺑하고 100조가 터진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 제가 지역구 가야 되는데 지금 예결위 왜 들어왔겠습니까? 이것 하나입니다. 실시설계비 28억, 50억도 아니고 28억 해 주시면 부산시에서 잘 설계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 저든, 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오든 하여튼 이거 옮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차관님, 오늘 그냥 '해 줄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까요? 법무장관님은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제가 한번 진짜 심도 있게……

○장제원 위원 진짜가 아니고 그냥 해 주이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다른 사업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장제원 위원 정말로 인권이 심각하고, 이것은 인권의 문제고, 조현오 청장님이 조폭 얘기 안 했으면 이 얘기 더 안 하겠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시급한 사업은 시급한 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굉장히 시급하다는…… 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석에 있는 간사님, 꼭 좀 이거 계수조정 하실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張倫碩 알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보훈예산,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보훈회관에 매년 추석이나 설이나 인사를 드리러 가면 금색 배지 있잖아요. 그 배지가 영광스러워 가지고 내가 6·25 참전했노라 그러고 13만 원 받아 가십니다. 하루에 5000원도 안 돼요. 무료급식소에 가셔서 밥 드십니다.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을 지킨 6·25참전용사였어."……

80 된 노인이 몇 분인지 아세요? 20만 정도 되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장제원 위원 그런데 1년에 몇 분 돌아가시는지 아세요? 1만 5000에서 2만 분 돌아가십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하루에 5000원도 못 주는 대한민국 누가 지키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보훈병원 얘기 좀 할게요.

보훈병원의 대상자들,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 일부 유가족을 포함해 가지고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

○장제원 위원 보훈처장님이 이런 것도 모르시면 안 되지요.

몇 명이에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현재 보훈병원에 있는……

○장제원 위원 아니, 보훈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의료지원을 받아야 될 분이 몇 분인지 아세요, 유가족까지 포함해서? 191만 명입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장제원 위원 그런데 병원이 몇 개인지 아세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병원은 5개입니다.

○장제원 위원 5개지요.

의사가 몇 명이에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

○장제원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280명입니다.

병상 3000개입니다. 어떻게 수용하십니까? 그 분들 의료서비스,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목숨을 걸었던 그 유가족과 그 사람들이 병원서비스마저도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국가의 보훈정책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장제원 위원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획기적으로.

지금 하나 예를 들면 미국의 보훈 대상자가 2600만인데 미국 제대군인부의 직원이 26만 명입니다. 그리고 보훈병원이 152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훈 대상자와 제대군인을 다 합치면 거의 1000만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보훈처 직원은 4000명밖에 되지 않고 보훈병원은 5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가의 보훈정책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됩니다.

○장제원 위원 보훈처장님, 국회에서 이런 발언하셔야 돼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장제원 위원 기재부에서 들으셔야 돼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장제원 위원 류 차관님, 들어 보시니까 소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 획기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 아닙니까? 누가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지금 조금 전에 보훈처장께서 미국의 보훈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에서 Veterans Administration, VA가……

○장제원 위원 차관님, 죄송한데요, 획기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그냥 하시면 더 국민들이 좋아하실 텐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전체적으로 봐서 보훈의, 아까 저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상에 관련되는 부분하고 예우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다만 6·25 참전하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정형편이 어렵다든지 했을 때 다른 차원에서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참전 그 자체로만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고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보훈처하고 관련되는 사항들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긴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연세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의 어떤 한들을 풀어 줄 수 있는 따뜻한 예산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방부장관님!

제가 처음 대화해 보는데, 장관님 안 계시네.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광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잠깐 세면장에 가셨습니다.

○장제원 위원 아, 세면장 가셨어요?

군인복지기금 보니까 제가 조금 놀랐어요. 내년에 신규 추진되는 사업비가 얼마지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광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장제원 위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71억인데요, 골프장 신규 건설, 유지보수, 계룡스파텔 리모델링, 민간콘도 매입비 41억 6400만 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인복지기금이 보통 어디서 들어오는지 아세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광우 ……

○장제원 위원 일반 사병들의 PX 있지요? 거기서 군인복지기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군인복지기금을 왜 장교들이나 고급 군인들의 골프장 유지보수, 스파텔 리모델링, 민간콘도 매입비 이런 걸로 써야 되지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광우 위원님, 지금 군인복지기금의 세입은 장병들로부터 나오는 것도

있고 간부들의 복지시설……

○장제원 위원 아니, 제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군인복지기금을 일방적으로 우리 군인들, 사병들을 위해 써야 된다 이런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수입 같은 것 얘기하지 마시고 답변을 그 핵심에 맞춰서 하세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광우 지출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지출 부분도 장병들에게 돌아가는, 사병들에게 돌아가는 몫의 복지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큰 사업……

○장제원 위원 예컨대 사병들한테 돌아가는 게 뭐 있냐고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광우 지금 각급 부대 지원비, 운영비 등으로 상당한 부분이 복지기금에 담겨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지원비, 운영비? 얼마입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광우 따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자료 제출 말고 말씀해 보세요. 기획실장이면 그 정도는 아셔야지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광우 지금 장병들의 여러 가지 체력단련시설이나 풋살경기장, 운동시설……

○장제원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 책정된 게?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광우 ……

○장제원 위원 기조실장이 그것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71억 신규 중에 41억이나 골프장이나 짓고 말이지요, 그것 뭐 하는 짓입니까? 삭감하세요. 삭감 의견 냅니다.

그다음에 문체부 장관님!

제가 결산 질의 때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 사업 좀 확대해 달라”, 제가 재작년인가 속기록을 보니까 유인촌 장관께서 종합적인 플랜을 만들어서 소외계층의 이런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한번 우리 소외계층들이 참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만큼은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을 핵심적으로 각 광역단체별로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종합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아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만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모철민 차관이 “제출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제출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연구한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예, 그것 꼭 좀 와서, 우리 소외계층이 참 그래도 생활체육이라도, 우리 또 나이 드신 분 게이트볼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장제원 위원 그런 것들 좀 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 아마 연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저한테 답변서가 왔는데 연구가 없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우리……

○감사원사무총장 홍정기 사무총장입니다.

○장제원 위원 아, 사무총장님.

제가요 건설업계의 불법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에서 가장 나쁜 게 불법하도급이거든요. 그런데 불법하도급을 하게 되면 처음에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시정명령 다음이 뭐냐 하면 과징금이나 어떻게 하면 영업정지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데 1년 동안 영업불이익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입찰을 할 때 감점 20점을 받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 보니까, 쉽게 말해 국책사업 쪽에 원청을 입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업불이익 기간동안 입찰을 받아 간 금액이 3조가 넘어요. 특히 대우건설 같은 것은 9000억이에요. 자, 그다음에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 우리 도급 순위가 7위입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을 7번 받고 과징금까지 문 사람이 3조를 갖다가 도급을 했어요.

이 불법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이게 어떤 식이냐 하면 돈을 미지급합니다. 돈을 늦게 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음을 못 주게 하니까. 그다음에는 또 어음을 줍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통장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요, 그만큼 기성금을, 그리고 나중에 원청에서 하도급업체한테 돈을 돌려받는 식으로 그렇게까지 나쁜 짓을 실제로 현장에서 합니다.

한번 감사원에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불법하도급에 대해서, 그리고 불법하도급으로 영업불이익을 받고 있는 기간동안에 왜 이렇게 많은 3조, 1조나 되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 한번 해 볼 용의 없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홍정기 저희가 항상 감사를 통해서 불법하도급이 이루어지는지를 감독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례를 저희가 한번 감사를, 일단 모니터링을 해 보고요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맞으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이번에 정말 근절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20초밖에 안 남아서…… 우리 행안부 장관님, 제가 애교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장제원 위원 제가 장관님 오시기 전에 행안위 위원 했거든요. 교부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국토해양위 가니까 교부금 왜 하나도 안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국토해양부에 아마 그 돈이 훨씬 더……

○장제원 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오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교부세 하나도 안 주세요? 주시겠어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위원님, 나중에 제가 별도로……

○장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張倫碩 장제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나라당 김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경북 구미 출신 김태환 위원입니다.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류우익 예.

○김태환 위원 통일부 일반회계 사업 중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이 일반회계 중에는 제일 크지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렇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김태환 위원 그렇지요? 절반 좀 넘는 것 같습니다. 1239억 원으로 약 58% 정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렇습니다.

○김태환 위원 지난해에, 작년에 우리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자가 몇 명이고 지난 10년간 입국자가 몇 명인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제가 마침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2010년 입국자가 2376명이고 지난 10년 동안 입국자는 2만 1732명입니다. 그리고 11월 10일까지 잠정 누계는 2만 2679명입니다.

○김태환 위원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예.

○김태환 위원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렇습니다.

○김태환 위원 장관, 그 지원 내용이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지금 정착기본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업장려금을 차등해서 조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위원 예.

보니까 지금 주거지원금으로 1300만 원, 정착기본금으로 600만 원, 2007년부터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예, 그렇습니다.

○김태환 위원 2005년도에는 주거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주다가 2007년도에 13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인상해 줬고 또 정착기본금은 2005년까지는 1000만 원을 지급하다가 2007년도에 600만 원으로 오히려 정착금은 내렸답니다.

장관, 보고받으셨습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환 위원 예.

그것 특별히 그렇게 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아마 그중에 일부가 아까 말씀드린 취업장려금 형태로 좀 갈라져 나간 것은 사실인데 실제로 정착지원금이 6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그리 넉넉한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환 위원 그렇지요?

2005년도에 우리나라 월 최저임금이 64만 원입니다. 64만 원인데, 금년에 우리 최저임금이 약 97만 원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렇습니다.

○김태환 위원 약 52%가 2005년 대비해서 증가했습니다마는 정착기본금이 오히려 1000만 원에서 2007년부터 600만 원으로 인하되었다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좀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 생각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예, 그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고요.

최저임금액이 상승한 것을 감안해서 정착기본금이 증액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통일부에서 이걸 60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올리면 좋지 않을까 하고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환 위원 예,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게 물론 어느 정도 현실화시키는 것이 적정할지의 문제는 또 전문가 의견들도 들어 보고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600만 원이라는, 그것도 2005년도 대비해 가지고 2005년 이후에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줄였다, 또 줄여 가지고 계속 오고 있다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장관께서 이 문제는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가능한 한 현실화를 좀 시켜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예, 감사합니다.

○김태환 위원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을 한번 보니까 말이지요, 우리 경제참여율은 약 42% 또 고용률은 38% 정도입니다. 우리 경제활동참가율이 전체로 봐 가지고는 60%입니다. 60% 대비해 가지고 약 2만 명 되는 탈북자들의 경제참여율이 42% 또 고용을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이 56%인데 탈북자들 경우에는 38% 정도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지금 앞으로 경제활동, 생활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주 적재적소에…… 지금 퇴사율이, 직장을 갖더라도 1년 이내에 퇴직하는 비율이 약 68%입니다.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렇습니다.

○김태환 위원 거의 1년 이상을 버티지를 못하는데 이게 좀 어떤 적정한 일자리를 찾아 준다든가 하는 이런 대책도 우리 통일부에서 같이 병행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장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예, 북한이탈주민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국민의 한 42% 수준, 그런데 이분들이 아주 짧은 기간의 적응, 교육과 연수 등을 한 후에 우리 사회에서 직업에 적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전문적인 기술 수준도 떨어지고 또 직업 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원이나 또는 후에 하나센터,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하면서 어떡하든 취업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원에서의 직업교육을 좀 더 다양화하고 심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좀 강화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태환 위원 예.

이탈주민들 평균 나이를 보니까 말이지요, 20세에서 39세가 거의 60% 정도 차지합니다.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김태환 위원 그러니까 경제능력이라 할까, 우리가 교육만 말이지요, 학습교육만 제대로 좀 시키고 하면 충분히 경제활동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여튼 우리 장관께서 여기에 특별히 좀 관심을……

○통일부장관 류우익 예, 몇 년 전에 비해서는 지수상으로는 조금 나아집니다만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환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통일부장관 류우익 예, 감사합니다.

○김태환 위원 다음 기재부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 문제인데요.

이건 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아니지만 광의의 예산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의로 보면?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뭐 전체 공기업 예산……

○김태환 위원 그런데 이 성과급 지급한 공기업이 총 21개 공기업인데 거기에 15개 공기업이 기관장 평가에 의해서 말이지요, 성과급이 과거보다 월등히 금년에 많이 나갔다, 이렇게 이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니까 2011년도 총 21개 공기업에서 성과급으로 받은 금액이 1조 691억 원입니다.

MB정부 첫해 2008년도에 지급된 성과급이 8558억 원이었습니다마는 3년 동안에 거의 한 25%가 늘어났습니다, 성과급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차관께서 보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전체 성과급 관련 통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숫자는 전부 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영평가를 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직원과 또 임원에 대한 성과, 인센티브 상여금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왜 늘어났는지에 대한 건, 비율은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전체 규모가 늘어나고 또 공기업의 숫자가 당초보다도 범위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환 위원 이것 한번 챙겨 보세요, 차관께서.

작년 2010년부터 우리 기재부에서 공기업 성과율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했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김태환 위원 이제 등급제로 해 가지고 S급부터 E등급까지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시스템을 도입한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공기업 기관장의 평가가 적게는 한 20%에서 많게는 60%까지 기관장 평가에 의해서 지급이 됐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지금 공기업 경영평가는 기본적으로 평가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에 따라서 되도록 되어 있고 기관장 평가가 일부 반영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위원 그러니까 기관장 평가가 아주 객관성이 있고 뭐 정확하게 이렇게 정말…… 또 다른 공기업하고 대비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어 주면 좋은데 조금 이 평가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공평성이라든가 또 다른 공기업과의 비교 등등 여러 가지가 주관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말이지요, 이 제도개선에 의해서 받아 간 게 55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기관장 평가에 의해서. 이건 조금 더 객관적이고, 이 제도가 과연 좋은지 한번 차관께서는 좀 챙겨보시고 바꿀 의향이 없는지……

지금 그 내용은 잘 모르세요, 차관께서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평가는, 경영평가단이 구성이 돼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이 되고 평가지표는 1년 전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등급제로 전환이 됨으로 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제가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말이지요, 공기업의 기관장 평가가 20~60%의 영향을 주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고 또 우리 정부가 처음 시작한, 2008년도 성과급 계산방식으로 만약 그대로 왔다고 하면 1조 691억 원의 성과급이 8954억 원으로 됩니다. 약 1737억 원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금액이 기관장 평가에 의해 가지고, 심사방법의 변경에 의해서 더 증액이 됐다, 더 지급이 됐다고 한다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뭐 기재부가 많은 고민을 해서 그 방식을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좀 성과급이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재검토하실 때, 뭐 물론 잘하면 많이 주고 못 하면 과감하게 줄이고 삭감하고 하는 그런 우리 성과급 계산방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게 늘어나는, 총액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이것도 좀 고려해 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이 방식은 조금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거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위원님,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지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태환 위원 예,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태환 위원 문화바우처 사업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태환 위원 그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문화 프로그램 이용비용, 1년에 5만 원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가구당 5만 원입니다.

○김태환 위원 가구당 5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태환 위원 이게 작년 67억이던 예산이 올해

347억 원으로 증가되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태환 위원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태환 위원 그 집행률이 아주 부진한 거 같습니다.

올해부터 지원비용을 카드발급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요, 그게 가구당으로 되면서 내려갔다가, 저희가 9월에 청소년이 있는 집은 청소년 한 사람당 5만 원씩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게 정착이 안 돼서 집행률이 낮았지만 지금은 거의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위원 지금 10월 말 현재까지 금년에 얼마 집행되었는지 통계 가지고 왔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 전체가 276억인데요, 지금 10월 말까지 147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김태환 위원 그러면 52%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아니, 그거는 10월 말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60%라는 거는 지금 현재 11월 중순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위원 지금 내년도는 얼마로 해 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내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0억이 더 증액되어 있습니다.

○김태환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태환 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을 보더라도, 지금 9월부터 뭐 더 5만 원 추가 지원하신다고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 이 집행률이 우리 예산보다 많이 모자랄 거 같은데 내년에 이렇게 140억 원 더 증가해서 그야말로 제대로 예산 집행이 될지 좀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가구당이니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9월 달에 청소년 한 명씩 더 하면서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더군다나 문화예술의 소비특성상 연말과 겨울방학에 제일 많이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문제가 없고요. 내년에도 뭐 정착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환 위원 하여튼 장관께서 여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집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또 내년에 140억 원 늘어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이 제도가 정착하는 데 약간의 사용률이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말이지요, 지역 간 집행률이 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대도시하고 또 광역 도농지역하고 여기에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지역이라든지 또 고령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기획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카드 이용률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위원 지금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의 경우에는 카드 발급률이 아직도 30% 근처에 있습니다. 맞지요?

(장윤석 간사, 정갑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소비를 그 지역에서 가까이에서 할 수 있도록 기획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김태환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좋은데 카드 발급률이라든가 사용액이 아주 형편없다 이겁니다. 카드사용액으로 보면 강원도가 9.3% 경북이 8.3% 전라남도가 7.1% 제주가 5.6%입니다. 그러니까 10%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이런 카드발급 방식으로 변경하고 나서 말입니다. 이렇게 대도시와 도농 복합지역인 광역도 간에 이런 예산 소진율 격차가 너무 크게 나는데 이것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시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하여튼 연말까지 저희들이 전부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위원 아니, 소진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 간의 격차, 이게 카드발급 방식으로 바꾸고 이런 광역도의 경우에는 이게 아주 10%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급률을 높이고 사용할 수 있게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委員長 鄭甲潤 지난번에 좀 안 줬다고 성내시던데 오늘 특별히 1분 더 드립니다. 아까 1분 드렸어요.

○김태환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러니까 카드 발급 외에 다른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직접 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위원 아무튼 우리 정부가 문화복지를 위하고 또 서민들을 위해 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좌우간 이게 많은 우리 국민들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그런 방법을 좀 짜셔 가지고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또 전국적으로 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환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보훈처장님하고 기획재정부차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유공자 12만 원에서 15만 원, 3만 원 증액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전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위원들도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셨으니까……

우리가 경제대국 아닙니까? 11위라 하는데 그 간에, 시작도 이것 제가 알기로 2002년부터 시작한 걸로 제가 아는데 차관,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태환 위원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2002년 맞습니다.

○김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어려울 때는 못 했고 이제 겨우 실시한 게 2002년부터니까 시작이 늦은 것을 고려해서 이번에 꼭 그것을 15만 원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鄭甲潤 수고하셨습니다.

1분 특별히 더 드렸는데 고맙다는 말씀 하셔야지요.

○김태환 위원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甲潤 다음은 비경제부처 2일차 주질의 마지막 질의자로 한나라당 안효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대 위원 울산 동구 출신의 안효대 위원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본격적으로 재외국민선거가 이루어집니다. 맨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를 총괄 관리를 하고 외교통상부는 주재국과 협의, 재외투표소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선거는 선관위의 고유업무이지만 재외선거는 우리의 공권력이 닿지 않기 때문에 타국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인 만큼 외교통상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타국에서 불법선거가 일어났을 경우에 주권 침해 등의 이유로 선관위가 개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교통상부는 불법선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외교부 1차관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는 우리의 공권력 행사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재외동포 사회에 선거의 중요성 그리고 불법선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관위와 협조를 해서 55명을 파견을 받아서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배치를 해서 하는 활동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효대 위원 재외국하고는 지금까지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지금 현재 특별히 문제된다는 보고는 받은 바는 없습니다.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주재국하고 협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실시했던 두 번에 걸친 모의선거 때도 주재국하고 협조를 해서 실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효대 위원 외교통상부와 중앙선관위의 재외선거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에 보면 재외선거 설명회가 있고요, 선관위에 보면 재외국민 대상 행사계획 홍보가 있고 공명선거 추진활동 지원, 재외공관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홍보활동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업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분명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중복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복사업을 좀 조정을 해서 본 위원이 보건대는 외교통상부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주재국과의 협의 문제 그다음에 그야말로 안전하게 잘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이런 협조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주가 되어야 되고 유권자와 관련된, 선거와 관련된 업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차관입니다, 위원님.

○안효대 위원 죄송합니다, 차관님.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선관위에서 재외공관에 파견 나가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은 55곳입니다, 55명이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공관에서는 우리 외교부 공관에서 하고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홍보 분야를 포함해서 좀 말씀드리면 선관위에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라든가 간접 그런 게 좀 많이 있고요, 저희들은 좀더 교민하고 밀착해서 하는 좀 직접적인 활동의 그런 부분도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활용 방안이라든지 사용방안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대 위원 선관위와 협의를 하셔서…… 제가 보는 견지는 같이 해도 관계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 자체가, 고유의 업무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고요 오히려 더 효과 있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지금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안효대 위원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대 위원 국방부장관님 나오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사무총장이 답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효대 위원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사무총장님 말씀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재외선거 사무의 총괄 관리는 선관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외투표관리관이 하는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등록 신청·신고 접수 그다음에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안내 지원, 투표소 설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외공관에서도 영사업무의 일환으로서, 그에 필요한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을 투표관리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사무가 법률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도 예산이 선관위 업무하고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서 집행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심의하실 때 외교부 부분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안효대 위원 하여튼 외교통상부하고 원만한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대 위원 국방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녀를 군대에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건강하게 잘 다녀와라……

○안효대 위원 그렇지요, 몸 건강하게 잘 제대하고 오는 것이 부모님의 입장일 겁니다. 국가를 위해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의 황금기를 군대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건강하게 군대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월에 KBS의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군종합병원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경기도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보면 군 의무대의 문제점으로 군의관의 진료능력이 26%, 군 의무대의 문제점입니다. 노후된 시설로 인한 신뢰저하가 23%, 의무병 신뢰도 저하가 22.6%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에 이용하는 사유를 물어보았더니 군의관 불신이 33.6%, 군병원시설 불신이 33.6%로 군 의료체계에 대해서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지적을 또 하셨어요.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군 의료체계 불신으로 인해서 민간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니까 민간의료병원 이용한 수가 훨씬 많습니다.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군 의료체계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큽니

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국민들이 군 의료체계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이제까지 우리 군이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소홀했다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05년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의료체계를 어떻게 선진화시킬 것이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당시에 5년 동안 260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 가지고 당시에는 주로 병원급 시설과 장비 향상·현대화, 의료인력의 확충 이런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이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군 의료체계 개선 TF를 편성하고 또 발전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지난 10월 달에 완성을 했는데 주로 이번에는 연대급 이하 제대에서 장병들을 어떻게 의료체계에 빨리 접근시킬 수가 있느냐 하는 접근성의 문제, 응급체계, 후송체계 그다음에 주로 인력의 정예화 이런 데에다 초점을 많이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기간 내에는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마는 장병들이 믿고 찾는 군 의료체계가 되어서 빨리 이것 선진화시켜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효대 위원 방금 말씀을 하신 대로 의료체계 선진화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안효대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이번에 이 안이 완성되기 이전에 예산을 제출했기 때문에 약 105억 원 정도가 아직 덜 태워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방상임위에서 이것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포함시켰는데 예결위에서 잘 좀 선처를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효대 위원 제가 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역병의 민간의료시설 이용 시에 보면 건강보험 국가부담금 그리고 진료업무보조비를 지원해 주는 진료지원사업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전용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안효대 위원 2008년도에 보면 114억이 이·전용이 되었고요, 2009년도에 142억 8200만 원, 2010년도에는 151억 1800만 원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인 것은 진료지원을 위해서 이·전용되는 예산이 보면 의무장비 획득이라든가 의무장비 수리라든가 그다음에 의무물자 확보라든가 의무시설 개선사업 등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진료사업이 이·전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예산편성 때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대부분 이·전용 예산을 보니까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입니다. 이것 방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장비유지비나 수리비에서 이쪽으로 전용을 시켰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무려 69%를 올려 가지고 347억을 태워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이제 해소가 된 것이고, 내년도 예산편성도 이와 유사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안효대 위원 그다음에 성과지표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라는 것은 해당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사업내용을 잘 반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진료지원, 의무장비획득, 그다음에 의무장비수리, 의무물자확보, 의무시설개선사업의 성과지표는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물론 여기에는 의료인력의 질적인 문제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이런 것을 잘 하게 되면 만족도가 높아진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더 나은 방향이 있는가 하고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안효대 위원 지금 성과지표 보면 딱 두 가지예요. 환자만족도하고 수술건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안효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면 현실 상황하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이것도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좀 현실성 있게끔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장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안효대 위원 여성가족부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또는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안효대 위원 현재 12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5만 원을 지원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그렇습니다.

○안효대 위원 이 5만 원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지금 이게 7년 전에 책정된 액수입니다. 7년 전에 5만 원대에서 그동안 좀 늘리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안효대 위원 이번에 8만 원으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상향 조정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상임위 차원에서 지금 올렸습니다.

○안효대 위원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결산내역을 보니까 여가부에서 최초 계획보다 증액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고 100% 다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그렇습니다.

○안효대 위원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보면 올해보다 194억 6800만 원이 적은 460억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331억 9400만 원 반영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안효대 위원 그런데 지금 줄어든 사유가 뭐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고교생 학비 지원이 지방교육청으로 이관됐습니다, 365억 원이.

○안효대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그래서 그게 빠졌고 일부 저희가 그래서 중고생 자녀에 대해서 학용품비 지원을 28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안효대 위원 그러면 지금 5만 원씩 그대로 다 반영이 된 것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5만 원씩 있는데 지금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는, 아동들에 대해 지원하는 단가하고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다른 데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주는 데에 비해서 여기만 5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안효대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 지적을 할게요.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수당이 월 10만 원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그렇습니다.

○안효대 위원 그다음에 장애아동수당이 월 15만~20만 원 나가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그렇습니다.

○안효대 위원 또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월 10만 원 나가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안효대 위원 그다음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월 또 10만 원이 나갑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안효대 위원 그래서 그것 본 위원이 보건대는 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데, 물론 많이 조정해 주면 좋겠지만 재정여건도 감안해야 되는 것이니까, 제가 보면 8만 원도 좀 적지 않을까, 한 10만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다른 부처 지원하고 형평성을 맞추려면 10만 원이 돼야 되는데요. 국가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지금 중간단계로 8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안효대 위원 우리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안효대 위원 이것 좀, 한부모가정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게 지금 8만 원 이렇게 좀, 상향 조정해야 되는데요.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안효대 위원 문화재청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

○문화재청장 김찬 예.

○안효대 위원 1분 30초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이 금년도는 1880억이고 내년도는 1972억 원이네요, 그렇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안효대 위원 국가지정문화재가 보니까 3357건이고 등록문화재가 472건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그렇습니다.

○안효대 위원 그런데 이 문화재를 보존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사업실적이

굉장히 미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에서는 다 집행이 이루어졌는데 지자체에서는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상승되고 있는 요인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 뭐, 금년도에는 대충 얼마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나아지고 있는데요, 한 5년 전에 40%대에서 올해는 80%대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효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9월 말 현재 40.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문화재청장 김찬 그 숫자는 다시 확인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효대 위원 저희들 자료에 보면 9월 현재가 40.5%밖에 안 됩니다.

○문화재청장 김찬 그것보다 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효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왜냐하면 어떤 사업의 특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요. 있겠지만 제가 보건대는 예산 편성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과다 편성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그에 집행되는 예산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만큼 편성이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위원님, 우려해 주신 것은 저희가 잘 유념하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 청에서 갖고 있는 총액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도에서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면서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금액의, 국가 지원 요청금액의 25% 수준밖에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지정문화재는 계속 훼손이나 손보아야 될 것은 점점 많아지고 지정문화재는 해마다 또 많아지고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해야 되는 소요는 커지고, 말씀주신 대로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군이나 저희나 같이 애를 쓰고 있어서 많이 끌어올린 상태라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안효대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900억이나 1800억 원 그것이 많다적다를 떠나 가지고 그 해 집행률이 반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물론 장기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주시지요.

장기간, 특수성에 따라서 장기간 2~3년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해 필요한 예산은 그 해에 반영하시면 되고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1년에 몇백억씩 남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그 말씀은 제가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대 위원 그러면 사업의 특수성도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편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청장 김찬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안효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수고했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소위원회가 12인으로 구성된 바 있습니다.

오늘 교섭단체별로 소위원 명단이 제출되어 소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소위원을 말씀드리면 한나라당은 위원장인 본 위원을 비롯하여 장윤석 위원, 구상찬 위원, 배영식 위원, 백성운 위원, 이정현 위원, 이종혁 위원, 민주당은 강기정 위원, 박기춘 위원, 주승용 위원, 오제세 위원, 비교섭단체는 임영호 위원입니다.

소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김성식 위원 질의하실 것입니까?

아까 제가 주질의 마지막 자로 했기 때문에 전화라도 하시고 오셨으면 내가 시간 다 드렸을 텐데 늦게 오셔 가지고 우선 주질의 9분 해 보세요, 9분.

우리 김성식 위원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관악갑 출신 김성식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관광부장관님, 국방부장관님, 행안부장관님, 방위사업청장님, 방송통신위원장님, 국회사무총장님, 시간 되는대로 이분께 질의를 드리겠고요. 다른 분들은 잠깐 쉬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장관님께는 문화 콘텐츠 전문인력 관계, 또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술개발 예산 관련을 중간에 질문을 할 테니까 실무자한

테 자료 좀 챙겨 받아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방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김성식 위원 군인복지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질의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복지시설 확보 사업이 골프장 이런 형태 중심으로, 주로 우리 병사들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일부 군 관계자들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이 많은 내용들입니다.

2011년 감사원 감사에도 병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회관 건립 등에 보다 많은 예산안의 투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제기 받으신 적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런 제기는 간혹 받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데 올해도 복지시설 확보사업에 편성된 신규사업 7개 중에 4개가 주로 간부들이 이용하는 골프장 및 콘도회원권과 관련된 사업이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병에 해당되는 것도 이번에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뭐 간부님들의 이런 복지활동을 위한, 또 문화활동을 위한, 체육활동을 위한 이런 부분을 도외시한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병사들의 복지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많고, 이 기금 자체가 다 어디서 충당되는 거지요, 장관님?

○국방부장관 김관진 대개 물론 간부도 있고 병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통계적으로 따져봤을 적에는 약 44% 대 56%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수익기여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특히 오산골프장 신설사업의 경우에는 이게 특별히 신설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오산골프장은 현재 오산에 미7공군 사령부가 있고 우리 공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군들이 주로 사용하는 골프장 나인홀 자리가 있는데 우리 땅에서 우리 장교들이…… 대개 미군이 구성권이 있고 우리는 골프장이 없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공군은 항상 대기태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자체 골프장이 없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내 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부지가 탄약고 주변으로 있기 때문에 그 탄약고의 주변을 이용을 해 가지고 골프장을 지어 주는 것이 공군장교들의 사기 복지를 위해서 좋다, 그다음에 대기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하에서 그렇게 제기를 한 겁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억 설계비만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게 착수금입니다.

○김성식 위원 예, 그러면 이것 이제 시작하면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제가 지금 확실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아마……

○김성식 위원 이게 2억짜리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수십 억 이상의……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성식 위원 예산이 될 거라고 보는데 과연 우선순위에 맞는지, 그 공군장교들의 어려움을 백번 이해한다 하더라도 저는 한번 짚어 봐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 7개뿐만 아니라 저는 이번에 복지기금사업 중에 골프장 및 콘도회원권과 관련된 사업들은 한번 예결 소위 단계 때 정밀하게 다른 우리 병사들의 복지기금지출 예산과 더불어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마찬가지 균형된 감각을 가지고 항상 접근을 하고 싶은데 병사들을 위한 혜택도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하고 지금 노후 마트 개선, 풋살경기장을 연대급에 하나씩 지어 주는 문제, 체육기구, 냉·온수기 구입해 가지고 반영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저희들이 해결하고 있고 간부 복지도 역시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식 위원 저는 알뜰한 살림을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에서 관련 7개 신규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면 삭감까지 하면서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방위사업청장님 계십니까?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작년에 다른 사업에서 921억 원을 전용해서 사용한 적이 있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이·전용이 여러 사업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김성식 위원 우리 사업청장님은 재정에 대해서도 전문가신데, 방위력을 개선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이·전용이

이렇게 많아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개혁작업 좀 하고 계십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사실 이·전용하고 사고이월, 불용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업계획 자체가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았으면 선행 연구단계에서 확실하지 않게 이렇게 해 놓은 데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선행조치 이것을 강화해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부터는 선행조치가 안 된 것은 예산에 사업을 집어넣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과정에서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성식 위원 저는 2012년 예산총칙안 제10조 제2항을 보니까 방위사업청 소관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상호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계수조정소위 또 전체 예결위 의결 때 바로잡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방위사업청장님,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김성식 위원 특히 무기획득사업, 즉 무기구매사업과 연구개발사업 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것 바로잡으셔야 되고요. 예산총칙에서 우리 예결위가 모든 것을 다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다만 지금……

○김성식 위원 예, 말씀하세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무기구매의 경우는 외국정부의 수출 승인이 지연된다든지 어떤 단일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경쟁입찰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우발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정상을 참작해야만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어쨌든 무기구매 비용과 연구개발 비용 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재정 전문가시잖아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바로잡으시고, 힘들겠지만 조금 더 과학화하시라는 뜻입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김성식 위원 답변하셨습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김성식 위원 다음으로 행안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수고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보니까 재난현장 종사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요, 우리 재난현장에서 전경, 의경, 소방공무원들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물품을 지급하는 예산인데요. 이게 재난과 연관된 것이니까 딱 떨어지게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적지 않은 재난이 있었는데 집행률이 이상하게 10% 안팎으로 낮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는 또 작년 수준과 비슷하게 잡혀 있는데, 장관님, 이 부분이 기왕 잡히면 효과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텐데요, 어떤 개선사항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작년만 특수한 경우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금년에 집행률이 낮았던 게 금년에 태풍 피해라든지 이런 게 생각만큼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 폭설이 온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이런 비용들이 또 이어 사용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저희 관악구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비 엄청나게 왔거든요. 우면산 사태에 서초구에서 피해를 입었지만 그때 사실은 많은 장병들, 소방관들의 도움으로 그나마 독거노인들 가재도구 다 바깥으로 빼내고 할 때 겨우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지원받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게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아주 큰 규모로 넓게 그런 사고가 터지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이상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춘천이라든지 우면산이라든지 관악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적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성식 위원 저는 이 예산은 똑 부러지게 편성할 수는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는 예산을 삭감하기보다 장관께서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관리를 잘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잘 쓸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기왕에 안 전업무에 투입되는 사람들은 참 고생스럽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나중에 소위에서 심사하실 때 좀더 적극적으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백업을 하셔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다음에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예산이 특별교부세로도 투입이 되고 일반회계로도 투입이 되는데, 주부물가모니터단의 경우에는 가령 이게 저는 솔직히 여성들의 일자리 대책이다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방 물가대책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이분들이 한 745명의 숫자가 있는데요,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 아마 어떤 공무원들보다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실제로 물가를 조사하는 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통계청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매달 그 물가를 갖다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회계 직원이 있다는 것 우리 행안부장관님 아시지요? 그러니까 학교 회계로 처리하는 학교 회계 내 직원인데 이 정원 통제…… 여기 대부분 지금 비정규직으로 돼 있고요. 일부 하도 문제가 돼서 정규직으로 된 경우도 무기계약직이 돼서 호봉 승급도 없고…… 스포츠강사, 사서, 영양사 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들인데 평생 있어 봐야 초봉 봉급 그대로 한 150만 원 이 언저리밖에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교과부에 알아보니까 행안부 정원 통제 사항이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 내용은 제가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 장관님께서 학교 회계 직원,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이분들은 좀더 안정적으로 학교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안정적인, 공공기관부터 이렇게 직장을 안정시키자는 게 또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 알아보시고 서면답변해 주시고, 제가 또 속기록에도 올릴 수 있도록 작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문화부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성식 위원 본 위원은 지금은 아닙니다만 당의 정책위부의장을 하면서 일자리와 연관된, 특히 청년창업과 연관된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요.

그런데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2012년 예산안을 보면, 부처에서도 충분히 심의가 됐겠지만 3D 전문인력 양성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거의 몰빵을 한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59억 99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콘텐츠 핵심 인력 양성 사업은 3억 원으로 기왕에 2010년도에는 약 30억 하던 것이 줄고 사이버 인력 양성 부분은 별로 늘지 않고 3D 전문인력 양성에만 지금 이토록 많은 예산이 잡혀 있고 신규로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성식 위원 이것 별로…… 충분히 중복 문제도 있고 교육기관이 과연 합리적인지 또 전문성은 과연 확보할 수 있는 건지, 같은 콘텐츠 인력 확보 중에 여기만 집중해야 될 것인지, 저는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일단은 저희들로서는 3D 전문인력 양성을 제일 역점을 둬서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성식 위원 저는 현장에 있는 인력들을 이렇게 보면요, 기업들도요, 제가 그분들의 창업 포럼 같은 데 가 보면요…… 한번 가보세요, 장관님. 그러면 맨 마지막에 우리가 소주 할 때 '원샷' 그러잖아요. 그 양반들은 '디벨로퍼(developer), 디벨로퍼, 디벨로퍼' 하면서 정말 콜라 한 잔들 마십니다.

그만큼 제대로 된 개발능력을 갖춘 사람이 부족해서 좋은 창업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도 그것을 돈이 되는 사업으로 못 만들고 있는 이 현실에 얼마 안 되는 이 예산을 왜 다 3D 인력 예산으로 칸막이를 쳐서 다 갖다 넣습니까?

저는 차라리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수요 있는 대로 수요자 중심으로 예산 배정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다음에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술개발 예산 이 부분인데요. 올해 얼마나 늘었습니까,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460억에서 550억으로 편성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

○김성식 위원 그런데 한국콘텐츠진흥원은요, 이 교부받은 국고보조 예산 중에서 계속 연례적으로 이월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깎자 말자가 아니라, 이 대책 마련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제가 지금 정확한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시간이 그럴 것 같아서 제 발언 모두에 살펴서 질의에 대비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지원 대상 선정의 면에 있어서나 또 전문인력으로까지 이것이 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과정 인지 등에 대해서 굉장히 내용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검토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또 예산집행이 적절히 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한테 서면답변 좀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자료를 제대로 갖춰서 보완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甲潤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언제 제가 또 훌륭한 김성식 위원에게 베풀겠습니까? 한 2분쯤 더 하세요.

○김성식 위원 제가 늦게 와서 결례라서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배려 감사합니다.

……

○委員長 鄭甲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아시는 바와 같이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전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숙 위원 저는 방송통신위원장님과 시간이 되면 문화재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 제가 이 질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께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전혜숙 위원 지난번에 방심위에서 SNS 심의를 하는 뉴미디어정보팀을 신설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알고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소셜네트워크 심의를 전담하는, 이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예고했는데요. 이게 신설하는 이유는 음란물, 유해물 유통 문제를 들었습니다. 물론 신문, 방송보다 요즘은 인터넷에 먼저 접하기 때문에 이러한 심의가 대두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극히 사적인 영역인 건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그렇습니다.

○전혜숙 위원 본 위원이 SNS 심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통신심의위의 SNS 특히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월드, 미투데이 심의 시정요구가, 방심위가 요즘은 1회 심사 때마다 700건 정도 심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0.62%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전체 통신심의 건수가 SNS 통신심의 위반은 1%도 되지 않고요. 방심위가 이야기하는 음란물 심의 위반도 0.09%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SNS 심의 위반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신설 팀 자체가 필요 없다, 현재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사실 SNS가 지금 상당히 사용도 팽창하고 있고 현재 또 알다시피 11월 초에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자가 20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경이로운 숫자인데 내년 되면 아마 3000만 대까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수도 많아지면서 이용률도 엄청나게 많아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혜숙 위원 걱정은 다 되지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전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은 언론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전혜숙 위원 언론인 출신으로서 언론은 정권으로부터 독립 또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그런 소신은 갖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렇습니다.

○전혜숙 위원 그리고 정부의 기능은, 표현의 자유는 우리가 소중하게 존중하되 언론을 통제할 기능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그렇습니다.

○전혜숙 위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00만의 스마트미디어 시대가 왔지만, 기존 방송정책을 우리가 고려해 보고 손봐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SNS나 앱에 관해서는 아직 우리 사회가 개념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인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렇습니다.

○전혜숙 위원 세계적으로도 SNS에 대해서 통제하는 데는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렇습니다.

○전혜숙 위원 이게 뭐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규제부터 하자 이거는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게 심의위원회에서도 무슨 규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상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또 법률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이나 SNS의 내용은 일단 모니터링 해서 파악은 해 둬야 됩니다.

○전혜숙 위원 모니터링 팀은 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그것도 이제……

○전혜숙 위원 현재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꼼수다'가 정권에 약간 비판적 방송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도 이걸 규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SNS는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전혜숙 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SNS가 사적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랬습니다.

○전혜숙 위원 저는 방송통신위원장님의 그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일반 게시물 또 이런 SNS는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 게시물과는 다르게 이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SNS를 규제한다는 것은 바로 SNS의 사적관계를, 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공개적인 게시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태가 있었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해서 그때 그것을 삭감의견을 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심의위원회 측과 협의를 해서 전 위원님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해서 적절한 방침이 세워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예.

……

○委員長 鄭甲潤 전혜숙 위원, 훗날 저보고 원망하지 말고 1분 더 드릴게, 하세요.

○전혜숙 위원 고맙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예결위 이제 또다시 올해는 없습니다.

○전혜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인터넷 규제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고 국가 이미지만 위축시키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인 예로 인터넷실명제에 반발해서 유튜브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짧게, 문화재청장님.

○문화재청장 김찬 예.

○전혜숙 위원 제가 아차산의 보루를 가 봤습니다, 4보루. 복원을 했는데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또 홍련봉 1보루·2보루를 지금 복원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고증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구려 문화 같은 경우에는. 가서 고구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체험박물관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예.

○전혜숙 위원 그래서 청장님이 아차산 4보루를

한번 보시고요, 청장님이 현장을 열심히 다니시니까 가 보시고, 이건 정말 역사를 와서 직접 '고구려 문화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걸,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문화재청장 김찬 아차산이 저희 집 뒷산이라 자주 가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현장이나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유념해서 그것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홍련봉을 할 때는 그걸 좀 유념하셔서 볼거리가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청장 김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더 주셔서.

○委員長 鄭甲潤 미련도 후회도 없이 다 했습니까?

○전혜숙 위원 예.

○委員長 鄭甲潤 그동안 제가 너무 짜게 놀아서 미안합니다.

○전혜숙 위원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강창일 위원.

○강창일 위원 제주시갑 강창일 위원입니다.

미리 예고하니까 참 편한 것 같아요.

저는 국방부하고 법무부하고 문광부하고 시간되면 행자부에도 잠깐 질의할 게 있습니다.

우선 국방부장관 나와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강창일 위원 강정마을의 민·군 복합항 건설 문제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압니다.

○강창일 위원 잘은 모르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잘 압니다.

○강창일 위원 잘은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예결특위 내의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선행조건 제기한 것 아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다 읽어 보셨어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강창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있지요. 우선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야 되는 문제 하나, 알고 계세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강창일 위원 그다음에 민항과 군항이 공존하는 항구인데 15만t 크루즈 입·출항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군 측과 전문가들 사이의 의견이 다르니까 시뮬레이션 검증단을 만들자,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강창일 위원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만 민·군 복합항 건설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저희들 국회의 의견은, 예?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강창일 위원 그리고 민·군 복합항 만들게 된 정확한 의지를 갖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강창일 위원 해군기지만이 아니라 민·군 복합항 만드는 의지를 갖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민·군 복합항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러면 검증단 구성하기로 했는데 왜 지금까지 명단 안 내놓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문제는……

○강창일 위원 어영부영 어영부영 해서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났잖아요, 한 달.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잠깐만요, 제 설명을 일단 듣고 말씀하십시오.

○강창일 위원 이렇게 합시다. 시간 때문에 국방부 질문을 제일 나중에 미뤄야 되겠어요. 다른 것……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서요. 조금 이따가 합시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강창일 위원 좀 잘 준비해 주시고요.

법무부장관께 하나 여쭙겠는데요.

가정폭력상담소 금년도 2% 증액은 되었었는데 한 7년 동안 신규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신규로 지정을 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법무부장관 권재진 가정폭력상담소 말씀……

○강창일 위원 예, 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제대로 열심히 잘하는 곳이 전혀 7년 동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제주도 가정……

○법무부장관 권재진 가정법률상담소 말씀입니

까, 폭력상담소 말씀입니까?

○강창일 위원 가정폭력상담소.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강창일 위원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을 많이 하고 전국 2위가 되었는데 여기는 지금 계속 한번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 이번에 예산 증액되거든 잘하는 데 못 하는 데 구분해서 신규 지원들 해 주세요,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잘하는 데가 있으면,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다음 문광부장관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강창일 위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 건 말이지요, 문광부에서 130억 원을 반영을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90억만 반영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조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강창일 위원 우리나라 전통사찰이 전국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죄송합니다.

○강창일 위원 한 1000여 개 됩니다.

지금 전통사찰이란 것이 주로 산속에 있고 우리 고유 문화재거든요, 문화유산이거든요. 문화입국이라는 말 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강창일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자꾸 잘라 버려요? 문화입국, 우리가 선진 강국답게 문화를 가지고서 코리아 프리미엄도 좀 제고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차관님께서는 종교가 불교 아닙니까? 아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강창일 위원 예, 안 밝히는 게 좋아요.

그것 전통사찰에 대한 인식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 전통문화유산이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교 차원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게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께 말이지요, 강제동원노역자에 대한 보상금 문제, 한 70년 전에 1엔을 지금 2000원으로 환산해서 지급하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강창일 위원 그런데 행정법원에서……

위원장님, 마지막이니 시간 좀 주셔야지요.

○委員長 鄭甲潤 드려야지요.

○강창일 위원 이게 정당한 보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내렸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강창일 위원 이 보상금 이것은 시행령에 결정된 것 아닙니까? 법이 아니고 시행령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창일 위원 좀 현실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시행령 고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살펴보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실제는 물가상승률 등등을 비교할 때 1엔당 10만 원으로 잡아야 된다는 그게 지금 통설처럼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00원 해 버리니까 완전히 장난치는 것처럼 돼서 말이지요.

행정법원도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강창일 위원 국방부장관님, 그래서 말이지요, 빨리 검증단도 구성해야 되고……

○국방부장관 김관진 제주도하고 해군이 현재 그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이 협의가 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창일 위원 협의가 한 달 걸려요?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요. 우물우물 지나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니지요.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시행을 할 겁니다.

○강창일 위원 빨리 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예산을 줄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1000억 쌓여 있고 말이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문제는……

……

○委員長 鄭甲潤 마이크 안 넣는 게 훨씬 낫겠네. 그러나 마이크 1분만 더 넣어 드리세요.

○강창일 위원 그러니까 큰 소리가 나오잖아요. 마이크로 하면 작은 소리가 나오지요.

그래서 빨리 빨리 국회가 딱 끝나기 전에 해

주셔야 이 문제에서 민·군복합항 할까 말까 이 문제가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군은 가만히 앉아 있고 시간이나 가라 이런 자세입니까, 지금 뭡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이것은 07년도부터 추진했던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강창일 위원 금년도 9월 이후의 얘기 하세요.

지금 국회 예결에서 소위원회가 여러 가지 제시를 했는데 왜 그것을 시행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고, 해군하고 제주도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리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검증단 앞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강창일 위원 언제까지 하시려고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은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면 그 자체를 또 검증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민간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겁니다.

○강창일 위원 우리 국회는 말이지요, 이미 명단을 제출했어요. 가장 앞장서서 제출해야 될 게 해군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지금 명단을 제출 안 해서 우물우물 지나가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언제 하려고 그래요, 지금 국회가 다 끝나가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동결시킬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문제는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요.

○강창일 위원 선행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행조건.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은 선행조건이 아닙니다. 예산은 이미 공사가……

○강창일 위원 우리가 선행조건이라고, 국회가 선행조건이라고 했다니까. 국방부가 아니고 국회가……

○국방부장관 김관진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그 시뮬레이션하고 검증을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예산 결정되기 전에 해 주셔야 국회가 그 예산을 줄까말까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국회 의견이에요. 아시겠어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일단 제주도하고 해군하고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순서는.

○강창일 위원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빨리 빨리 하세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알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委員長 鄭甲潤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방부장관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없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다음은 한나라당 배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 위원 대구 중·남구 출신 배영식 위원입니다.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배영식 위원 오늘 일이 많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배영식 위원 지난 8월 23일 날 본 위원이 예결위 결산심사 종합정책질의 때 질의한 사항입니다.

대구 압산 밑에 미군기지 캠프워커 안에 헬기장이 하나 있습니다, H-805 헬기장. 그래서 그 헬기장을 1.4㎞ 동쪽 서쪽 나눠서 동쪽 700m는 지금 반환이 결정돼 가지고 금년 2월에 계약금 64억까지 지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쪽은 아직 반환 협상이 제대로 진척이 안 돼서 본 위원이 장관님께 강력히 추진해 주십사 해서 주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 기억이 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기억이 납니다.

○배영식 위원 그런데 헬기장 이 부분은 40, 50년간 주민의 한이 서려 있는 데입니다. 지금 소음에다가 개발제한에다가 또 엄청난 정신적 피해,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헬기장 이전 민간추진위원회 차태봉 회장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어른께서 주민들하고 엄청난 민원 제기하고 또 진정서를 넣고 한 이런 참, 그런 노력과 또 본 위원이 당선되자마자 모든 정성을 여기에 들여 가지고 이것을 추진했어요. 당시 총리, 국방부장관님을 수십 번 만나 가지고 추진한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이것 반환 대상에도 안

들어가 있는 건데 워낙 다급하고 시급하고 주민들이 더 이상 참기 어려워서 반환 대상에 넣어 가지고 지금 동쪽 700m, 7만 6871㎡는 반환을 받아서 진척이 잘되고 있는데 서쪽 700m를 받지 않으면 이게 아주 유명무실해져 버리거든요.

이게 대구 전체의 교통 흐름을 완전히 막고 있습니다. 3차 순환도로가 여기서 딱 막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장관님께서 정말 역점을 두셔서 밑에 지시하셔 가지고 추진이 제대로 되게끔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미군들이 협상테이블에 잘 나오지를 않아요. 휴가다 아니면 또 출장이다 아니면 바쁘다 이래서 우리 국방부에서 엄청난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셨고,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군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대체부지를 주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핑계로 해 가지고 잘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사실 저희도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미 측은 대체시설부지를 내놔라, 대구시에서는 너무 요구가 과도하다, 여기서 지금 협의가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이해당사자를 불러 가지고 저희가 더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배영식 위원 그냥 노력이 아니고 이것 추진하는 데 우리 민간추진위원회, 또 대구시, 우리 구청, 본 위원을 포함해서 죽을 고생을 해서 지금 이것 이만큼 해 놓은 겁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알겠습니다.

○배영식 위원 그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장관님께서 우리 주민들의 참 40년, 50년 그 피맺힌 한을 풀어주셔서 이 지역이 고도제한 개발제한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또 대구 전체의 교통이 여기에서 막혀 가지고 흐름이 막히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잘 알겠습니다.

○배영식 위원 예.

그러시고 아까 본질의 때 본 위원이 장관님께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남북 간의 대화가 제대로 안 되고 정말 경색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배영식 위원 또 북한이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엄청난 도발을 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방위력개선비가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보면 15%, 15%, 12% 죽 전년 대비 증가해 오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게 5.7%, 6.5%, 4.6% 이렇게 지금 굉장히 줄었어요.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도 이만큼, 십이삼%, 15%까지 방위력 증강을 시켰는데 지금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남북관계 대치 상황으로 볼 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안보를 팔아 가지고 복지를 산다라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무상복지, '무상' 시리즈 아닙니까? 복지를 팔아서 안보를 먼저 사고 그 안보 우산 밑에서 경제발전, 복지가 있고 그다음에 대외협력이 되고 하는 거지 안보를 팔아 가지고 복지를 산다라는 것,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에 지금 엄청난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생존권이 보장된 이후에 복지지, 그래서 이번에 국방위에서 소위 필수 장비, 무기……

마무리하겠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예.

○배영식 위원 국방부에서 필수 소요 무기, 예를 들면 지상레이더 표적지시기 그다음에 특수전 지원함, 특수 침투정, 다른 K-2 전차부터 해서 무기에 관련되는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소위 필수 무기는 좀 증액을 해야 된다, 예산을.

또 추가 소요되는 분하고 또 상시 소요되는 전투 예비 탄약, 이것 한 3000억 지금 국방위에서 증가를 시켜 놓았어요. 이것 해도 전년 동기 대비 7%밖에 안 됩니다, 이것 해도.

그래서 국방비 전체로 보면 2007년, 2008년, 2009년 거의 팔구%대에 왔지만 지금은 6%대에 거의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방위력개선비는 너무나, 반 이하로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지 않나 해서 장관님께서 정말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존경하는 배영식 위원님께서 제 생각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 대단히 고마울 뿐입니다. 힘을 받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영식 위원 이번 예결위 소위에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장관께서 온 정성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 현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나라가 있어야지 지역구가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다.

○배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甲潤 더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배영식 위원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甲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주승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위원 주승용 위원입니다.

기재부차관.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주승용 위원 이제 부처 심사를 마치면서, 예산안 심사하면서 한 가지 제가 느낀 것이 정말 기재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이라든지 부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얼마만큼 제대로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회의적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나름대로 연구를 해 가지고 요구를 하고 또 많은 위원들께서 요구하는 사항 같은 것에 대해서 말로만 검토를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국회에서 지적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없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 좀 도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것에 대해서는 소귀에 경 읽기와 같이 그냥 흘려서 검토하겠다는 이런 아주, 그런 식의 답변을 하고 말이지요.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그 문제도 여야가 만장일치로 상임위에서 4300억을 전액 삭감해 가지고 올렸고 또 그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우리 전 국회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박재완 장관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결위 회의장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한 사업을 이렇게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저는 국회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다시 검토하고 또 작년도 결산 시에 예산 감액해야 된다고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금년에 증액을 해서 편성한 사업이 69개나 되고 그 예산만 하더라도 15조 원이나 돼요. 오히려 증액을 한 예산이 한 2조 원 돼 버려요. 이것은 국회가 결산을 할 이유가 뭣 하러 있습니까?

저는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국회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문화부장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제가 말씀드려도……

○주승용 위원 예.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위원님, 저희들 답변…… 저희 장관이나 제가 답변드리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저희 직원들이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건별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나중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정리해서 검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전부 다 검토하고 있고, 관련되는 자료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승용 위원 인천공항공사 문제라든지 또 작년 결산 때의 문제가, 우리 국회에서 요구한 것이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검토야 하겠지요, 위원님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것을 검토 안 한다는 것이 아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저희들……

○주승용 위원 답변은 제가 듣고 싶지 않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관련되는 사항은 철저히 검토를 하고 또 받아들일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문화부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주승용 위원 국가브랜드위원회 이것 뭐하는 데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국가브랜드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려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제 성장을 했는데 국가브랜드는 낮기 때문에 그것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실……

○주승용 위원 사업 부처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위원회입니다.

○주승용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부처입니까, 주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부처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주승용 위원 종합계획을 세우고 관련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인데 직접 사업을 너무 많이 수행하다 보니까 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많아요. 국회에서 매번 지적을 했는데도 무시하고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총괄 조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처가 여러 개 관여되는 경우 또는 지방과 관련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마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

○주승용 위원 위원회의 목적을 보게 되면 주로, 이것은 사업을 하는 부처가 아니고 종합계획을 세우고 심의·조정, 권고·자문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봐요. 그런데 너무 직접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중복 부처가 많고……

예를 들자면 내년 예산 중에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홍보 강화사업 중에서 국가브랜드 종합전람회 사업예산, 20억인데요. 이것이 알아 봤더니 한 7일 정도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이에요. 좀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래서 그것을 상임위에서, 문방위 상임위원회에서 문화부의 해외홍보원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승용 위원 그러니까 문화부라든지……

시간 안 주십니까?

○委員長 鄭甲潤 드려야지요.

언제 또 제가 드리겠습니까?

○주승용 위원 고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급적 브랜드위원회는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고 문화부라든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해외문화홍보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많은 부처가 있는데 오히려 부처에다 분산해서 조정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곳이 브랜드위원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을 많이 참여시킬 것인가 그런 데 좀 중점을 둬야 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이런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도 그동안 많이 지적이 됐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문화부장관께서 감독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을 좀 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부처와 유사사업의 중복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甲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더 필요 없습니까?

다음은 한나라당 한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국방부장관님, 복지금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지금이 나오는 것은, 수익이 나오는 것은 제일 크게 나오는 것이 지금 군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나오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체력단련장……

○한기호 위원 그렇습니다. 체력단련장에서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직접 이용하는 PX(충성마트)에서 나오는 돈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복지금 전체 수입을 따져 보니까 전체가 한 7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그러면 병사들 몫이 얼마냐? 병사들이 낸 것이 한 44%, 간부들이 내서 돈 나온 것이 한 56%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병사들을 위해서 얼마나 쓰느냐 이것을 다시 봤습니다.

우선 마트, PX 낡은 것을 개선하는 데 50억 또 병사들이 운영하는 풋살 경기장을 쓰는 데 한 30억, 내무반 체육기구나 냉수기, 온수기를 구매해 주고 운영하는 데 77억, 그다음에 훈련 후 체육행사 이런 것을 할 때 쓰는 격려비가 189억, 이렇게 해서 합쳐서 346억을 씁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한기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장관님께서 명확하게 346억을 병사를 위해서 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병사들이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여기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방송을 듣고 있는 국민들께서 병사들 것을 뜯어다 간부가 쓴다라고 오해를 하신다는 겁니다.

명확히 해야 될 것은 군의 복지기금을 쓰는 우선순위는 병사를 우선대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리고 지금 간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간부들이 예비역까지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 예비역들까지 전부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체력단련장이나 이와 같이 콘도,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병사들 것을 뜯어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질의였고 옳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다. 현재 군인복지기금법에 의해서 복지기금은 복지사업으로 나오는 이런 수익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주로 나오는 루트가 간부들이 사용하는 체력단련장과 콘도 회원권 이런 데서 주로 나오고, 전방 장병들이 쓸 수 있도록 각종 풋살 경기장을 만든다거나 각종 체육기구를 산다거나 마트 보수비나 이런 것들은 주로 거기에서 나온 금액으로 충당을 많이 합니다. 단 병사나 간부나 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복지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호 위원 감사원장님, 제가 좀 질의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배추값이 폭등한 것 아시지요?

○감사원장 양건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 당시에 배추값이 군에서 납품가격은 킬로그램당 154원이었나 그랬습니다. 아, 540원. 540원이었는데, 실제로 한 포기에 얼마씩 했습니까? 한 5000원씩 했습니다. 열 배 이상 비쌌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다 농민들을 대신해서 이것은 엄청난 손해를 국민들에게 입히는 것이다, 따라서 가격을 재협상해야 된다, 법에 의해서 가격을 재협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을 재협상해서 농민들에게 추가로 79억 3000만 원이 나갔는데 이 돈이 나갔다고 지적을 하셨지요?

○감사원장 양건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말씀하시니까 맞는 말씀이시겠지요.

○한기호 위원 감사원이 왜 존재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주머니에 돈 채우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 돈 반납하라고 그러셨다면서요?

○감사원장 양건 제가 구체적인 그 감사 내용을 지금 기억하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질의서를 다 드렸는데 왜 못 보셨습니까?

○감사원장 양건 질의서를 못 받았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 밑의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는군요?

○감사원장 양건 글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기호 위원 질의서를 제가 다 드렸습니다.

올해도 지금 고춧가루 값이 또 올라서 문제가 됩니다. 자그마치 170억 원이 지금 모자랍니다, 고춧가루 값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170억을 더 주고라도 사야 김장을 담그고 병사들의 음식을 만드는 데 고춧가루를 넣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잘못됐다고 반납하라고 하실 겁니까?

○감사원장 양건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히 고추 값 재산정에 있어서 무슨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고, 또 적절한 요건이 충족되면 면책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요건에 충족된다면 재산정했다, 고추 값을 올렸다, 그래서 가격을 결정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책임지는 사유가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한기호 위원 그런데 벌써 불필요하게 정부예산을 낭비했다, 환수조치 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 이와 같이 지적을 하면서 지금 국방부 실무선에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감사원에서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경직된 사고 아닙니까?

○감사원장 양건 무조건 안 된다 뭐 그랬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그 사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다시 한번 봐 주셔서 특수성을 감안해야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사무총장입니다.

○한기호 위원 지역별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불균형한데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받으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시급성이나 필요성은 위원님 질의 내용과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이 필요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의 일부가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쪽 지역은 한 20년 동안 무상으로 지자체에 있는데 여건이 허락되면 이번에 예결위에서 신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甲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기호 위원은 예결위원 처음 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1분 더 드렸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홍일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표 위원 수고들 많으시고요.

통일부장관님,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 8일날 세계보건기구를 통해서 694만 달러 집행을 승인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그 지원 내용은 약품인가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것은 영유아 식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영유아한테 지원하는 의료……

○통일부장관 류우익 예, 영유아 지원……

○홍일표 위원 그것이 뭐 자금, 현금이 직접 북에 제공되는 것은 아니지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현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WHO에 정부에서 지원을 했던 것 중에 미집행액의 일부를 집행하도록 허용한 겁니다. 이미 돈이 가 있는 것을 그동안 집행을 중지해 놨던 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입니다.

○홍일표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집행하도록 했다가 집행을 중단시켰다가 다시 집행을 하도록 하니까 일각에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도 없는데 정부 입장이 바뀐 거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전혀 그렇지 않고요, 5·24 조치의 틀 안에서 북한의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 내용은 영유아들의 영양식이나 또는 백신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지금 백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신을, 약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도적 지원에서 남북관계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제 관계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5·24 조치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홍일표 위원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은 인도적 지원은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일반적으로 말하면 인도적 지원은 한다, 그런데 인도적 지원 중에 식량지원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지금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영유아나 임산부의 영양식 그리고 노약자를 지원하는 것이나 전염병 또는 결핵약, 간염 백신 이런 것들입니다.

○홍일표 위원 그러면 식량지원은 지금 식량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북한이?

○통일부장관 류우익 북한이 식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식량의 어려움이 지금 대단히 긴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직접적인 식량지원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식량지원을 전략물자라고 보고 있고, 그것이 천안함, 연평도 도발 이후에 그 도발에 대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그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이러한 무력도발이 남북관계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홍일표 위원 주질의 때도 제가 워싱턴에서 북한인권단체들 모여서 회의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연방 하원의원도 여러 명 왔었고 대북인권특사 로버트 킹 씨도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분들은 인도적 지원은 별개 문제다 하면서도 식량 문제에 관해서는 분배 투명성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렇습니다.

○홍일표 위원 우리 정부 입장도 그런 것입니까, 결국?

○통일부장관 류우익 우리 정부에서는 식량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는 하지 않고 있고 민간에서 라면이나 무슨 밀가루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그것이 보장되었을 때 지원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충남도청 이전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홍일표 위원 그 신축비 지원 예산이 '건축면적 중에 지상면적의 일부에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하주차장 설치가 빠졌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주차장 면적에 해당하는 건축비 630억을 증액한 1024억 원의 건축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남도청 이전할 때는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했는데 충남도청 이전할 때는 형평에 맞지 않게 제외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그 충남도청과 더불어서 경북도청 이전 관련 사항은 전남도청의 전례 그리고 또 세종시 건축기준 또 관련되는 내용을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법무부장관님, 오늘 무슨 모바일뉴스에 보니까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 검토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지난번에 성범죄 중의 일부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성범죄보다 중한 생명을 빼앗는 가장 중한 범죄인 살인죄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홍일표 위원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 검사징계위원회를 운영하시는데 징계위원이 검찰 측하고 외부인사가 지금 반반씩 있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렇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런데 반반의 의견이 똑같아서 결정을 못 할 때는 장관 의견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되어 있나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아직까지 지금 제가 장관직에 온 이후에, 제가 징계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징계위원회를 직접 운영해 본 적은 없고 아마 지금 대부분 의견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반반씩 나누어지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고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래서 그게 결국은 검찰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밖에서 볼 때는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언론이나 외부에서 검사징계위원회가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실제로 토의를 해 보면 오히려 외부위원들이 더 관대한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훨씬 더 엄격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일표 위원 그래요, 제 식구 감싸기를 안 하면서 형평에 맞게 운영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의견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참고로 하십시오.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잘 알겠습니다.

……

○委員長 鄭甲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는 분 있습니까?

오늘 질의자도 아니었는데 우리 강기정 간사님 이제 7일 일정을 모두 끝냅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만 하십시오.

○강기정 위원 대법원 행정처장님, 어제 정봉주 전 의원 여권 관련 발급 문제로 혹시 얘기를 나누어 보셨던가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강기정 위원 보고 좀 하셨던가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아직 연락을 못 했습니다.

○강기정 위원 계속…… 일정 때문에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강기정 위원 병무청장님, 어디 계십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예.

○강기정 위원 혹시 저, 요즘에는 축구선수…… 뭡니까? 아니, 운동선수, 운동선수 병역기피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예산이 내년 예산 중에 반영돼 있습니까, 혹시 그와 관련된?

○병무청장 김영후 예술·체육요원들 병역특례 문제가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할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내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든 지난 종합질의하고 부별질의를 통해서 지난 4년 중에 어느 때보다 더 진지한 정책질의 내지는 또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된 걸로 생각하고요.

이제 계수조정소위를 해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자료도 잘 안 와 있고 그래서 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싶습니다.

특히 국회가 결산을 올해 제 일정에 맞췄기 때문에 예산도 12월 2일에 맞춰야 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납득할 수 없는 예산이나 증빙되지 않은 예산은 어떤 형태의 것도 반드시 삭감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甲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윤석 간사, 연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질의 하셨는데, 이제 마치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張倫碩 委員 예산 이 회의에 적극 임해 주신 우리 동료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나흘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셔서 성실하게 예결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신 국무위원 또 정부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결산이 국회법에 따른 법정기간을 준수한 첫 사례가 됐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정책질의 3일 또 부별심사 4일도 거의 예외 없이 정시에 개회해서 진지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제 7일간의 예결위 전체회의 일정을 마치게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계수조정소위원회도 여야 간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예산도 헌법이 정한 법정기일을 준수하는 모범 예산결산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委員長 鄭甲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질의 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한기호 위원님, 곽정숙 위원님, 조전혁 위원님, 김영록 위원님, 오제세 위원님, 장제원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 정미경 위원님, 정수성 위원님, 박기춘 위원님, 김재경 위원님, 배은희 위원님, 백성운 위원님, 김성회 위원님, 여상규 위원님, 박병석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신학용 위원님, 임영호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정진섭 위원님, 주승용 위원님, 이종혁 위원님, 강창일 위원님, 장병완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배영식 위원님, 전혜숙 위원님, 강기정 위원님, 이군현 위원님, 장윤석 위원님, 장세환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박우순 위원님, 홍일표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지난 11월 7일부터 실시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소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장윤석 간사님, 강기정 간사님, 두 분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무위원과 각 기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과 서면질의의 내용까지 다시 한번 꼼꼼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국무위원 등 예산 중앙관서의 기관장과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의원보좌진, 속기사와 경위 직원, 미화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소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일정대로 11월 30일까지는 심사를 마치고 다시 만나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

○출석 위원(36인)

강 기 정	곽 정 숙	구 상 찬	권 경 석
김 성 식	김 성 회	김 영 록	김 용 태
김 창 일	김 태 환	박 기 춘	박 병 석

박우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신상진 안효대 여상규 오제세
이성헌 이정현 이종혁 임영호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혜숙
정갑윤 정수성 정진섭 조정식
주승용 진성호 한기호 홍일표

○출장 위원(1인)

신학용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종후
입법심의관 송대호
입법심의관 이창림

○국회측 참석자

사무총장 권오을
사무차장 구희권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국무총리실장 임종룡
특임장관직무대행 김해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상직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통일부
장관 류우익
차관 김천식
법무부장관 권재진
국방부
장관 김관진
기획조정실장 김광우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제1차관 김남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
기획조정실장 조현재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법제처장 정선태
국가보훈처
처장 박승춘
차장 우무석
기획조정관 이병구
병무청
청장 김영후
차장 권용덕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경찰청장 조현오
소방방재청장 이기환
문화재청장 김찬
감사원
원장 양건
사무총장 홍정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시중
부위원장 홍성규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사무처장 하철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사무총장 이종우
사무차장 문상부